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2025. 4. 11.(금) 14:00~16:30

중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신홀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2025. 4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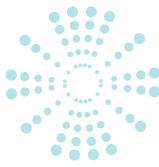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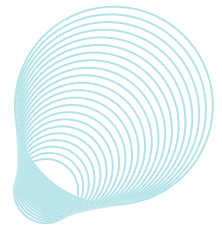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2025. 4. 11.(금) 14:00~16:30

중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신홀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 일시: 2025.04.11.(금) 14:00-16:30

◆ 장소: 중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신홀

◆ 주관·주최: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세부일정

[사회] 강낙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접수 및 등록
14:00-14:10	개회사 환영사 축사	양 오 봉(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학교 총장) 박 상 규(중앙대학교 총장) 오 석 환(교육부 차관) 참석자 소개
14:10-15:30	발표	[발표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남 수 경(강원대학교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발표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국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황 길 태(경북대학교 교수/기획처장)  [발표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수도권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박 태 준(한양대학교 ERICA 교수/지능형로봇사업단장)  [발표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지방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권 수 태(전주대학교 교수/교육부총장)
15:30-16:10	종합 토론	[좌 장] 송 기 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종합토론] 천 우 정 국회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훈 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 한 수 경기대학교 교수 조 인 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10-16:30	질의응답	참석자 및 청중 질의 응답
16:30	폐회	마무리 및 정리





# | 목 차 |

<b>[개회사]</b>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학교 총장	v
<b>[환영사]</b>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	vii
<b>[축 사]</b> 오석환 교육부 차관	ix
<b>[발표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b>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1
<b>[발표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국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b> :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황길태(경북대학교 교수/기획처장)	61
<b>[발표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수도권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b>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박태준(한양대학교 ERICA 교수/지능형로봇사업단장)	73
<b>[발표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지방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b> 권수태(전주대학교 교수/교육부총장)	89
<b>종합토론</b>	
<b>[좌 장]</b> 송기창(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b>[토론 1]</b>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25
<b>[토론 2]</b> 김훈호(국립공주대학교 교수)	131
<b>[토론 3]</b> 김한수(경기대학교 교수)	135
<b>[토론 4]</b>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41
<b>참고자료</b>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	147



## 2025년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개최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대학교 총장 양 오 봉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 내어주신 오석환 차관님, 교육부, 국회와 대학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등·평생특별회계도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강원대 교육연구소와 2025년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포럼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우리 대학들이 이룩한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국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를, 사립대학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으로 국가 경쟁력 선도”라는 비전 아래,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공교육비 확대, 지자체의 재정지원 비중 확대, 대학의 수입 구조 다각화라는 목표와 재정지원 확대, 전략적 배분 및 활용, 성과관리 혁신이라는 3대 재

정지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분들과,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대학교 총장 양 오 봉

##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환영사

중앙대학교 총장 박 상 규



존경하는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교육부 오석환 차관님 및 관계자와 귀빈 여러분, 중앙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을 저희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대학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등록금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포럼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의 성과를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로, 강원대 남수경 교수님, 경북대학교 황길태 기획처장님,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박태준 사업단장님, 그리고 전주대학교 권수태 교육부총장님께서 고특회계의 성과와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송기창 총장님을 좌장으로 천우정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공주대 김훈호 교수님, 경기대 김한수 교수님,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님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는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재정 확충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대학 재정의 안정화와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각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중앙대학교 총장 박 상 규



##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축하

교육부 차관 오 석 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2023년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양오봉 회장님, 이기정 부회장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남수경 회장님,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 현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해주실 경북대 황길태 기획처장님, 한양대 박태준 단장님, 전주대 권수태 교육부총장님, 교육위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님, 경기대 김한수 교수님, 공주대 김훈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시작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특회계 도입 전과 비교하여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순증하였고, 고특회계 규모도 약 16.4조 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확충된 재원을 활용하여,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대학의 여건과 발전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라이즈(RISE)’ 체계와 글로벌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이 본격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로봇공학,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장려금 확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가능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지원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자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육부는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를 확산하고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당국, 국회,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70%가 넘는 학생이 진학하는 우리 대학은 학생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학령기 의무교육을 거쳐 성장한 우리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도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11일  
교육부 차관 오 석 환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 1

발표자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 I. 서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정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교육 및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송기창, 2024).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는 정부의 공적 지원으로 대학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계에서 논의되어 온 교부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과 법정 재원의 일부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고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고특회계가 신설된 2023년 기준 약 9.74조 원 규모에서 2025년 예산안 기준 약 16.38조 원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증액된 예산 규모 안에는 기존 사업의 이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식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고특회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민희·최희용, 2024; 남수경 외, 2024). 그러나 고특회계 신설 이후 교육세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지원 규모가 순증되었으며(교육세 전출금 최근 3년 평균 약 1.98조 원), 순증된 예산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의 학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고특회계는 현행법상 존속기한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2025년까지 단기기간의 운영으로 일몰될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7~2036)」, 법정 중기계획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고특회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김민희·최희용, 2024; 남수경 외, 2024; 송지나·김도기, 2024; 원세림 외,

\* beableto@kangwon.ac.kr

\*\* 발표문은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원세림, 김용태 두 분의 연구교수님과 함께 작업한 결과임을 밝혀둡니다.

####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2023) 현행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특회계 도입 및 운영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는 크게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차원, 2) 고등교육 재정 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차원, 3)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확대에 따른 교육성과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정부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고특회계의 도입 경과와 의의를 정리하고 고특회계 도입 이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부문의 세입·세출 예산 변화와 사업별 재구조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특회계 도입 후 대학자율혁신 지원 사업비의 수혜 현황, 대학의 교육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의 변화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확대에 따른 교육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특회계로 예산 규모가 증액된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 자체 발전계획 기반의 자율 예산편성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수혜교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비의 교육·연구 및 여건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특회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II.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 성과

이 장에서는 고특회계 도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고특회계 도입 이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부문 예산의 변화를 토대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내용과 의의

#### 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경과와 주요 내용

고특회계는 20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치되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를 활용한 고특회계를 신설함으로써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의 교부 방식을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특회계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기존 논의되어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재원과 연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1)</sup>

고특회계의 설치 경과를 종합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고특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담아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혁신 및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하여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 즉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의 미래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직업 재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표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주요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22.07.	•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추진방향 발표(교육세 활용)
2022.08	• 기획재정부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재정제도 개혁-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2022.0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 추진 계획(안) 발표
2022.09.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발의(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09. ~2022.11.	•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의견수렴 - (2022.09.07.) 교육부-기재부 합동 토론회 - (2022.10.28.)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포럼 - (2022.11.04.)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 등
2022.1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2022.1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특별회계 설치

자료: 남수경 외(2024) 보완 및 재구성.

1) 2004년부터 지난 20년간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총 10차례 있었다. 재원 규모는 내국세 총액에 대해서 각각 8.4%와 10%를 제안한 것이 3회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 순으로 많았다. 교부금의 유형은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제안하였으며, 보통교부금의 경우 국립대학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있었다(남수경, 2022: 47).

##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고특회계 신설 계획이 발표되고 2022년 9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이태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며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특회계 재원의 규모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당초 「교육세법」의 제1조(목적)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국세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전액을 고특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격화되었고 고등교육 분야 역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고특회계 대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22년 1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며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세 중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전출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2023년 기준 최종 교육세 1.5조 원과 기존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약 9.74조 원의 고특회계 세입액이 확정되었다. 설치된 고특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 중에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조항을 통해 고특회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적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운영 여건의 개선을 지원하는 데 있다.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기타 차입금 등으로부터 확보한다. 이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100분의 50과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을 포함한다. 확보된 재원은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로 활용되며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사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의의

고특회계는 고등교육재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특회계 설치를 통해 공적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기관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증액된 예산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국립대의 노후 시설 및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지원되었다. 또한 첨단산업분야 등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및 사업비 지원, 지역의 위기 극복 및 상생을 위한 지방대학 지



원 확대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고특회계 도입 전후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연도별 10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약 12.1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고특회계 도입 이후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3.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약 14.7조 원, 2025년 15.8조 원으로 고특회계 도입 전인 2022년 대비 30.6%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2.44%에서 2022년 1.77%까지 정부 총지출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줄곧 감소해 왔으나, 고특회계 도입 후 2023년 2.15%, 2024년 2.23%, 2025년 2.34%로 매년 증가해왔다.

고등교육 영역별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고특회계 도입 후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된 영역은 국립대학운영지원과 대학역량강화(교육·자율) 영역이다. 국립대학운영지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약 1조 원 이상, 대학역량강화는 약 0.6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고특회계 도입 후 증액된 예산이 기관 단위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직업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연도별 1조 원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고특회계가 도입된 2023년 기준 약 1.5조 원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다. 평생·직업교육 영역별로 확인하면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영역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영역이다. 2019년까지 0.3조 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약 0.5조 원 이상, 2023년 기준 약 1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2〉 연도별 고등·평생·직업교육재정 지원 사업 영역별 재정지원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등 교육	장학제도 기반조성	1.93 (31.9)	2.88 (39.5)	3.78 (43.2)	4.12 (45.3)	4.04 (43.5)	4.13 (43.7)	4.21 (43.5)	4.13 (40.8)	4.18 (38.3)	4.19 (37.9)	4.91 (40.6)	4.89 (35.7)	5.09 (34.7)	5.71 (36.3)
	국립대학 운영지원	2.22 (36.7)	2.41 (33.1)	2.36 (27.0)	2.28 (25.1)	2.30 (24.8)	2.44 (25.9)	2.51 (25.9)	3.29 (32.4)	3.47 (31.8)	3.72 (33.6)	3.72 (30.8)	4.77 (34.8)	4.99 (34.0)	4.91 (31.1)
	대학 (교육/자율) 역량 강화*	1.38 (22.8)	1.50 (20.6)	1.74 (19.9)	1.60 (17.6)	1.89 (20.4)	1.83 (19.3)	1.88 (19.4)	1.42 (14.0)	1.95 (17.9)	1.89 (17.1)	0.54 (4.5)	0.62 (4.5)	0.50 (3.4)	0.22 (1.4)
												1.58 (13.1)	2.08 (15.2)	2.83 (19.3)	3.41 (21.6)
	학술연구 역량 강화	0.32 (5.2)	0.31 (4.3)	0.67 (7.6)	0.68 (7.5)	0.69 (7.4)	0.73 (7.7)	0.78 (8.1)	0.90 (8.9)	0.90 (8.2)	0.96 (8.7)	0.94 (7.8)	0.98 (7.2)	0.96 (6.6)	1.04 (6.6)

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타	0.21 (3.4)	0.18 (2.5)	0.20 (2.3)	0.41 (4.5)	0.36 (3.9)	0.32 (3.4)	0.31 (3.2)	0.40 (3.9)	0.41 (3.8)	0.31 (2.8)	0.39 (3.2)	0.37 (2.7)	0.31 (2.1)	0.47 (3.0)
	소계	6.06 (100.0)	7.28 (100.0)	8.74 (100.0)	9.09 (100.0)	9.27 (100.0)	9.45 (100.0)	9.70 (100.0)	10.14 (100.0)	10.91 (100.0)	11.07 (100.0)	12.08 (100.0)	13.70 (100.0)	14.67 (100.0)	15.76 (100.0)
평생· 직업 교육	산학연 협력 활성화	0.24 (43.7)	0.36 (44.1)	0.33 (58.4)	0.35 (57.8)	0.35 (54.0)	0.37 (52.8)	0.32 (41.2)	0.39 (44.9)	0.51 (50.0)	0.77 (67.3)	0.75 (63.9)	1.02 (67.8)	0.81 (64.4)	0.69 (59.8)
	국제 교육 협력 증진	0.07 (12.7)	0.08 (10.2)	0.09 (15.4)	0.09 (14.5)	0.10 (14.6)	0.09 (13.7)	0.10 (12.6)	0.10 (11.6)	0.11 (11.1)	0.13 (11.3)	0.13 (10.7)	0.14 (9.3)	0.16 (12.6)	0.15 (13.0)
	국립국제 교육원지원	0.07 (13.2)	0.08 (9.6)	0.08 (14.1)	0.08 (12.5)	0.09 (13.1)	0.09 (13.1)	0.09 (11.6)	0.09 (10.6)	0.08 (8.2)	0.10 (8.5)	0.12 (10.4)	0.13 (8.9)	0.15 (12.2)	0.17 (14.7)
	평생직업 교육체제구축	0.15 (28.2)	0.28 (34.8)	0.06 (10.0)	0.06 (9.1)	0.07 (10.8)	0.10 (14.0)	0.16 (20.1)	0.18 (20.5)	0.21 (20.5)	0.10 (8.5)	0.11 (9.8)	0.13 (8.9)	0.07 (5.7)	0.07 (6.3)
	공공연구성과 활성화 등	0.01 (2.3)	0.01 (1.3)	0.01 (2.1)	0.04 (6.1)	0.05 (7.4)	0.05 (6.5)	0.11 (14.5)	0.11 (12.4)	0.10 (10.2)	0.05 (4.3)	0.06 (5.3)	0.08 (5.2)	0.06 (5.1)	0.07 (6.2)
	소계	0.55 (100.0)	0.81 (100.0)	0.57 (100.0)	0.61 (100.0)	0.65 (100.0)	0.69 (100.0)	0.78 (100.0)	0.88 (100.0)	1.01 (100.0)	1.14 (100.0)	1.17 (100.0)	1.50 (100.0)	1.26 (100.0)	1.16 (100.0)
정부 총지출		323.3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656.6	673.3

주: 1) 2022년까지 결산 금액이며 2023년 이후는 본예산 금액임.  
 2) 대학역량강화 영역은 202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와 대학자율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분리됨.  
 3) 타 부처 예산이 일부 포함된 수치로 교육부 발표 예산안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4); 기획재정부(2025); 열린재정 정보공개시스템 2025.04.05.일자 조회.

##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변화

### 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후 세입 규모 변화

고특회계 도입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도 세입 규모는 <표 3>과 같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고특회계가 도입된 2023년 9.74조 원에서 2024년 15.74조 원, 2025년 16.38조 원으로 고특회계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다. 고특회계 재원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세 지원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023년 약 8.2조 원에서 2024년 13.5조 원, 2025년 14.2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2024년 기준 약 5.1조 원)이 일반회계에서 고특회계로 이관되며 2023년 대비 2024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교육세 지원분은 2023년 약 1.52조 원, 2024년 약 2.24조 원, 2025년 약 2.17조 원으로 연도별로 증감에 편차가 있다. 교육세 지원분은 국세 교육세에서 유특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고특회계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세 규모는 2024년 약 6.16조 원, 2025

년 6.04조 원으로 연도별 편차가 발생한 반면, 유특회계 전출분은 2023년 약 1.66조 원, 2024년 1.68조 원, 2025년 약 1.7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특회계로 전출되는 교육세 규모는 매년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a)	2024(b)	2025(c)	전년 대비 증감	
				b-a	c-b
총 일반회계 전입금(A+B)	9,742,730	15,742,668	16,377,257	5,999,938	634,589
일반회계 전입금(A)	8,222,813	13,501,256	14,208,244	5,278,443	706,988
교육세 지원분(B)	1,519,917	2,241,412	2,169,013	721,495	△72,399
(참고) 교육세 지원분(유특회계)	1,662,365	1,679,676	1,702,175	17,311	22,499

자료: 교육부(각연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특회계가 도입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크게 증액된 항목은 고등교육 부문의 국립대학운영지원 영역과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산학협력활성화 영역 등이 다(〈표 2〉 참고). 국립대학운영지원 영역의 경우 특히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항목이 약 0.5조 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항목이 약 0.3조 원 증액되었다.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항목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가 약 0.3조 원 증가하였고,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예산이 약 0.2조 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항목에서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이 약 0.3조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의 경우 대학혁신지원 항목이 약 0.4조 원 이상,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항목이 약 0.1조 원 이상 증액되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 항목에서는 일반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약 0.3조 원 이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약 0.1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활성화 영역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항목이 약 0.3조 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약 0.2조 원 이상,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이 약 0.05조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특회계 도입 전후 교육부 주요 세출 예산 변화(2022, 2023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내역	2022년(a)		2023년(b)		증감(b-a)
고등	국립대학운영지원	3,845,470		4,766,217		920,747
	국립대학 인건비	일반	1,740,611	고특	1,785,886	45,275
	국립대학 기본경비	일반	144,795	고특	150,045	5,25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일반	481,610	고특	992,286	510,676
	국립대학 시설확충	일반	768,720	고특	1,063,979	295,259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일반	644,474	고특	695,188	50,714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일반	65,260	고특	78,833	13,573
	대학자율역량강화	1,541,897		2,078,376		536,479
	대학혁신지원	일반	816,478	고특	1,481,605	421,127
		균특	244,00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일반	413,950	고특	528,690	114,740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일반	60,384	고특	60,384	0
평생·직업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	일반	7,085	일반	7,697	612
	산학협력활성화	774,161		1,018,940		244,779
	산학협력 기반조성	일반	2,992	일반	2,450	△542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일반	3,676	일반	6,456	2,780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일반	182,733	일반	150,215	△32,518
	학교기업지원사업	균특	6,672	고특	6,672	0
	전문대학 혁신 지원	균특	465,188	고특	738,310	273,122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균특	112,900	고특	114,100	1,200
	고등직업교육 활성화지원	—	—	고특	737	737

주: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예산 중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 증액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발췌 제시  
 자료: 교육부(각연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최근 3년간 고특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을 고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고특회계 기준 고등교육 부문의 총 사업비는 2023년 약 8.4조 원에서 2025년 약 15.5조 원으로 약 7.1조 원 증가하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분류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역량강화’ 예산은 2023년 약 0.6조 원 대비 2025년 0.2조 원으로 0.4조 원 감소하였고 고특회계 고등교육 부문 예산 대비 2023년 7.31%에서 2025년 1.42%로 감소하였다. 특히 영역 내에서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 세부 영역이 약 0.38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순감이 아닌 해당 세부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이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RISE)로 이관되고, 대학 창의적 실용화 지원(BRIDGE 3.0),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이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표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변화(2023~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내역	2023(a)	2024	2025(b)	증감(b-a)
세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	15,792,267	16,663,592	6,920,862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일반회계전입금)	9,742,730	15,742,668	16,377,257	6,634,527
	재산수입	—	3,088	9,348	9,348
	경상이전수입	—	40,109	150,000	150,000
	수입대체경비수입	—	6,402	6,045	6,045
	세계잉여금	—	—	120,942	120,942
세출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15,299,577	16,127,278	6,749,977
	고등교육	8,438,181	14,615,606	15,545,698	7,107,517
	대학교육역량강화	616,914	496,854	220,984	△395,930
	대학미래역량 강화	21,412	9,609	2,842	△18,570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	589,741	481,792	212,990	△376,751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5,761	5,453	5,152	△609
	대학자율역량강화	2,070,679	2,817,614	3,399,952	1,329,273
	대학혁신지원	1,481,605	2,232,510	2,817,130	1,335,525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8,690	524,684	522,478	△6,212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60,384	60,420	60,344	△40
	학술연구역량강화	984,371	964,300	1,042,854	58,483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	317,272	320,331	318,604	1,332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60,950	60,926	60,025	△925
	고전문헌 국역 지원	3,186	—	—	△3,186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	28,284	27,770	28,170	△114
	학술단체지원	6,745	12,249	12,282	5,537
	대학학술정책관련연구기획평가사업	731	—	—	△731
	인재정책기획관련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731	—	0
	이공학학술연구조성	538,367	514,695	595,800	57,433
	동북아역사재단 출연	17,626	15,672	16,045	△1,581

1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구분	내역	2023(a)	2024	2025(b)	증감(b-a)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11,210	11,926	11,928	718
	<b>국립대학운영지원</b>	4,766,217	4,990,608	4,905,142	138,925
	국립대학 인건비	1,785,886	1,825,887	1,872,672	86,786
	국립대학 기본경비	150,045	161,014	166,500	16,455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992,286	1,107,992	832,767	△159,519
	국립대학 시설확충	1,063,979	1,046,995	1,126,469	62,490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695,188	737,351	789,677	94,489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78,833	111,369	117,057	38,224
	<b>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b>	—	5,087,835	5,712,960	5,712,960
	한국장학재단 출연	—	367,382	407,913	407,91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4,720,453	5,305,047	5,305,047
	<b>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b>		258,395	263,806	263,806
	<b>평생직업교육</b>	<b>939,120</b>	<b>683,971</b>	<b>581,580</b>	<b>△357,540</b>
	<b>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b>	79,301	19,752	18,641	△60,660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79,301	19,752	18,641	△60,660
	<b>산학연 협력 활성화</b>	859,819	664,219	562,939	△296,880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737	737	767	30
	전문대학 혁신 지원	738,310	647,210	555,500	△182,810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114,100	9,600	—	△114,100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6,672	6,672	0
	<b>(타부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b>	<b>365,429</b>	<b>492,690</b>	<b>536,314</b>	<b>170,885</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7,890	109,206	109,206
	농림축산식품부	—	17,817	15,697	15,697
	산업통상자원부	—	15,926	5,700	5,700
	특허청	—	—	7,220	7,220
	고용노동부	365,429	411,057	398,491	33,062

자료: 교육부(각연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획재정부(각연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은 고특회계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2025년 기준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약 2.1조 원에서 2025년 약 3.4조 원으로 약 1.3조 원 증액되었다. 특히 ‘대학 혁신지원’ 세부 영역이 2023년 대비 2025년 약 1.3조 원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2025년부터 기존 사업(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지역혁신플랫폼, 지방대학활성화 등)을 RISE로 이관한 내역(약 2.0

조 원)이 반영되어있다. ‘학술연구역량강화’ 영역은 2025년 기준 고특회계 고등교육 부문 예산 대비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약 1.0조 원에서 2025년 약 1.0조 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국립대학운영지원’ 영역도 2023년 약 4.8조 원에서 2025년 약 4.9조 원으로 약 0.1조 원 규모 증가하여 증감이 크지 않았으며 2025년 기준 고특회계 고등교육 부문 예산 대비 약 31.6%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영역은 2024년도부터 고특회계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고특회계 고등교육 부문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36.8%이다. 2024년 약 5.1조 원에서 2025년 약 5.7조 원으로 약 0.6조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신설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약 0.9조 원에서 2025년 약 0.6조 원으로 약 0.3조 원 감소하였다. 이는 고특회계 평생직업교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영역(2025년 기준 약 96.8%)의 증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및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등의 사업이 고등교육 부문 ‘대학자율역량강화’ 영역 내 RISE로 이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특회계에는 교육부 예산 외에도 타부처 사업이 포함된다. 타부처 예산 규모는 2023년 약 0.4조 원 규모에서 2025년 약 0.5조 원 이상으로, 지원 부처 범위도 고용노동부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

#### 가. 재정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지방대학 중심 재정지원 확대

고특회계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체계의 변화이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 대학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학령기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미충원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방대학의 위기 심화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핵심으로 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기능 전환, 지역 내 특성화 영역에 따른 대학 간 역할 분담과 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고특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서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은 사업을 신설·확대 지원하였다.

〈표 6〉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국립대학 육성사업	4,580(+1,308)	5,722	4,243
지방대학·지방 전문대학 활성화사업	2,500 (신규)	3,125	RISE로 통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3,420 (+980)	3,420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신규)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LiFE)	510(+269)	51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900(+495)	900	

주: ( )는 전년대비 증액 규모 또는 신규 여부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2022년 대비 2023년 1.4배 확대하여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를 88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과 분야에 대해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및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가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광역·기초 지자체와 전문대학이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수요 맞춤 교육 및 지역 정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7〉은 2024년 기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원 현황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 기준 지자체가 일반대와 전문대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은, 각각 237교와 131교 대상 약 1.2조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약 1,55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1,233억원), 경남(1,047억원), 충남(1,023억원) 순으로 많았다. 세부 사업별로는 RIS(3,369억원), LINC(산학협력 일반대)(3,025억원), 지방대학활성화(2,375억원) 순으로 많았다.



〈표 7〉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시·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대 (전문대)	RIS	지방대 활성화	지방 전문대 활성화	LINC (산학 협력) (일반대)	LINC (산학 협력) (전문대)	HiVE (직업 교육)	LIFE (평생 교육)	합 계
서울	45교(9교)	—	—	—	42,689	6,125	5,580	596	54,990
부산	15교(8교)	31,206	30,029	6,908	36,282	8,003	7,380	3,498	123,306
대구	6교(7교)	26,410	6,803	11,145	9,380	10,404	5,580	3,821	73,543
인천	8교(3교)	—	—	—	5,679	3,801	—	1,762	11,242
광주	10교(6교)	15,766	13,524	6,432	17,040	1,801	5,220	919	60,702
대전	11교(4교)	17,781	15,709	4,445	21,847	4,918	—	660	55,325
울산	1교(2교)	15,032	13,881	2,677	4,183	3,318	1,800	628	41,519
세종	6교(1교)	4,128	3,674	1,075	2,101	2,001	1,620	—	14,599
경기	42교(32교)	—	—	—	20,107	17,323	10,620	5,711	53,762
강원	10교(6교)	34,819	20,706	2,588	17,645	4,034	7,200	2,114	89,106
충북	13교(5교)	36,023	12,623	1,959	9,985	2,201	3,420	3,472	69,683
충남	19교(6교)	19,831	38,630	4,333	25,685	4,202	7,560	2,012	102,252
전북	10교(7교)	26,991	15,856	5,343	17,141	5,519	5,760	5,389	81,998
전남	10교(9교)	20,870	4,226	4,883	10,265	5,008	7,020	6,762	59,034
경북	19교(14교)	26,410	47,973	12,255	40,542	8,830	10,620	9,242	155,872
경남	10교(10교)	29,839	13,866	9,399	17,746	10,155	10,620	3,082	104,743
제주	2교(2교)	31,808	—	1,558	4,183	3,801	—	734	42,084
계	237교 (131교)	336,914	237,500	75,000	302,500	101,444	90,000	50,403	1,193,760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또한 교육부는 2023년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RISE체계를 추진하였다.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으로 연계·통합하고,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특히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3년 7개 시·도의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전 지역의 기반 조성을 거쳐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서 RISE 체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재정지원사업을 RISE로 통합하여 2조 10억 원을 편성하였다(〈표 8〉 참고). RISE의 도입은 지역과 대학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대학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8〉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346,000	1,202,500	2,001,000	798,500	66.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346,000	1,202,500	1,704,651	502,151	41.8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144,300)	(201,001)	201,001	201,001	이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16,800)	(21,000)	21,000	21,000	이관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4,000)	(14,000)	14,000	14,000	이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7,100)	(25,800)	25,800	25,800	이관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5,198)	(5,998)	5,998	5,998	이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14,200)	(14,200)	14,200	14,200	이관
마이스터대 지원	(12,110)	(15,110)	4,750	4,750	이관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9,600)	(9,600)	9,600	9,600	이관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또한 2023년부터 RISE 생태계 속에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모델을 육성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대학30사업은 현재 대학의 평판이 아니라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현 계획을 갖춘 대학에 정부가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과감한 혁신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대학30사업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 차원의 단일적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 대학 재정지원

을 확대하는 재정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의 성과가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고특회계의 지속적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 나. 대학 생태계 변화 :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 촉진 지원

고특회계는 기존 사업에 대한 단순 사업비의 증액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운용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예컨대 일반재정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 단계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였다. 인건비나 경상비 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준 인건비 기본 25% → 30%로 확대, 경상비 10% 한도 내 편성 가능) 집행 불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여 증액된 예산을 대학의 교육·연구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고특회계를 바탕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비중을 확대하였고, 자체 노력에 대한 예산도 크게 증액함으로써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혁신을 도모하였다(〈표 9〉, 〈표 10〉 참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전공자율선택제’의 경우, 향후 대학별 특성에 맞는 모델링화를 통해서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전공 미스매치, 사회수요 미스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특회계의 도입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재정진단 등을 통한 재무 상태 파악 및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해 왔다.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 회생방안 또는 퇴로 제시와 함께 재정건전대학에 대해 선제적 구조개선 방안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경영자문 수행 및 사후관리로 사립대학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관리 및 사립대학에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구축·개선 및 활용을 통한 사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립대학의 자율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9〉 연도별 국립대학육성사업 배분 기준 비교

구분	1주기			2주기	
	2020	2021	2022	2023	2024
유형별 배분 비중	거점국립대 60%, 그 외 국립대 40%로 배분			거점국립대 50%, 국가중심대 42% 교원양성대 8% 배분	
사업비 규모	1,491억 원	1,491억 원	1,491억 원	4,568억 원	5,722억 원
① 포물러 배분	70%	70%	70%	60%	40%(2,184억 원)
산출방식	기준경비 × 규모지수 × 조정 상수				
기준경비	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유형별 학생당 교육비 평균 - 대학별 등록금 (2020~2021년의 경우 지역중심대)				
규모지수	$\sqrt{\text{재학생 수(학부정원 내 재학생 수 기준)}} + \sqrt{\text{전임교원 수}}$				
조정상수	(유형별 총 예산액 / ∑ (기준경비 × 규모지수))				
② 포물러 배분 (기회균형)	—				100억 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수 고려)
③ 인센티브	20%	20%	15%	40%	60%
산출방식	기준금액(포물러 산식 적용) × 등급가중치 × 조정상수				
등급 가중치	(A) 1.2 (B) 1.0, (C) 0	(A) 1.2 (B) 1.0, (C) 0	(A) 1.2 (B) 1.0, (C) 0	(S) 1.3 (A) 1.0, (B) 0.7, (C) 0	(S) 1.6 (A) 1.3, (B) 1.0, (C) 0.7
④ 네트워크 활성화	10%	10%	15%	—	

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연도별 배분 기준의 통일성 및 구체적 배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이후를 중심으로 비교함.

자료: 교육부(각연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표 10〉 연도별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 사업비 배분 기준 비교

구분		1주기			2주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형별 배분 비중		5개 권역별 배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수(50%) 고려 배분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총 사업비(1 유형)		5,300억 원	5,994억 원	6,540억 원	7,350억 원	8,057억 원	8,852억 원
대상		국·공·사립·국립대 법인				사립, 국립대법인, 공립 (국립대는 국립대육성사업)	
	❶ 포물러	100%	70% 이상	70% 이상	86% 이상	70%	50%(4,210억 원)
	산출방식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기준경비×규모지수×교육여건 (2022년의 경우 적정규모화 지원금 고려)		
	기준경비	학생당 교육비 평균액					
	규모지수	√학부 재학생수					
	교육여건	재학생총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을					재학생총원을, 교육비환원을,
	조정상수	(지원 예산 총액 / Σ (기준경비×규모지수×교육여건))			사업비 조정 (정원의 선발, 타사업 집행율)	—	—
	❷ 포물러 (기회균형)	—					200억 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수 고려)
	❸ 인센티브	—	30% 이내	30% 이내	14% 이내	30%	50%
	산출방식	—	포물러×등급가중치 ×지역가중치 ×조정상수		적정 규모화 지원금 (1,000억 원) 선제적 감 축 및 미충 원분 감축 지원금	포물러× 성과평가 가중치× 권역 보정상수	권역별 배분, 지표별 배점, 포물러 및 성과평가 등급
	등급 가중치		A(1.2) , B(1.0), C(미지급)			A(1.3), B(1.0), C(0.7)	A(1.3), B(1.0), C(0.7)
	지역 가중치		지역강소(1.5), 그 외(1.0)			A등급 중 지역 강소 (1.5)	지역 강소 대학 S등급(1.8), A등급(1.5)

자료: 교육부(각연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다. 미래 수요 대응 역량 강화 :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교육을 거치고 입학하는 역량있는 학생들을 미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의 대학은 급격한 변화에 맞춰 발빠른 교육·연구 시스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여전히 대학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성, 2025).

반면 대학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보수, 관리 운영비 등 고정비 비중이 5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수입 감소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고정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고정비 지출 비중의 확대는, 대학의 연구활동, 학생 지원 활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투자 지출과 연구비 및 학생 경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특회계 도입 이후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연구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표 11〉 참고).

〈표 11〉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사업

(단위: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1,443(+553)	2,010(+567)	2,010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신규)	630(+480)	660(+30)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540(신규)	1,175(+635)	1,167(▲8)
4단계 두뇌한국21	5,287(+1,147)	5,247(▲40)	5,225(▲22)
인문사회 기초연구	2,414(+531)	2,489(+75)	2,570(+81)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5,290(+101)	5,116(▲174)	5,930(+815)

주: ( )는 전년대비 증액 규모 또는 신규 여부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먼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을 확대되어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혁신융합대학 지정하고, 신기술 분야(첨단 신소재,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에 대한 추가 지정이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

육과정 개발·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특회계 도입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신설되었고 대학과 161개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159개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몰입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 교육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여건과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별 대학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실험실습 장비를 구축하고 교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과 더불어 융복합 학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9월부터 7년간, 연간 4,080억원 규모로 1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4단계 BK21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4단계 BK21 사업 예산을 고특회계로 이관하고, 예산 규모를 연간 기존의 4,081억에서 5,261억(+1,180억)으로 크게 증액하였다.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상위권 연구단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 인재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IMD 대학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대학의 연구 관련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학교육지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며(〈표 12〉 참고),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특히, BK21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및 참여 인력의 연구역량은 BK 사업 시행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표 12〉 IMD 세계국가경쟁력평가에서 대학경쟁력 관련 지표별 점수와 순위

단위: 순위(점수)

구분	교육경쟁력 세부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분야 우리나라 순위/참가국 수		25/63	30/63	27/63	30/64	29/63	26/64	19/67
정량	GDP대비 정부재원 총 교육비	27 (5.1)	22 (5.0)	36 (4.3)	38 (4.3)	42 (4.5)	26 (5.2)	30 (4.8)
	학생 1인당 정부재원 총 교육비*	—	27 (6070)	27 (5842)	26 (6900)	24 (7725)	24 (8953)	26 (8272)

구분	교육경쟁력 세부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3 (70.0)	3 (69.8)	4 (69.6)	4 (69.8)	4 (69.8)	4 (69.3)	4 (69.6)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	46 (1.07)	45 (1.21)	44 (1.38)	41 (1.64)	40 (1.91)	40 (2.15)	40 (2.39)
	대학교육지수*	—	24 (35.12)	19 (18.88)	20 (17.81)	20 (15.38)	22 (14.65)	12 (21.28)
정성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 정도)	49 (4.84)	55 (4.38)	48 (5.30)	47 (5.23)	46 (5.21)	49 (5.36)	46 (5.88)

주: 1) ( ) 안은 지표값임.

2) \*는 2019년 추가된 신규지표임.

3) 대학교육 지수(University Education Index)는 Times Higher Education(TH) 대학순위를 기반으로 산출함. 해당 국가에서 THE 순위 포함 대학 수 33%, 총점수 33%, 1인당 총 점수 33%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함.

4)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정도)은 글로벌리더 대상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각 년도).

〈표 13〉 석·박사학위 취득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94,741	95,342	97,921	97,532	97,445	99,185	96,450	101,629	101,353	106,661
석사	81,664	81,460	83,605	82,858	82,137	83,046	80,030	83,369	83,680	87,947
박사	13,077	13,882	14,316	14,674	15,308	16,139	16,420	17,760	17,673	18,714

주: 전년도 8월 및 해당연도 2월 졸업자의 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또한 대학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학 내 연구소를 총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과·전공 칸막이 없는 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과제 중심의 R&D에서 대학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역량과 특성화 전략에 따라 연구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공계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학문 후속세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지방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회 교육·연구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인문사회에 기반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을 신규로 지정하여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라. 고등교육 기회 확대 :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속적인 수혜자 학비 부담 경감

중앙부처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는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의 4개 사업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부터 고특회계로 편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846억원(12.5%) 증액된 5조 3,05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표 14〉 참고).

〈표 1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편성 내역

구 분	2023	2024	2025
①국가장학금 지원	4,030,777	4,097,498	4,485,299
②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76,445	469,125	627,442
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56	57,626	57,827
④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9,338	94,184	97,963
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2,020	—	—
⑥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	34,435
⑦운영비	—	2,020	2,081
계	4,566,436	4,720,453	5,305,047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2012년부터 도입된 국가장학금사업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서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 사업 도입 당시 3구간 이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소득지원 구간이 확대되고 단가도 개선되어, 2025년에는 학자금지원 9구간에 대해서도 100만원(상한액)이 지원되는 구조로 확대되었다(〈표 16〉, 〈표 17〉 참고).



구 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 24	첫째, 둘째	전액	570			480			450		
	셋째이상		전액								
’ 25(안)	첫째, 둘째	전액	570			48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9구간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2025년부터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응하고 2022년 이후 8구간에 대해 지원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지원 절벽을 고려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97).<sup>2)</sup> 2024년 교육비부담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산층 이상 가구의 65% 이상이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지원 확대는 중산층 가구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18〉 참고). 특히 2025년부터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총 교육비(Cost of Attendance)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표 14〉 참고).

다만, 최근 들어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97-98). 특히,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8〉 가구주 연령 및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2024
전체		79.8	78.4	73.0	69.3	65.3	64.4	64.1	57.7	57.7	60.9
가구주 연령별	30-39세	71.9	72.5	63.8	61.7	56.9	55.9	56.5	46.1	46.1	46.1
	40-49세	82.7	79.8	73.2	68.8	67.2	66.5	64.4	58.4	58.4	62.3
	50-59세	82.6	79.7	76.7	73.4	65.1	64.1	66.9	60.8	60.8	62.9
	60세 이상	74.9	75.4	77.4	70.4	64.2	65.1	59.6	53.2	53.2	60.4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2.1	84.6	81.9	71.3	68.3	69.4	66.2	64.4	64.5	53.7
	100-200만원 미만	83.0	82.4	78.0	74.7	76.5	73.1	75.1	64.6	64.7	67.9

2) 학자금 지원 9구간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구분과 비교하면 6~8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균 재산 4억 6,225만원, 평균 소득 645만원 수준이다(교육부 내부자료).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2024
200-300만원 미만	82.3	82.8	77.8	73.5	72.2	70.3	70.4	60.6	60.6	59.0
300-400만원 미만	79.5	77.7	73.4	69.7	65.6	66.4	65.9	65.5	65.5	65.2
400-500만원 미만	78.8	75.2	70.9	70.8	64.1	66.0	65.5	58.3	58.3	65.3
500-600만원 미만	74.6	72.8	63.8	66.3	59.4	63.2	62.9	56.1	56.1	64.0
600만원 이상	67.1	63.8	57.8	57.0	52.9	53.9	54.6	51.3	51.3	56.3

주: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약간 부담스럽다'와 '매우 부담스럽다' 응답자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한국의 사회지표 교육비부담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83&upCd=4>

### Ⅲ.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후 대학의 교육 운영 및 여건 변화

이 장에서는 교육부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교육여건 및 운영 등의 변화와 성과를 확인하였다.

#### 1. 대학 유형별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고특회계를 통해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기관 단위 지원에서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은 대학자율역량강화와 국립대학운영지원이며, 각각의 대표 사업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운영 여건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특회계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고특회계를 통해 증액된 예산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고특회계 도입 이후 사업비 수혜 현황 및 수혜교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다.

##### 가. 국립대학의 수혜 실적

국립대학의 경우 2022년까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각각 지원받았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국립대에 대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합산액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

면 <표 19>와 같다. 사업비 수혜 규모를 보면 2019년 약 0.27조 원에서 2024년 0.59조 원까지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특히 2022년 약 0.31조 원에서 고특회계가 도입된 2023년 약 0.4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9〉 국립대 기준 일반재정지원사업비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학교 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액	교당 평균
소재지	수도권	5	19,380 (8,708)	19,816 (9,882)	22,572 (11,102)	22,989 (11,626)	39,520 (1,528)	43,163 (2,168)	8,633
	비수도권	31	250,966 (114,399)	257,943 (128,544)	277,697 (142,633)	287,555 (152,106)	431,220 (17,711)	543,151 (21,750)	17,521
유형	교육대학	10	22,474 (12,286)	21,456 (11,415)	22,843 (11,139)	24,290 (11,766)	33,546 (0)	40,866 (0)	4,087
	일반대	26	247,872 (110,821)	256,303 (127,011)	277,426 (142,596)	286,253 (151,965)	437,193 (19,238)	545,448 (23,918)	20,979
규모	소규모	15	43,518 (23,417)	42,764 (23,195)	45,305 (22,661)	49,673 (26,288)	74,458 (1,070)	97,514 (1,015)	6,501
	중규모	10	70,946 (35,375)	73,653 (40,301)	84,119 (48,618)	87,329 (50,694)	132,082 (3,370)	163,056 (4,038)	16,306
	대규모	11	155,882 (64,315)	161,343 (74,931)	170,845 (82,456)	173,542 (86,750)	264,199 (14,798)	325,744 (18,865)	29,613
계		36	270,346 (123,107)	277,759 (138,426)	300,269 (153,735)	310,544 (163,732)	470,739 (19,238)	586,314 (23,918)	16,287

- 주: 1) 특별법인 및 특별법국립대학교 제외, 산업대 및 방송통신대, 폐교 제외  
 2) 한국복지대학교는 한경대학교와 통합으로 2022년까지 사업비 수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와 통합으로 2020년까지 사업비 수혜  
 3) 국립대학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 사업 진행으로 사업비 규모에 큰 차이가 있고(800억 수준),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합산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사업비 수혜 현황을 2019년도부터 제시함.  
 4) 2023년부터 국립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이관됨. 국립대학의 재정지원 수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육성사업비의 합산액으로 제시함. ( ) 안은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로, 2022년 이후 금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2유형 수혜액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재구성.

대학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업비 배분 시 재학생 및 전임교원 수 등의 규모 여건을 반영하므로 소규모 대학의 2024년 교당 경비는 평균 약 65억 원, 중규모 대학은 약 163억 원, 대규모 대학<sup>3)</sup>은 약 2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으로 분류되는 교육대학

3) 대학 규모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재학생 수 5,000명 미만을 소규모

의 경우 2024년 교당 경비는 평균 약 41억 원이며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은 대부분 중·소규모이므로 2024년 기준 평균 약 86억 원의 교당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수혜 실적

다음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받는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 실적을 분석하였다. 일반대학 160교를 기준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 여부 기관 현황은 <표 20>과 같다. 160교 중 1주기(2019-2021년) 및 2주기(2022-2024년) 모두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101교였다. 사립대 6교는 1주기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2주기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14교는 1주기에는 사업비를 받지 못했으나 2주기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립대 39교의 경우 1주기 및 2주기 모두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약 85%는 소규모 대학이었다.

<표 20>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혜 기관 현황

(단위: 교)

구분		미수혜	1주기 (2019-2021) 한하여 수혜	2주기 (2022-2024) 한하여 수혜	1주기, 2주기 (2019-2024) 연속 수혜
설립유형	공립	—	—	—	1
	국립대법인	—	—	—	2
	사립	39	6	14	98
소재지	수도권	15	4	5	46
	비수도권	24	2	9	55
대학 규모	소규모	33	5	12	20
	중규모	5	1	2	43
	대규모	1	—	—	38
계		39	6	14	101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재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고특회계를 통해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1주기·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모두 지원받은 101교를 중심으로 사업비 수혜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21> 참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019년 약 0.43조 원에서 2022년 약 0.57조 원까지 연도별 증가하였으며, 고특회계가 도입된 2023년 약 0.82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기준 약 0.90조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을 중규모 대학, 10,000명 이상을 대규모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표 21〉 연도별·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학교 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액	교당 평균	
설립유형	공립	1	4,464	4,030	5,756	6,214	10,012	11,391	11,391	
	국립대법인	2	11,084	13,937	14,733	17,226	27,854	26,669	13,335	
	사립대	98	410,579	468,270	499,648	545,283	778,051	866,390	8,841	
대학 규모	소규모	20	52,412	58,999	63,539	65,329	96,591	100,834	5,042	
	중규모	43	162,954	183,485	197,424	240,585	298,973	318,991	7,418	
	대규모	38	210,761	243,753	259,175	262,810	420,354	484,625	12,753	
소재지	수도권	소규모	6	15,448	15,180	17,779	19,270	28,216	27,983	4,664
		중규모	18	67,485	74,511	83,328	88,012	126,450	144,578	8,032
		대규모	22	127,320	150,072	158,991	156,202	267,817	297,137	13,506
		계	46	210,253	239,762	260,098	263,484	422,483	469,698	10,211
	비수도권	소규모	14	36,964	43,819	45,760	46,059	68,375	72,851	5,204
		중규모	25	95,470	108,974	114,095	152,573	172,523	174,413	6,977
		대규모	16	83,441	93,681	100,184	106,608	152,537	187,488	11,718
		계	55	215,874	246,475	260,039	305,240	393,435	434,752	7,905
계		101	426,127	486,237	520,138	568,724	815,917	904,450	8,955	

주: 1) 특별법법인 및 특별법국립대학교 제외, 산업대 및 방송통신대, 폐교 제외

2)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본분교 각각 수혜 받은 경우 개별 단위로 분석), 2024년 교당 경비 산출 시 사업비 미수혜교 제외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재구성.

대학 규모와 소재지를 고려하여 대학 유형별로 사업비 수혜 규모를 살펴보면 고특회계 도입 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소규모·중규모 대비 대규모 대학의 사업비 증액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전 교당 평균 금액은 약 70억 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고특회계 도입 후 평균 2023년 약 122억 원, 2024년 약 135억 원까지 약 두 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소규모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대학의 연도별 교당 평균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규모 대학의 경우 고특회계 도입 이전인 2022년까지는 비수도권 중규모 대학의 교당 평균 금

액이 더 높았으나 2023년부터 수도권의 교당 평균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중규모 대학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중규모 대학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교당 금액의 격차는 약 7천만 원 정도였으나, 2024년 기준 약 11억 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1주기 및 2주기 사업비를 지원받은 101교를 중심으로 2주기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 집행 계획을 확인하여 투자 영역을 분석하였다(〈표 22〉 참고). 분석 결과, 수혜교는 2주기 평균 교육 영역(69.3%)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운영 및 관리(12.7%), 기타(11%), 산학협력(3.4%), 연구(3.3%), 평생교육(0.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70.1%), 사업운영 및 관리(10.2%), 기타(9.8%), 연구(5.2%), 산학협력(4.4%) 순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68.4%), 사업운영 및 관리(15.1%), 기타(12.0%), 산학협력(2.5%), 연구(1.5%)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 및 관리 비중이 높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 투자하는 재원 비중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낮았다.

〈표 22〉 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영역별 투자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		2023		2024		2주기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46교)	교육	159,321	71.1	248,908	69.1	242,916	70.6	651,145	70.1
	연구	14,931	6.7	17,113	4.8	16,076	4.7	48,120	5.2
	산학협력	10,728	4.8	14,852	4.1	15,353	4.5	40,933	4.4
	평생교육	678	0.3	799	0.2	803	0.2	2,281	0.2
	사업운영 및 관리	14,492	6.5	42,850	11.9	37,128	10.8	94,470	10.2
	기타	23,970	10.7	35,527	9.9	31,893	9.3	91,390	9.8
	계	224,122	100.0	360,049	100.0	344,168	100.0	928,338	100.0
비수도권 (55교)	교육	177,858	72.5	271,737	66.2	236,695	68.3	686,290	68.4
	연구	3,737	1.5	5,463	1.3	5,571	1.6	14,771	1.5
	산학협력	8,324	3.4	8,506	2.1	7,812	2.3	24,642	2.5
	평생교육	1,332	0.5	1,996	0.5	1,918	0.6	5,246	0.5
	사업운영 및 관리	20,706	8.4	70,815	17.2	59,982	17.3	151,503	15.1
	기타	33,327	13.6	52,242	12.7	34,643	10.0	120,211	12.0
	계	245,283	100.0	410,759	100.0	346,622	100.0	1,002,664	100.0



구분		2022		2023		2024		2주기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1교)	교육	337,179	71.8	520,645	67.5	479,611	69.4	1,337,435	69.3
	연구	18,668	4.0	22,576	2.9	21,647	3.1	62,891	3.3
	산학협력	19,052	4.1	23,358	3.0	23,165	3.4	65,575	3.4
	평생교육	2,010	0.4	2,796	0.4	2,721	0.4	7,527	0.4
	사업운영 및 관리	35,198	7.5	113,665	14.7	97,110	14.1	245,973	12.7
	기타	57,297	12.2	87,769	11.4	66,536	9.6	211,601	11.0
	계	469,405	100.0	770,808	100.0	690,790	100.0	1,931,002	100.0

주: 사업 수혜 대학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2022년은 사업비 집행액, 2023년 이후는 사업비 집행 계획으로 실제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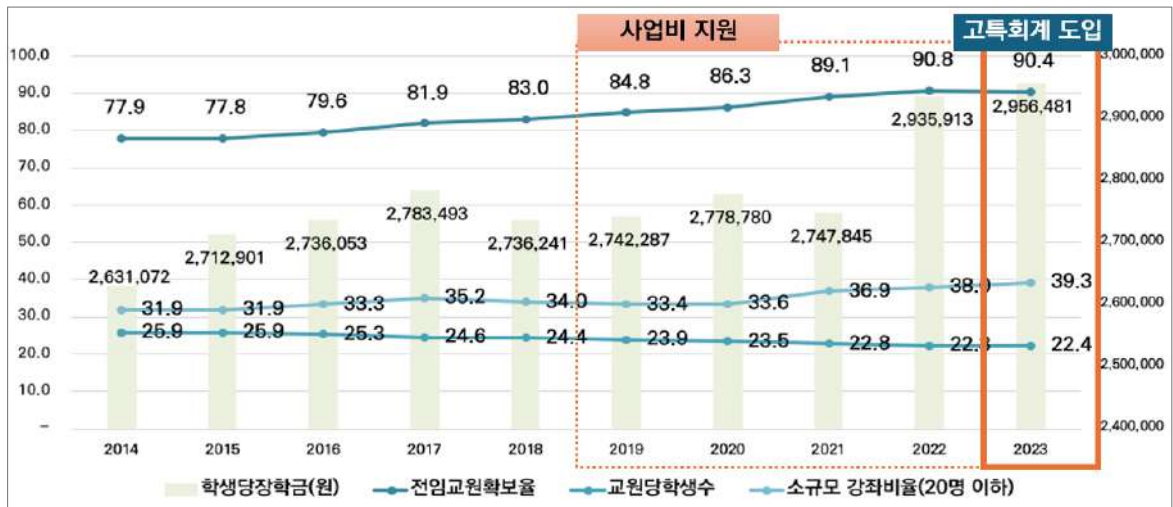
자료: 대학별·연도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2.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변화 추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9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 연도별 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 관련 주요 투입 및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남수경 외(2023)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입 지표로 전임교원확보율, 교원당 학생수, 학생당장학금, 학생당 교육비, 소규모 강좌의 비율 등을, 산출 지표로는 중도탈락비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활용하였다.

### 가.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변화 추이

먼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투입 지표(전임교원확보율, 교원당 학생수, 학생당장학금, 학생당 교육비, 소규모 강좌의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확대되는 기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수의 감소와 교원 수의 증가 등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2023년 기준 약 90.4%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강좌의 비율 중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교원당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학생당 교내·외 장학금의 경우 2014년 약 263만 원 규모였으나, 2023년 약 296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업비가 확대된 2022년과 고특회계가 도입된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투입지표 변화

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교대 및 일반대 37교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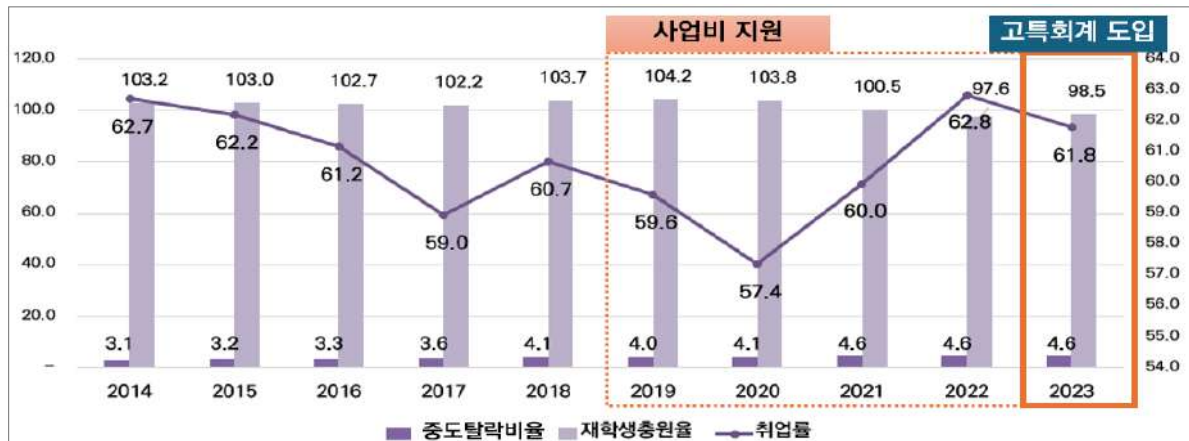
학생당 교육비가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특히 사업 운영 이후와 고특회계 도입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당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 운영 이전인 2012년 약 1,255만 원에서 2018년 약 1,542만 원으로 287만 원 증가하였으나, 사업 운영 시점인 2019년 약 1,821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고특회계 도입 시점인 2023년 기준 약 2,518만 원으로 약 697만 원 증가하였다.



[그림 2] 국립대학의 연도별 학생당 교육비 변화

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교대 및 일반대 37교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다음으로 산출 지표(중도탈락비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활동 개선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연도별 중도탈락비율은 소폭 증가 및 정체 수준이며 재학생 충원율 역시 2023년 기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연도별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의 경우 연도별 감소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산출 지표의 경우 투입 지표와 달리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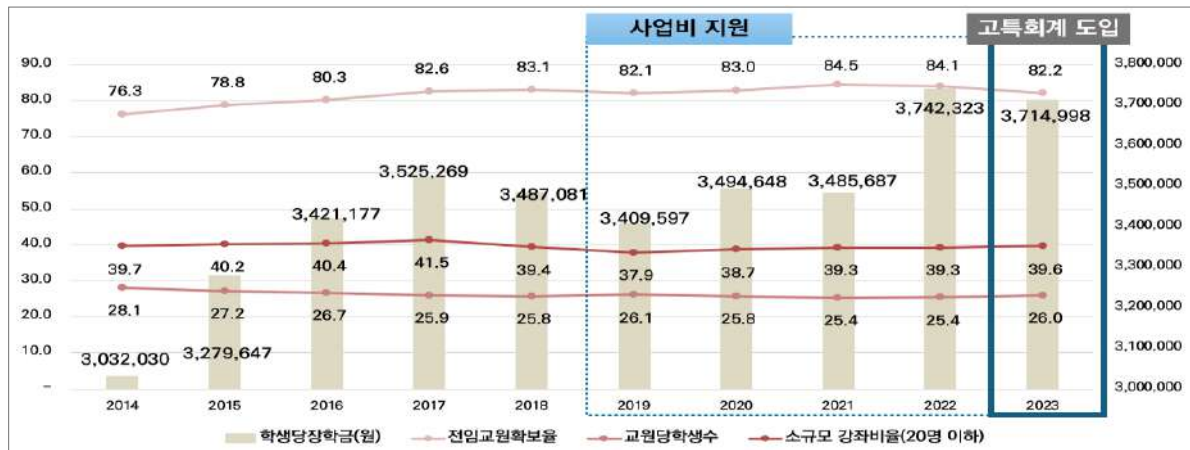
[그림 3] 국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산출지표 변화

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교대 및 일반대 37교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 나.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변화 추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학생당 장학금을 제외한 투입 지표의 경우 국립대학과 달리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후 정체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도별 전임교원 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재학생 수는 감소함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이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교원당 학생 수 또한 장기간 25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학기에 운영되는 소규모 강좌의 비중도 39%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감소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업비 증액 및 고특회계를 통해 국가장학금 규모도 확대되며 학생당 교내·외 장학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약 353만 원 수준에서 2019년 341만 원까지 감소하다가 사업비가 확대된 2022년 약 37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 사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투입지표 변화

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일반대 96교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학생당 교육비의 경우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고특회계 도입 전후 크게 개선되었다. 일반재정 지원사업 초기까지 약 1,500만 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 수준이었으나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2022년 및 고특회계 도입 시점인 2023년을 기점으로 학생당 교육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약 1,833만 원 수준으로 사업 운영 전인 2018년 대비 약 257만 원 이상 증가하였다.<sup>4)</sup>



[그림 5] 사립대학의 연도별 학생당 교육비 변화

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일반대 88교 기준(2014~2018년의 경우 캠퍼스 금액 미공시로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4) 송기창(2024)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회계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사립대학의 교육비 이중 계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확대와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지원 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도별 추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산출 지표인 중도탈락비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활동 개선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 및 편입학의 증가 등에 따라 연도별 중도탈락비율은 소폭 증가 및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충원율 역시 2023년 기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연도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취업률의 경우 연도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6] 사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산출지표 변화

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일반대 96교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 I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대학자율 혁신사업 확대에 따른 교육성과 전망

III장에서는 고특회계 도입을 바탕으로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주요 성과와 대학 유형별로 최근 10년간 재정상황, 교육여건의 개선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특히 고특회계로 증액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증가에 투입된 점에 착안하여 대학별 패널자료를 토대로 일반재정지원사업비의 교육·연구 및 여건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 1. 분석 방법 및 모형

##### 가. 자료의 구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2012~2023년)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자료(2019~2024년)를 기초로 수집, 구성되었다. 성과 분석에 활용된 분석지표와 변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 공식 등 주요 내용은 <표 23>과 같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본교와 분교(캠퍼스)를 구분하여 자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알리미 자료도 본교와 분교(캠퍼스)를 구분하여 각각 지표에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3〉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산출 공식 등
대학 특성		대학설립유형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소재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대학규모	소규모대학: 학생정원<5,000명 중규모대학: 5,000명≤학생정원<10,000명 대규모대학: 학생정원≥10,000명
교육기본지표		재학생 총원율	총원율={재학생수/(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 2021년부터 전년도(하반기)와 당해연도(상반기)로 구분되어 해당연도 상반기 자료 사용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100% ※ 학생정원 기준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환원율=(총교육비/학부등록금수입총액)×100%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원)
교육 혁신 성과 지표	학생중심 교육	중도탈락율	중도탈락학생비율=사유별중도탈락학생/재적학생
		취업률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100%
	산학협력	창업교육 실적	창업관련 교양과 전공 강좌 수 창업관련 교양과 전공 이수자 수
		전임교원 1인당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특허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국내특허 출원, 해외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해외특허 등록 건수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봉사교육 실적	지역사회 봉사 교과목 과목 수(과목) 지역사회 봉사 교과목 이수율(%)
		지자체 연구비 수혜실적	지자체 연구비 수혜실적(천원)

전체 자료에서 각 분석지표 등에 사용되는 자료가 결측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분석 지표의 자료를 갖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총 5개년(2019~2023년)이 모두 지원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92 개교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24〉 참고).

〈표 24〉 최종 분석 대학 특성

(단위 : 개교, %)

구분	설립유형		대학소재지		대학규모			전체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학교 수	23	69	34	58	12	43	37	92
비율	25.0	75.0	37.0	63.0	13.0	46.7	40.2	100.0

#### 나. 분석모형

일반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재정지원의 효과에를 설립유형, 수도권 여부, 학교 규모와 상호작용 항을 추가 하여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다. 우선 모형1은 일반재정지원의 효과만을 고려하였으며, 모형2는 설립유형의 효과, 모형3은 수도권의 효과, 모형4는 학교규모의 효과를 고려한 교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text{모형 1}) \quad y_{it} = \beta_0 + \beta_1 W_{it} + U_{it}$$

$$(\text{모형 2}) \quad y_{it} = \beta_0 + \beta_1 W_{it} + \beta_2 W_{it} \times D_{1.it} + U_{it}$$

$$(\text{모형 3}) \quad y_{it} = \beta_0 + \beta_1 W_{it} + \beta_2 W_{it} \times D_{1.it} + \beta_3 W_{it} \times D_{2.it} + U_{it}$$

$$(\text{모형 4}) \quad y_{it} = \beta_0 + \beta_1 W_{it} + \beta_2 W_{it} \times D_{1.it} + \beta_3 W_{it} \times D_{2.it} + \beta_4 W_{it} \times D_{31.it} + \beta_5 W_{it} \times D_{32.it} + U_{it}$$

여기서  $y_{it}$ 는 혁신지원사업 규모와 학생중심교육, 산학협력, 지역사회연계에 제시된 11개의 지표이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목표와 관련된 네 가지 종속변수를,  $W_{it}$ 는  $t$ 연도에  $i$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액,  $W_{it} \times D_{1.it}$ 는 일반재정지원과 설립유형(사립=1)의 상호작용항,  $W_{it} \times D_{2.it}$ 는 일반재정지원과 수도권 여부(수도권=1)의 상호작용항,  $W_{it} \times D_{31.it}$ 과  $W_{it} \times D_{32.it}$ 는 일반재정지원과 학교규모(중규모=1, 대규모=1)의 상호작용항,  $U_{it} = \mu_i + \varepsilon_{it}$ 는 개별효과( $\mu_i$ )와 오차항( $\varepsilon_{it}$ )을 각각 의미한다.

## 나. 기술 통계치

〈표 25〉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규모에 대한 기본지표별 기술통계치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충원율은 매년 감소하여 90% 후반대까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2023년까지도 약 10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확보율도 편차는 있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의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약 330~35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낮은 등록으로 인해서 사립대학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규모 기술통계치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0	일반재정 지원사업(백만원)	평균	8,944.9	4,586.8	5,118.2	6,003.5	3,436.2	4,698.3	7,464.6
		표준편차	4,447.9	1,262.9	1,389.9	3,724.7	1,147.6	1,349.4	3,891.4
	재학생 충원율(%)	평균	102.9	100.6	104.5	99.2	101.0	99.8	102.7
		표준편차	6.1	5.5	4.0	5.7	8.7	4.2	5.8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	86.4	88.9	91.5	86.4	91.2	85.4	90.6
		표준편차	13.4	25.0	24.4	21.4	34.1	22.3	18.5
	교육비 환원율(%)	평균	555.7	257.7	331.9	332.4	388.0	295.6	355.0
		표준편차	225.5	133.9	244.3	182.6	259.7	136.0	247.0
	재학생1인당 장학금(원)	평균	280,341.4	354,982.2	331,743.1	339,715.8	347,532.5	349,284.9	324,322.1
		표준편차	273,463.6	360,574.8	328,688.6	537,193.1	682,014.8	443,810.9	402,450.8
2021	일반재정 지원사업(백만원)	평균	9,405.2	5,252.5	5,917.4	6,509.5	3,745.1	5,264.6	8,228.6
		표준편차	4,633.3	1,620.8	1,869.1	3,805.8	1,120.8	1,439.3	3,976.1
	재학생 충원율(%)	평균	99.3	98.7	103.0	96.4	100.2	97.0	100.5
		표준편차	6.4	6.2	3.6	6.2	8.6	5.3	5.8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	87.2	90.8	93.3	88.0	94.4	86.7	92.0
		표준편차	13.0	24.8	25.2	20.6	35.7	21.4	18.0
	교육비 환원율(%)	평균	615.5	274.7	355.5	362.5	422.7	318.1	386.3
		표준편차	257.7	151.4	276.8	209.1	296.4	152.8	282.4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2	재 학생1인당 장학금(원)	평균	2,700,879.9	3,544,425.5	3,300,344.7	3,388,687.5	3,537,917.1	3,431,644.4	3,215,040.1
		표준편차	264,560.5	367,952.6	309,203.1	549,626.1	728,456.1	429,555.9	394,094.6
	일반재정 지원사업백분율	평균	10,346.7	5,583.6	6,243.5	7,085.6	4,206.6	5,595.0	8,888.7
		표준편차	4,618.1	1,732.4	2,066.5	3,992.3	1,335.5	1,891.4	3,996.4
	재 학생 충원율(%)	평균	96.4	96.3	100.7	93.8	99.1	94.2	97.8
		표준편차	7.0	6.4	3.3	6.6	8.8	6.2	5.4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	87.3	89.3	93.2	86.3	93.6	85.5	91.0
		표준편차	13.3	25.6	26.1	21.0	37.1	21.6	19.0
	교육비 환원율(%)	평균	680.5	293.1	389.2	390.4	459.9	341.5	421.4
		표준편차	284.0	167.9	308.8	234.5	325.6	174.0	315.3
	재 학생1인당 장학금(원)	평균	2,974,218.5	3,816,325.4	3,493,093.3	3,671,867.4	3,764,434.5	3,622,241.9	3,460,160.7
		표준편차	268,799.7	426,106.5	359,522.9	610,123.8	812,990.2	497,159.1	445,478.3
2023	일반재정 지원사업백분율	평균	10,569.9	6,129.7	6,370.1	7,749.5	4,219.9	6,434.1	9,155.4
		표준편차	4,758.9	2,147.6	2,002.9	4,143.9	1,370.5	2,009.3	4,373.6
	재 학생 충원율(%)	평균	97.2	97.0	102.6	93.7	99.0	94.1	99.8
		표준편차	8.1	7.5	4.1	7.2	9.0	7.2	6.4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	88.3	88.5	94.0	85.2	94.1	84.8	90.8
		표준편차	13.6	26.3	26.6	21.4	38.2	21.9	19.5
	교육비 환원율(%)	평균	738.8	304.6	402.3	419.5	502.5	362.6	443.0
		표준편차	281.5	181.6	319.3	260.5	364.6	199.6	327.6
	재 학생1인당 장학금(원)	평균	2,994,078.1	3,806,866.8	3,457,254.3	3,689,523.1	3,780,881.3	3,665,256.3	3,451,415.9
		표준편차	302,621.6	455,847.8	342,894.7	628,349.4	837,577.9	503,882.0	460,674.8

주: 여기에서 일반재정지원액은 분석에서 사용된 직전년도의 값

〈표 26〉은 학생중심 교육지표의 기술통계치로, 중도탈락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수도권 대학은 약 3.4~3.7%고 비수도권 대학이 약 5.1~6.3%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다소 높았으며, 중규모 대학 약 5.0%~6.0%이 소규모와 대규모 대학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약 60.0%~70.0% 정도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대학, 소규모 대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학생중심 교육지표 기술통계치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0	중도탈락율(%)	평균	4.5	4.4	3.4	5.1	4.4	5.0	3.9
		표준편차	1.2	1.4	.9	1.2	1.6	1.4	1.1
	취업율(%)	평균	59.3	62.4	65.2	59.6	66.9	61.1	60.6
		표준편차	7.6	5.7	4.7	6.3	7.3	4.4	7.1
2021	중도탈락율(%)	평균	5.1	4.9	3.6	5.8	4.9	5.6	4.2
		표준편차	1.6	1.9	1.0	1.8	1.9	2.1	1.2
	취업율(%)	평균	61.9	65.5	67.9	62.7	68.6	64.7	63.3
		표준편차	7.5	5.0	3.6	6.1	7.0	4.6	6.3
2022	중도탈락율(%)	평균	5.0	5.3	3.7	6.1	5.5	5.9	4.3
		표준편차	1.4	2.2	.8	2.0	2.1	2.3	1.3
	취업율(%)	평균	64.6	67.4	69.6	64.9	71.1	66.7	65.2
		표준편차	6.1	4.9	3.5	5.5	6.0	4.4	5.4
2023	중도탈락율(%)	평균	5.3	5.4	3.8	6.3	5.9	6.1	4.4
		표준편차	1.7	2.2	.9	2.1	2.6	2.1	1.4
	취업율(%)	평균	63.8	65.6	67.9	63.6	71.0	64.7	63.8
		표준편차	6.7	5.1	3.5	6.0	7.4	3.7	5.8

〈표 27〉은 산학협력 지표별 기술통계치로, 창업강좌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립대학이 약 77과목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더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수도권 대학이 약 90과목 정도로 비수도권대학(약 60과목)보다 많았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여 대규모 대학은 약 90과목 이상이 개설되는 것에 비해 소규모 대학은 약 20과목 이하로 나타났다. 창업강좌 이수자 수 또한 창업강좌 수와 동일하게 차이를 보였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국공립대학이 약 9~12천만원으로 사립대학보다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도 약 10~13천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약 6~7천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도 소·중규모대학의 경우는 약 6~7천만원 정도였으나 대규모 대학은 약 9~12천만원 정도로 더 많았다. 기술이전 수입료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약 2~3배 정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규모에 따라서도 소·중규모 대학은 약 5~7천만원 수준이었으나 대규모대학은 약 9~16천만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등록 건수도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이 약 140건 정도로 사립대학(약 110건)보다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도 약 190건으로 비수도권 대학(약 70건)보다 많았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으며 대규모 대학이 약 200건으로 소·중규모 대학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7〉 산학협력 지표 기술통계치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0	창업	평균	36.2	76.9	80.5	58.6	21.5	51.3	98.0
	강좌 수(과목)	표준편차	22.4	81.5	93.7	57.9	12.9	44.5	95.3
	창업 강좌	평균	1,524.0	2,822.2	3,154.7	2,112.5	701.8	1,771.0	3,867.9
	이수자 수(명)	표준편차	1,120.9	2,345.3	2,681.4	1,728.0	529.1	1,324.8	2,457.7
	전임교원 1인당	평균	97,568.2	66,027.7	104,964.2	55,710.3	60,696.3	58,036.6	95,633.9
	연구비(천원)	표준편차	45,055.3	58,098.4	68,611.1	38,389.0	49,465.6	42,916.0	65,411.2
	기술이전	평균	976,014.6	752,697.1	1,375,066.1	476,417.0	124,802.9	468,291.6	1,400,488.3
	수입료(천원)	표준편차	1,209,392.3	1,137,807.0	1,605,514.1	572,741.3	134,415.4	782,667.5	1,394,677.6
2021	특허 등록(건)	평균	152.6	110.9	196.7	77.1	32.0	63.7	213.2
		표준편차	180.6	147.6	220.1	75.5	36.0	52.4	204.5
	창업	평균	39.4	78.7	85.1	59.3	20.5	52.3	102.5
	강좌 수(과목)	표준편차	23.2	81.5	94.7	56.1	13.2	41.6	95.1
	창업 강좌	평균	1,517.0	2,877.7	3,309.4	2,085.0	708.7	1,740.5	3,995.9
	이수자 수(명)	표준편차	1,159.0	2,304.7	2,689.3	1,632.5	575.2	1,227.3	2,380.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112,846.7	75,176.7	121,843.4	62,758.4	71,272.8	65,085.2	110,363.6
	연구비(천원)	표준편차	47,466.7	66,956.1	76,091.8	44,524.8	57,427.1	49,937.4	72,973.4
2022	기술이전	평균	1,286,501.7	918,426.0	1,722,577.0	592,988.3	198,504.6	596,622.9	1,724,229.5
	수입료(천원)	표준편차	1,586,011.2	1,490,580.7	2,134,817.8	737,648.1	192,075.2	938,395.5	1,929,761.2
	특허 등록(건)	평균	147.3	114.4	205.0	74.3	35.8	65.9	212.8
		표준편차	178.3	159.6	233.5	70.8	41.7	57.0	218.3
	창업	평균	44.0	76.7	89.0	56.5	19.7	52.3	101.8
	강좌 수(과목)	표준편차	24.6	82.5	98.3	51.9	12.0	40.7	96.4
	창업 강좌	평균	1,675.3	2,831.8	3,494.6	1,984.7	672.8	1,814.4	3,938.2
	이수자 수(명)	표준편차	1,392.4	2,397.8	2,804.4	1,612.8	561.9	1,378.5	2,531.2
2022	전임교원 1인당	평균	120,161.4	82,052.7	133,281.2	67,134.2	74,507.1	70,891.4	119,837.4
	연구비(천원)	표준편차	47,401.4	72,734.5	81,421.5	46,200.6	54,183.2	52,214.7	80,258.4
	기술이전	평균	1,487,314.7	1,177,955.2	2,337,870.2	620,682.0	187,054.0	599,966.3	2,316,945.1
	수입료(천원)	표준편차	1,841,920.6	3,461,777.2	4,879,540.3	861,071.2	212,528.9	905,053.9	4,588,922.9
	특허 등록(건)	평균	125.2	91.6	167.2	60.6	30.7	50.6	176.4
		표준편차	168.7	130.9	204.3	57.6	31.7	43.2	190.4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3	창업 강좌 수(과목)	평균	47.6	83.0	98.1	60.2	20.9	54.3	114.5
		표준편차	24.4	83.4	100.7	49.9	13.0	35.9	97.3
	창업 강좌 이수자 수(명)	평균	1,762.8	3,204.2	3,903.8	2,222.4	703.9	2,007.9	4,509.3
		표준편차	1,236.5	2,738.0	3,301.7	1,669.8	544.3	1,274.5	2,982.2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평균	126,196.0	82,393.4	130,552.7	71,532.1	65,576.5	72,752.9	126,280.0
		표준편차	50,951.3	72,220.0	83,880.3	49,209.2	47,154.7	55,371.2	78,886.1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평균	121,981.79	825,965.3	1,486,589.6	594,885.7	198,129.4	525,331.5	1,623,800.4
		표준편차	127,036.2	1,262,826.5	1,725,645.2	746,869.3	243,472.9	715,667.2	1,613,036.0
	특허 등록(건)	평균	132.8	94.8	176.6	61.9	29.5	51.8	189.6
		표준편차	176.3	142.1	218.3	63.0	31.6	47.6	205.5

〈표 28〉은 지역사회연계 지표별 기술통계치로,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는 약 6과목 전후로 나타나 매우 적었으며, 수도권 대학도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약 2~3과목 정도 많았다. 학교규모 별로도 큰 차이를 없이 4~7과목 정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율은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 대비 비율로 과목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70~80% 수준에서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이 약 6백만원으로 사립대학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약 1백만원 정도 많았다.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중규모 대학이 약 4백만원 정도로 소·대규모 학교보다 더 많았다.

〈표 28〉 지역사회연계 지표 기술통계치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020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과목)	평균	5.7	6.1	7.1	5.4	5.7	5.3	7.0
		표준편차	5.2	6.2	8.7	3.4	4.6	4.9	7.2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율(%)	평균	73.9	79.5	79.9	77.0	78.0	74.9	81.6
		표준편차	21.6	20.2	19.3	21.4	18.8	22.4	18.8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천원)	평균	6,156.7	3,066.6	3,374.2	4,111.6	2,892.7	4,216.3	3,721.0
		표준편차	5,999.3	3,950.8	5,064.4	4,511.0	2,774.4	6,148.9	3,144.5
2021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과목)	평균	5.3	6.6	7.0	5.9	4.8	6.3	6.8
		표준편차	4.1	8.0	8.1	6.7	4.0	8.5	6.5

년도	주요지표	통계량	설립유형		수도권여부		학교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율(%)	평균	78.7	80.8	81.0	79.8	78.4	77.4	84.0
		표준편차	18.0	16.2	14.9	17.7	15.4	18.9	13.7
	전임교원 1인당 자자체 연구비(천원)	평균	6,027.7	3,469.3	4,060.1	4,137.5	2,621.4	4,617.9	4,016.1
		표준편차	7,068.3	5,424.8	7,206.9	5,128.2	2,137.2	8,147.2	3,303.1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과목)	평균	5.2	6.0	7.3	4.9	4.9	5.5	6.5
		표준편차	4.6	6.0	8.3	3.2	4.3	4.9	6.8
2022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율(%)	평균	78.0	79.8	79.1	79.6	80.2	77.0	81.7
		표준편차	17.2	17.1	18.0	16.6	13.0	18.5	16.5
	전임교원 1인당 자자체 연구비(천원)	평균	6,682.7	3,616.8	4,046.0	4,581.1	3,083.5	4,998.2	4,114.2
		표준편차	5,753.5	5,262.0	6,781.7	4,681.8	2,439.6	7,320.5	3,570.3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과목)	평균	5.4	7.3	9.1	5.5	5.7	5.6	8.6
		표준편차	4.0	11.7	16.1	3.9	4.3	4.6	15.2
2023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율(%)	평균	80.0	80.9	79.8	81.1	83.4	78.6	82.1
		표준편차	14.4	16.3	17.7	14.7	10.2	16.8	16.1
	전임교원 1인당 자자체 연구비(천원)	평균	6,311.1	3,566.2	3,475.0	4,708.1	3,217.9	4,197.3	4,652.0
		표준편차	5,508.2	3,569.2	3,294.7	4,725.6	2,206.1	4,884.1	4,046.3

## 2. 패널회귀분석 결과

### 가. 교육기본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영향 분석 결과

교육기본지표에 대한 분석모형 중에서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종속변수가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모형1~모형4와 교육비 환원율에 대한 모형 4이다.

우선 ‘재학생 충원율’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이 음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발생적인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어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한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비가 양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중·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일반적으로 양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중·대규모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재 학생 1인당 장학금(원)	일반 재정지원	63.55***	71.31***	41.25*	98.20**	26.23***	-18.86**	-65.67***	-8.82
	사립×일반 재정지원		-9.63	-6.44	-6.93		81.28***	97.12***	91.45***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38.10**	37.82**			45.75***	43.4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52.83				-34.58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65.43				-59.48**
	상수	3,069,356***	3,057,843***	3,075,997***	3,068,600***	3,311,735***	3,276,164***	3,318,990***	3,274,750

주: 1) \*\*\* p<0.01, \*\* p<0.05, \* p<0.10.

2) 모형별 회귀계수 칸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의수준 5%하에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

#### 나. 학생중심 교육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영향 분석 결과

학생중심교육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을 이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도탈락률’은 양(+)의 효과를 보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중도탈락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다소 낮았는데, 이는 앞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학생층원율 문제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신입입 확대 등 학생이동 효과 유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규모가 중·대규모 대학의 경우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률’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의 효과가 양(+)의 효과를 보여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으나, 사립대학은 국공립 대학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참고).

〈표 30〉 학생중심 교육지표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중도 탈락율(%)	일반 재정지원	1.73E-04***	1.27E-04	8.92E-05	6.01E-04***	7.79E-05**	3.26E-05	-274E-04***	-1.73E-05
	사립×일반 재정지원		5.74E-05	6.14E-05	5.91E-05		9.03E-05**	1.74E-04***	1.40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4.73E-05	4.71E-05			2.99E-04***	2.87E-04***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4.88E-04*				-7.53E-05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58E-04**				-27E-04**
	상수	3.88***	3.95***	3.97***	3.90***	4.50***	4.43***	4.79***	4.45***
취업률(%)	일반 재정지원	7.88E-04***	1.67E-03**	1.67E-03**	2.43E-03**	3.31E-04***	1.53E-04	7.33E-04***	2.43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1.0E-03*	-1.0E-03*	-1.0E-03*		4.35E-04**	2.53E-04*	2.41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1.0E-06	3.95E-05			-6.6E-04***	-6.9E-04**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8.7E-04				-1.4E-03*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7.9E-04				-1.7E-03*
	상수	59.41***	58.10***	58.10***	57.85***	62.37***	61.77***	61.61***	60.33***

주: \*\*\* p<0.01, \*\* p<0.05, \* p<0.10.

#### 다. 산학협력 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영향 분석 결과

산학협력 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의 효과는 창업교육 강좌 수와 이수자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기술이전 수입료, 특허등록건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창업교육 강좌 수’의 경우 미미하기는 하지만 양(+)의 효과를 주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 강좌 이수자 수’도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이 또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양(+)의 효과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으나, 사립대학이고 수도권대학인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대학이 소·중규모 대학에 비해서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수입료’는 모형 1과 모형 4의 확률효과 모형으로 살펴보면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수도권 유무(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다소 감소)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으며, 모형 2와 모형 3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 건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음(-)으로 나타나 감소하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그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고).



〈표 31〉 산학협력 지표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창업교육 강좌 수(명)	일반 재정지원	2.72E-04	4.29E-03**	0.01***	0.01	4.12E-04	6.70E-04	4.06E-03**	-1.28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4.98E-03*	-0.01***	-0.01***		-3.31E-04	-1.16E-03	-6.61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2.39E-03	-2.40E-03			-3.74E-03**	-3.60E-0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6.63E-04				3.94E-03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7.87E-04				0.01*
	상수	67.79***	61.83***	60.69***	60.80***	66.88***	66.54***	63.99***	65.58***
창업교육 강좌 이수자 수(명)	일반 재정지원	0.04	1.35E-01*	0.26***	0.21	0.05*	0.01	0.21***	-0.15
	사립×일반 재정지원		-1.20E-01	-0.13	-0.14*		0.10**	0.04	0.08*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0.16**	-0.17**			-0.21***	-0.20***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0.09				0.24**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0.05				0.38***
	상수	2,352.26***	2,209.23***	2,132.06***	2,172.17***	2,255.21***	2,157.38***	1,996.14***	2,220.00***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일반 재정지원	4.04***	8.91***	13.18***	7.99**	4.51***	6.81***	14.69***	11.14***
	사립×일반 재정지원		-6.04***	-6.49***	-6.00***		-3.37***	-5.13***	-4.23***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5.41***	-4.87***			-8.76***	-8.3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2.79				0.70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6.83*				4.24*
	상수	59,593.77**	52,376.13**	49,797.77**	48,704.70**	56,584.28**	55,197.97**	48,912.04**	50,225.21**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술이전 수입금(천원)	일반 재정지원	48.90	7.99	102.90	37.45	139.80***	138.74***	372.20***	155.56
	사립×일반 재정지원		50.74	40.68	57.93		51.09	-28.20	-41.49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120.30	-100.75			-236.14***	-230.8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15.36				71.50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107.86				200.74**
	상수	682,056.10	742,744.10	685,428.90	627,475.50	91,641.48	-107,937.80	-286,058.60	282,306.30
특허등록 건수(건)	일반 재정지원	-415E-03*	-0.01***	-0.01***	-4.71E-03	-300E-03**	-292E-03	3.11E-03	-397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4.76E-03*	4.82E-03*	3.99E-03		1.24E-05	-200E-03	-1.83E-03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6.80E-04	-2.49E-04			-0.01**	-0.01**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6.54E-05				0.01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0.01				0.01
	상수	138.98***	144.67***	144.99***	147.64***	131.55***	130.98***	123.77***	125.30***

주: 1) \*\*\* p<0.01, \*\* p<0.05, \* p<0.10.

2) 모형별 회귀계수 칸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의수준 5%하에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

#### 라. 지역사회연계 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영향 분석 결과

지역사회연계 지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는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와 이수율, 전임 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모형 3을 살펴보면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양(+)으로 나타나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감소하여 음(-)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율’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에 대해서도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양(+)의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표 32〉 지역사회연계 지표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지역사회 봉사 교과목 수 (과목)	일반 재정 지원	8.47E-05	-2.93E-04	3.66E-04	3.58E-04	5.19E-05	-9.23E-06	4.64E-04*	1.78E-04
	사립×일반 재정 지원		4.69E-04	3.99E-04	4.90E-04		2.23E-04	5.67E-05	1.02E-04
	수도권×일반 재정 지원			-8.35E-04*	-7.31E-04			-4.92E-04*	-4.67E-04*
	중규모×일반 재정 지원				-4.07E-04				-1.08E-05
	대규모×일반 재정 지원				1.87E-04				3.02E-04
	상수	5.69***	6.26***	5.86***	5.50***	5.91***	5.40***	5.12***	5.68***
지역사회 봉사 교과목 이수율(%)	일반 재정 지원	4.86E-04	1.26E-03	-1.91E-04	2.38E-03	4.44E-04	3.67E-04	-8.97E-05	7.68E-04
	사립×일반 재정 지원		-9.63E-04	-8.09E-04	-8.52E-04		1.90E-04	3.35E-04	3.88E-04
	수도권×일반 재정 지원			1.84E-03**	1.80E-03**			4.77E-04	5.05E-04
	중규모×일반 재정 지원				-2.28E-03				-1.02E-03
	대규모×일반 재정 지원				-2.99E-03				-8.33E-04
	상수	76.43***	75.28***	76.15***	75.91***	76.70***	76.43***	76.75***	76.32***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천원)	일반 재정 지원	0.28**	0.26	4.66E-01	0.03	0.30***	0.35***	0.40**	0.20
	사립×일반 재정 지원		0.02	2.04E-03	0.00		-0.12	-0.14	-0.16
	수도권×일반 재정 지원			-2.60E-01	-0.27			-0.05	-0.06
	중규모×일반 재정 지원				0.43				0.28
	대규모×일반 재정 지원				0.48				0.18
	상수	2,327.19***	2,355.63***	2,231.77***	2,318.36***	2,215.10***	2,361.45***	2,328.33***	2,398.57***

주: 1) \*\*\* p&lt;0.01, \*\* p&lt;0.05, \* p&lt;0.10.

2) 모형별 회귀계수 간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의수준 5%하에서 하우즈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

### 3. 종합정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표들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취업률, 창업교육 강좌 이수자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에 대해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장차 고특회계를 통해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경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취·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생 충원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발생적인 효과로 있어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학생의 취업시장 변화에 맞추어 학사구조 개편이나 입학정원 조정 재구조화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공계열별 재학생 충원율 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재학생 충원율은 앞선 전체적인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일반재정지원의 효과가 음(-)으로 나타나 충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학계열은 사립대학이고 중·대규모 대학인 경우는 그 효과가 양(+)으로 나타나 재학생 충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의 경우도 사립대학이고 비수도권에 소규모 대학인 경우는 일반재정지원의 효과가 양(+)으로 나타나 재학생 충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참고).<sup>5)</sup>

이러한 추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해서는 재학생 충원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재학생 충원율 개선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학별 자율혁신 기반의 일반재정지원사업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첨단산업 분야 등 취업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년도 지원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공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설치되기 어려운 의학계열(의학, 한의학, 수의학)은 해당 계열이 없는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0%로 처리되어 있어 다소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3〉 전공계열별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공학계열 재학생 충원율(%)	일반 재정지원	-6.90E-04*	-1.61E-03**	-1.23E-03*	-4.66E-03**	-3.76E-04*	-2.64E-04	5.45E-04	-3.24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1.14E-03**	1.11E-03*	1.04E-03*		-1.49E-04	-3.73E-04	-2.20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4.56E-04	-5.48E-04			-8.4E-04**	-8.33E-04*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3.5E-03***				3.42E-03***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3.73E-03**				4.02E-03***
	상수	107.11***	108.48***	108.26***	109.08***	105.07***	104.95***	104.24***	105.62***
예·체능 계열 재학생 충원율(%)	일반 재정지원	-2.63E-04	-6.30E-04	9.09E-04	0.01***	-1.34E-04	-2.71E-04	1.49E-03**	1.10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4.56E-04	2.92E-04	4.49E-04		1.93E-04	-1.76E-04	-1.58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1.9E-03*	-1.7E-03**			-2.0E-03**	-2.01E-0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0.01***				2.49E-04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0.01***				5.83E-04
	상수	99.95***	100.50***	99.57***	98.15***	99.12***	99.23***	97.96***	97.74***
의학계열 재학생 충원율(%)	일반 재정지원	-1.64E-04	-4.30E-04	7.43E-05	2.03E-04	-9.62E-05	-1.91E-04	2.98E-04	-4.23E-04
	사립×일반 재정지원		3.31E-04	2.77E-04	2.40E-04		1.39E-04	7.22E-05	9.11E-05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6.40E-04*	-6.83E-04*			-6.04E-04*	-5.92E-04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4.78E-05				6.32E-04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2.20E-04				8.41E-04
	상수	41.02***	41.41***	41.11***	41.24***	40.58***	40.63***	40.33***	40.40***
인문·사회 계열	일반 재정지원	-1.7E-03*	-2.6E-03**	-1.08E-03	-3.0E-03*	-1.40E-03**	-1.4E-03**	1.50E-03**	-2.2E-03*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재 학생 총원율(%)	사립×일반 재정지원		1.14E-03*	9.70E-04	9.16E-04		1.58E-04	-6.82E-04	-4.05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2.05E-03*	-2.10E-03*			-2.95E-03**	-2.88E-0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2.15E-03				2.88E-03***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2.12E-03				3.98E-03**
	상수	131.75***	133.12***	132.15***	132.69***	129.41***	129.09***	126.14***	127.86***
자연과학 계열_재 학생 총원율 (%)	일반 재정지원	3.24E-04	-1.68E-03	4.05E-04	0.02***	3.20E-04	-1.57E-04	1.45E-03*	5.00E-03**
	사립×일반 재정지원		2.49E-03*	2.27E-03*	2.65E-03*		9.96E-04*	4.88E-04	7.17E-04
	수도권×일반 재정지원			-2.64E-03*	-2.13E-03*			-1.65E-03**	-1.60E-03*
	중규모×일반 재정지원				-0.02***				-4.21E-03*
	대규모×일반 재정지원				-0.02***				-3.48E-03*
	상수	101.03***	104.00***	102.74***	98.60***	101.05***	100.13***	98.98***	97.36***

주: 1) \*\*\* p<0.01, \*\* p<0.05, \* p<0.10.

2) 모형별 회귀계수 칸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의수준 5%하에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

## 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향후 개선 과제

###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반 고등·평생교육재정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본 연구는 2023년 도입·운영 중인 고특회계의 도입 경과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고특회계의 목적을 대표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 확대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특회계 도입 경과와 최근 3년 고특회계 예산 편성 내역을 검토하고 고특회계 도입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대학에 나타난 교육혁신 사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고특회계 도입 전후 고등교육기관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특회계 도입으로 연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

산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내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교육기반 조성 등이 포함된 국립대학 운영지원과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사업이 포함된 대학역량강화 영역의 예산이 확대되었다. 사업비의 증액과 함께 집행 규제의 완화 및 자율성 강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비중 증가 등 교육 혁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육부의 고등교육단계 고등·평생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고(〈표 34〉 참고), 고특회계에 타부처 고등교육예산의 일부(2025년 기준 고용부 3,985억 원, 과기부 1,092억 원, 농림부 157억 원, 특허청 72억 원, 산자부 57억 원)가 유입되는(국회예산정책처, 2024: 9)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단위의 고등·평생교육 관련 세입과 세출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사업의 경우 고등교육단계의 사업에 한정하여 고특회계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예컨대 인적자원정책개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등)의 경우 왜 고특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확대되고 특히 정규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디그리 등 비학위과정으로 교육활동이 다양화되고 학교급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차 고특회계로 담길 평생·직업교육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고특회계에서 평생·직업교육의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효과가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특회계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고등·평생교육재정제도 전반을 고특회계 기반의 안정적 운영체제로 재구조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1조(목적)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과, 법 제4조(세출) “1.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34〉 교육부 고등교육단계 고등·평생교육사업의 회계별 예산 구성(2024년)

사업명	2024 예산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정 구분
고등교육	12,378,007	- 일반회계: 7,697(0.06%)	

사업명		2024 예산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정 구분
			- 고특회계: 12,370,310(99.94%)	
대학교육역량강화		496,854		고등 교육 연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96,854		
	대학미래역량 강화	9,609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	481,792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 원,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글로벌 현 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 창업 활성화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	5,453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 시스템구축, 고등교육 재 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		2,825,311		
일반회계		7,697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 화 및 공공성 제고 사업	7,697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817,614		
	대학혁신지원	2,232,510	대학혁신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폐교대학 종합 관리 사업,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사립대학 구 조개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4,68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 조성	60,420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대입전형 운영 지원	
학술연구역량강화		964,3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64,300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320,331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인문학 진흥(R&D), 한 국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지원(R&D)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60,926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고전문헌 국역 지원		-	고전문헌 국역 지원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		27,770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연구윤리활동지원 (R&D)	
학술단체지원		12,249	기초학문 확산지원	
인재정책기획관연구 기획심사평가사업		731	인재정책기획관연구기획심사평가(R&D)	
이공학학술연구조성		514,695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개인기초연구(교 육부)(R&D)	
동북아역사재단 출연		15,672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명		2024 예산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정 구분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11,926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국립대학운영지원	3,003,7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003,707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1,107,992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경비 지원,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사업,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	1,046,995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737,35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111,369	국립대병원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5,087,83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087,835		
	한국장학재단 출연	367,382	한국장학재단 출연	인재 양성 (+타 부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평생·직업교육		741,246	- 일반회계: 57,275(7.73%) - 고특회계: 683,971(92.27%)	평생 직업 교육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2,294		
	일반회계	2,294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1,295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정책연구개발사업	999	정책연구개발사업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sup>1)</sup>	71,967		
	일반회계	52,215		
	평생교육 기반구축	39,775	평생학습진흥 지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자격체계 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6,732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1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995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9,752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19,75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	

사업명		2024 예산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정 구분
			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산학연 협력 활성화 <sup>2)</sup>	666,985		
	일반회계	2,766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sup>3)</sup>	2,766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64,219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737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전문대학 혁신 지원	647,210	전문대학 혁신 지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마이스터대 지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9,60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전년도 104,500 순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학교기업지원사업	

주: 1) 교육부 [053]평생·직업교육은 [4000]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4100]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4300]국제교육 협력증진, [4500]국립국제교육원 지원, [4600]산학연 협력활성화, [4700]정보활용 활성화 지원으로 구성. 이 가운데 국제화, 정보화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4000]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4100]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4600]산학연 협력활성화를 합한 수치임.

2) [4600]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 가운데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국가 직무능력표준 구축,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운영.

3) [4601]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가운데 [4601-303]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766백만원)는 일반회계로 운영

4) 기금, 인건비·기본경비, 내부거래 제외

자료: 교육부(2024).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향후 개정 방향

가. 고특회계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와 방안 필요

이 연구에서는 고특회계 도입의 목적과 고특회계 예산 지원 영역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교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비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부분 교육 영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특회계로 증액된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토대로 장차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생지원 확대(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1인당 장학금)와 교육 및 연구성과(취업률, 창업교육 강좌 이수자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지자체 연구비) 등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특회계의 연장, 세입원의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특회계법안의 개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의 안정적 추진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에 따라서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의무화에 따라서 2024년 12월 제3차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 발표되고, 3대 재정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특회계를 통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고특회계 세입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증적 성과 확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와 재정당국에서 요청하는 것 역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성과 확인’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가 고특회계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사업이 일괄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수집 수준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실태조사를 고도화하여 중앙정부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에 전략적 재원 투자를 위해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을 분류하면 고특회계법 제4조(세출)의 사업구분과 별도로 <표 35>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기타의 타 부처 사업은 총괄적으로 인재양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고등교육·연구’,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영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계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특회계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업의 계정 구분은 앞서 살펴본 <표 34>의 가장 오른쪽 열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사업의 구분

구분	사업명
글로벌 대학 지원 등 대학의 자율 혁신	• 대학혁신지원(Ⅰ 유형), 전문대학혁신지원(Ⅰ 유형), 국립대학육성 사업, 지방대학성화, 지방전문대학성화
대학생에 대한 학비 부담완화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집중지원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마이스터대 지원, 대학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병원 지원,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기타	• 타부처 사업(고용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특허청 등)

구체적으로 고특회계법안에 계정의 분리 및 복수계정 운영에 따라 각각의 계정별 세입과 세출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나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36〉 참고).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정을 신설할 경우 재원의 확보 및 배분, 집행 측면에서 각 계정별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법의 존치 목적 및 성과 파악이 유리하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RISE체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규모에 대한 반영 및 관리가 용이하다.

〈표 36〉 계정의 구분을 담고 있는 특별회계 유사 입법 사례

법률	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76조(계정의 구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제4조(계정의 구분)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나.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고등교육의 성과 도출 및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고특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특회계 규모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모 측면에서 연도별 고특회계에 포함되는 부처 및 사업의 범위에 따라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며, 고특회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세 전출 규모 역시 매년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세 교육세 규모의 편차, 교육세에서 유특회계에 전출되는 규모의 증가로 매년 고특회계로 전출되는 교육세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3년간의 한시적 운영으로는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대학의 혁신적 시도를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고, 대학의 학사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성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적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고 고등교육 단계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증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특회계의 운영기간을 최소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의 실행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서 확충 목표로 하고 있는 OECD 국가 평균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세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서 70%, 나아가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특회계가 도입된 이후 2023년과 2024년 교육세는 각각 5.2조원과 6.2조원이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0.5%), 개별소비세액의 일정 비율(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일정 비율(15%), 주세액의 일정 비율(10%)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세 수입의 경우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지만, 국세 수입의 변동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이는 교육세가 수입금액, 소비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세 세입을 학교급간에 교육재정 틀 속에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특회계 등 고등교육재원을 통합하여 교육교부금으로 개편한 후 학교급별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RISE체계,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맞추어 교육재정TF를 구성하여 향후 교육재정의 규모를 추계하고 교육세 전출분 고특회계 세입원 비중 변화에 따른 학교급간 재정소요 변동과 배분방식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각연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각연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각연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교육부(2024). 교육부 2025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분석시리즈Ⅳ: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기획재정부(2025).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김민희·최희용(20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쟁점 및 개선방안 탐색: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3(4), 163-187.
- 남수경(2022).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34(2), 25-58.
- 남수경·김민희·김성식·박주병·이희숙(2023).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 남수경·이희숙·김훈호·이호준·원세림(2024).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33(3), 65-95.
- 문재성(2025). 대학 재정 위기가 원인과 현황 분석: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2025년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 자료집(2025.3.31.).
- 송기창(2024). 사립대학 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2차 고등교육정책 연합포럼: 지역혁신과 대학, 재정 전략자료집(2024.12.6.).
- 송지나·김도기(2024).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책 분석. 지방교육경영, 27(3), 211-233.
- 원세림·남수경·이희숙·김훈호(2023). 비교모형 기반의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과 재정지원 확충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32(3), 107-132.
- 한국재정정보원(2024). 2024 주요 재정통계.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국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주제 2

발표자 황길태(경북대학교 교수/기획처장)







##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의 성과와 과제 -

발 제 :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경북대학교

발표자 : 황 길 태 (경북대학교 기획처장)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ntents

1. 고·특회계와 국립대학육성사업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3. 향후 논의

## 1. 고·특회계와 국립대학육성사업

## I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

2025년 12월 일로 예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단기적 전략(기간 연장, 재원 확대), 중·장기적 전략(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 [2025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국 시행되며, 전년 대비 7,985억 원 증가한 2조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예산 편성(5개 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전년 대비 5,850억 원 증액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또한 확대되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이 확대됨

※ ( ' 23) 9조 7,427억원 → ( ' 24) 15조 5,339억원 → ( ' 25) 16조 3,998억원 (타 부처 사업 포함)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1. 고·특회계와 국립대학육성사업

## I 국립대학육성사업( ' 18 ~ 현재)

## 1주기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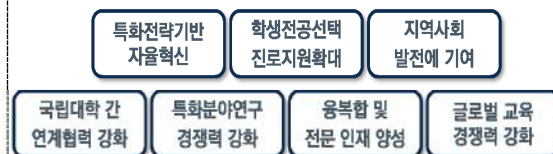
- (비전)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체제 구축
- (목표) 모든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고등 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와 연계한 국립대 고유의 역량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 (중점추진과제)



※ (2018) 800억, (2019) 1,504억, (2020) 1,425억, (2021) 1,500억, (2022) 1,500억

## 2주기 (2023~현재)

- (비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 (목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
- (지원내용)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 고려한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 (중점추진과제)



※ (2023) 4,580억원, (2024) 5,722억원, (2025) 4,243억원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I 국립대학육성사업(경북대학교 주요 성과)

-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S등급** - 전체 국립대학 중 최대 사업비 확보(303억 6,500만원)
-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A등급** - 전체 국립대학 중 최대 사업비 확보(252억 7,000만원)
- 2022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종합평가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A등급** - 전체 국립대학 중 최대 사업비 확보(102억 8,000만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 우수사례 선정]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중점 추진 과제별

### I “진로를 나답게, 전공을 자유롭게”

-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 [유형 1] 거점 국립대 중 최대 인원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운영 확대(총 25.4%, [유형 1] 10.15%, [유형 2] 15.25%)
- 실질적 학생 전공 선택권 보장
  - [자율전공부] 계열 구분 없이 학생 개인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전공 선택(계열 구분 없는 통합모집)
  - [전과 요건 완화] 전과 대상 자격 완화(전 학년 확대), 전과 비율 확대(기존 5~10% → 15~20%)
  - [융합학부] 국립대 최초 전과 및 복수 전공을 통한 입학정원이 없는 학사 조직 → 첨단기술융합대학 확대

#### 첨단기술융합대학

- 기존 융합학부+교육부 첨단분야 신설학과 → 첨단융합대학 확대
- 학생의 학과 선택권 및 이수 기회 확대, 학과 간 시너지 효과 창출
- 단과대학 전체가 전공자율선택제 참여, 2학년 전공 선택 시 사실상 정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국제자율학부

- 국제자율학부 신설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글로벌 모빌리티 교육 강화
- 한국어 집중교육 후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진학하는 글로벌 자율전공 신설(우수 학부 유학생 유치)

특화전략기반  
자율혁신

학생전공선택  
진로지원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연구  
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중점 추진 과제별

## I “학생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교육혁신”

## ▪ KNU 교육 패널

- 재학생의 경험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과 제도 설계**를 위한 상시 피드백 체계
- 단발성 설문이나 일회성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단과대·학년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패널 형태의 참여 기반 조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임

→ 학생 참여 기반의 교육혁신 모델 정착, 학사제도 개선 및 수요 기반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 학생 신뢰도 향상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특화전략기반  
자율혁신**

 학생전공선택  
진로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연구  
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중점 추진 과제별

## I “지역을 품은 국립대학, 공공의 가치 실현”

## ▪ 지역사회-국립대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달구벌 굿 라이프 협의체”

- (추진목적)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출범
  -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지역사회공헌활동에서의 콜렉티브 임팩트 지향
- (참여기관) 경북대학교 지역사회공헌센터(사무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DGB금융그룹/DGB사회공헌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텍(유), KT&G,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등 9개 기관
- (활동내용)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업 사업(KNU 사람의 헌혈 캠페인, 꿀벌 생태계 보전 등) 추진



달구벌 굿 라이프 협의체



노관학습자 멘토링 프로젝트



ESG 포럼



사랑의 헌혈 캠페인



탄소중립 크리에이티브 미술대회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특화전략기반  
자율혁신**

 학생전공선택  
진로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연구  
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중점 추진 과제별

### I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 ▪ (권역 간) 국가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KNU 10)

-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참여대학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각 대학 강점 분야 교육콘텐츠 교류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교육 격차 완화, 교육 만족도 향상 등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 ‘24.1학기 : 37개 교과목, 5,001명 수강, 만족도 85% (본교 주관 교과목 4개, 본교 수강생 622명)
  - ‘24.2학기 : 38개 교과목, 4,925명 수강, 만족도 87% (본교 주관 교과목 4개, 본교 수강생 628명)

#### ▪ (권역 내) 대구·경북권역 대학 네트워크

- [대경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과정] 전공 교과목을 모듈화하여 공동 마이크로디그리(원격수업) 개발 및 학점 교류
  -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경영학부-금융파생상품론, 금융기관경영론 + 경제통상학부-FTA의 이론과 실제 + 영어영문학과-고급영어
- [대경권 국립대학 공동 비교과 과정]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대면캠프, 온라인 특강, 공모전 등 운영
- [대경권 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24.1학기(7개 교과목, 1,371명 수강), ‘24.2학기(7개 교과목, 1,414명 수강)

 특화전략기반  
자율혁신

 학생전공선택  
진로지원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강화**

 특화분야연구  
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대표 성과

### I 대표 성과 : KNU 교육브랜드 선도학과

교육혁신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는 선도학과를 중점 육성하여 학과 중심의 우수 교육 모델 구축

- (운영계획) 대학 차원의 교육혁신 전략을 학과 단위에 집중 운영함으로써 집약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 해당 학과의 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성과 확산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 (선정분야) 우리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 및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
  - ① 첨단융합 분야: 교육부 고시 21개 첨단 분야 해당 학과 육성으로 미래인재 양성
  - ② 기초보호학문분야: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 지원으로 기초보호학문 분야 인재 양성

※ 1년 단위 지원 및 엄정한 환류를 통한 평가 및 재선정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대표 성과

## I 왜 '학과' 인가?

- 학과 단위의 혁신전략 이행 및 경쟁력 강화는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자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
- 학과 중심의 통합적 우수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학과 단위의 교육혁신 유도 및 확산 필요
- 재학생 대상 대학 교육혁신전략 설문조사 결과 학생·사회 수요 기반 교육과정, 전공 기반 진로 교육, 학생 적응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과(선도학과) 선정 필요(82.1%)**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대학별 자율혁신, 양질의 대학교육**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쏙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공자율선택제)**

## KNU 교육브랜드 선도학과

- 전공/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생들의 선택지 다양화
-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줌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대표 성과

## I KNU 교육브랜드 선도학과 추진 내용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학생 지원,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학과 경쟁력 강화

## ① 교육과정

- 교육과정 운영
  - 다전공 이수가 용이한 교육과정 운영(학점)
  - 수요 기반의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 다전공시 최소전공이수 학점 하향
- 융합교육 운영
  - 학생(사회)수요기반 모듈형 융합전공 개설운영
  - 수요 기반의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 모듈형 교육과정 수립(주전공 모듈, 마이크로 모듈)

## ② 학생지도

- 진로교육 운영
  - 학과 기반 진로교육
  - 학과-대학 프로그램의 연계 및 체계 구축
  - 전 단계(학생 모집-재학 중) 맞춤형 진로 지원
- 학생관리 운영
  -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유지 충원율 관리를 위한 방안
  - 선제적 학생 관리 모델에 따른 전주기적 관리

## ③ 성과관리

- 발전계획 연계
  - 학과 및 대학 발전계획과의 연계
  - 선도학과 사업계획과의 연계
  - 학과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연계
- 성과관리 방안
  -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 수요조사/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체계 구축
  - 대학 성과 평가, 기본역량진단 등과의 연계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KNU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2. 경북대학교 추진 성과 : 대표 성과

## I KNU 교육브랜드 선도학과 핵심 성과

- 전공 이수 최소학점 조정(기존 대비 평균 5학점 감소)
- 모듈기반 전공 교육과정 편성(주전공, 마이크로전공 모듈)
- 대학 진로설계모델에 따라 맞춤형 학부생 경력 개발 경로 제시 및 지원

※ 모듈형 교육과정 수립현황(주전공 모듈, 마이크로 모듈)

첨단융합분야				기초보통분야		
생명과학부 (4,5)	통계학과 (4,4)	경영학부 (9,7)	기계공학부 (1,1)	철학과 (4,5)	문헌정보학과 (3,1)	심리학과 (7,2)
토목공학과 (9,2)	고분자공학과 (6,2)	환경공학과 (2,1)	에너지공학부 (4,3)	사회복지학부 (8,1)	미디어커뮤니 (6,4)	수학과 (4,1)
컴퓨터학부 (14,5)	식품공학부 (9,3)	신소재공학부 (8,2)	원예과학과 (7,2)	행정학부 (2,0)	물리학과 (4,2)	관광학과 (5,1)

## 중도탈락 감소율

105.75(21) → 121.06(22) → 102.03(23)

## 취업률

56.54(21) → 57.17(22) → 59.90(23)

## 진학자 비율

12.50(21) → 13.44(22) → 16.33(23)

## 학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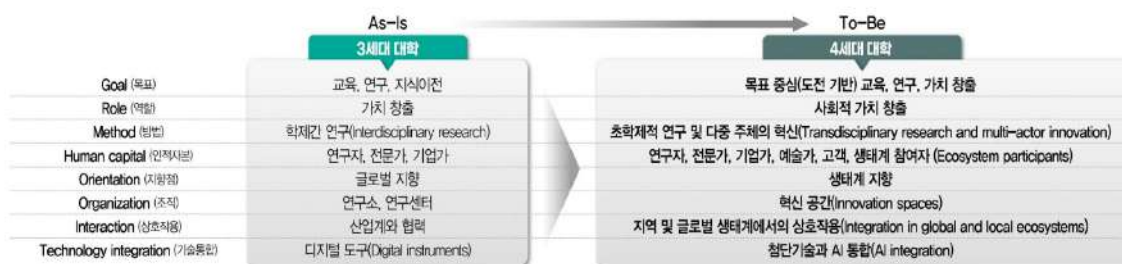
63.93(21) → 81.99(22) → 86.18(23)

## 다전공 선발 비율

5.67(21) → 7.21(22) → 8.33(23)

## 3. 향후 논의

## I 4세대 대학 모델로의 진화



- 4세대 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산업, 사회를 연결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
- RISE 체계 도입은 지역-대학 간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4세대 대학 모델 전환의 출발점
- 대학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구조적 위기 직면, 중장기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필수
- 재정지원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4세대 대학의 역할 실현, 지역사회 및 산업 혁신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3. 향후 논의

## I RISE체계를 통한 4세대 대학 모델로의 진화

- [4세대 대학을 향한 KNU RISE] 지식의 산실을 넘어 지역, 글로벌 사회에 지속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관으로 변화

[목표] 지역발전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 동반 성장 실현

[운영방식] 지역주도 계획과 연계한 실행 및 성과 기반 관리

####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과 지역 내 역량 강화에 초점]

- 지역 주도 : 대구시 중장기 RISE계획과 경북대 특성화 혁신계획 연계
- 프로젝트 중심 : 대구시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 개발
- 성과 기반 관리 :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프로젝트 수행을 모니터링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 직업·평생교육 지원: 지역 산업 수용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지역 현안 해결: 지역소멸위기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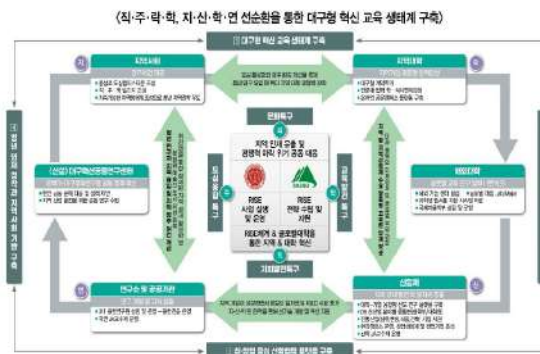
RISE체계 속  
경북대학교의 역할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 및 연계”  
“지방의 강점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  
“글로벌 과제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 협력 및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 3. 향후 논의

## I 대구 RISE 체계



※ 대구 RISE - 경북대학교 종합계획서 발제



-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50년을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추진
- [직·주·락·학·산·연 선순환] 정부·지자체 특구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선순환 실현
- [직·산·학·연 선순환] 지역 대학, 산업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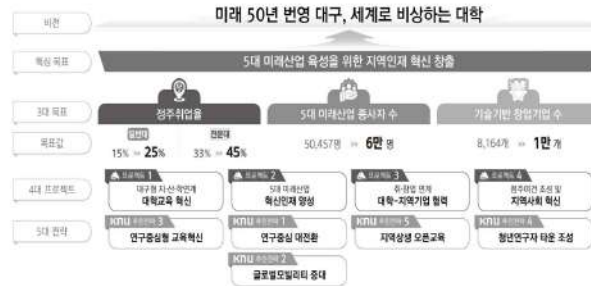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 3. 향후 논의

## I 대구 RISE 체계 - 글로벌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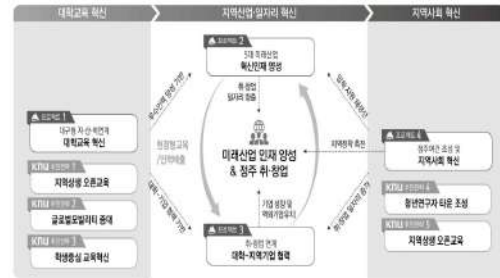
대구RISE 비전과 글로벌 대학 전략 간 연계



- 대구 RISE 3대 성과목표 및 4대 프로젝트와 글로벌 대학 5대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대학 성과가 지역단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
- 정주취업률, 5대 미래산업통사자 수,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글로벌 대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사업 방향과 일치

※ 대구 RISE - 경북대학교 종합계획서 발제

RISE와 글로벌대학 연계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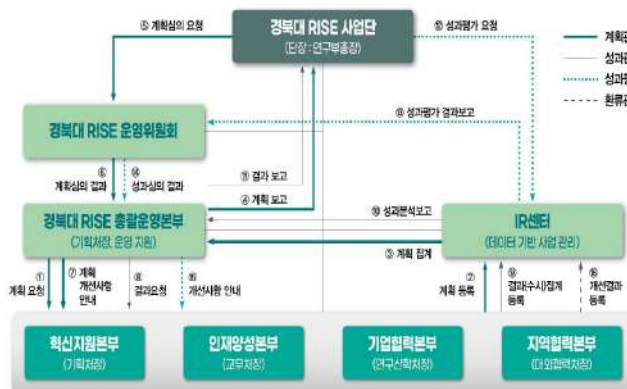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 3. 향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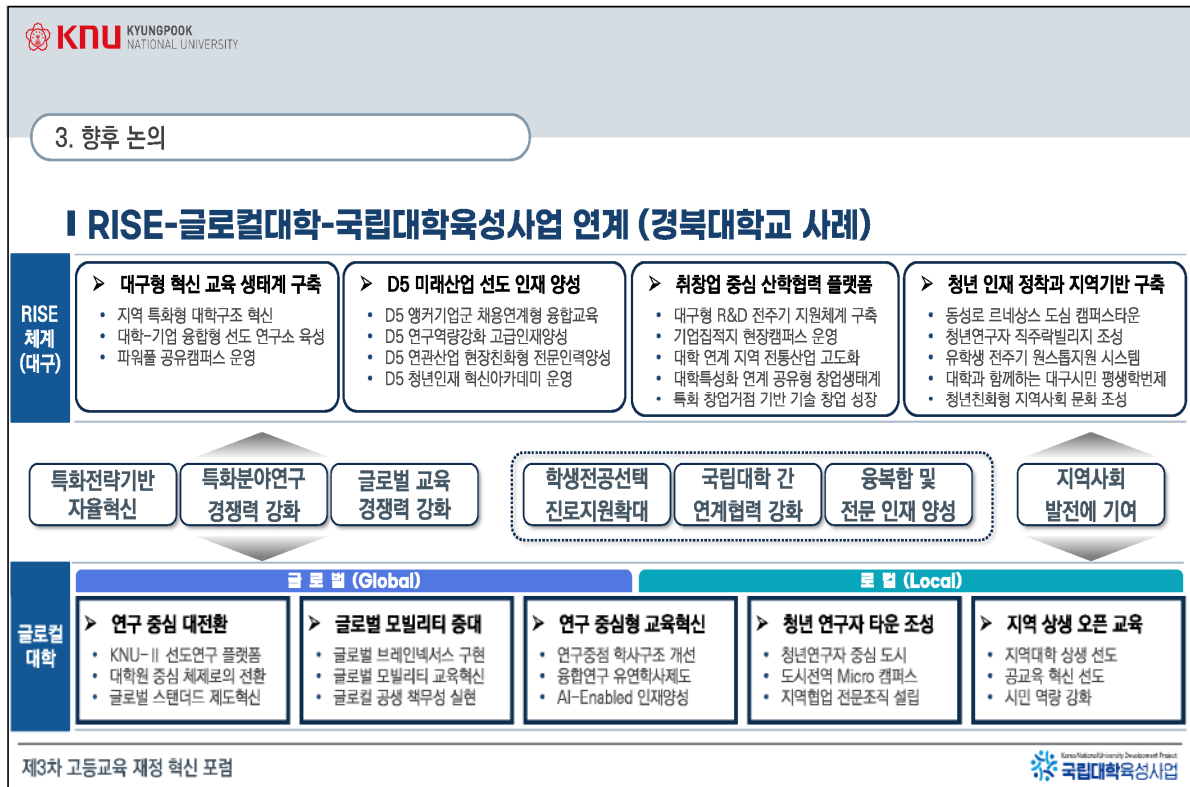
## I 대구 RISE 체계 - 글로벌 대학

경북대학교 RISE 성과관리체계



※ 대구 RISE - 경북대학교 종합계획서,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 발제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포럼



감사합니다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수도권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주제 3

발표자 박태준(한양대학교 ERICA 교수/지능형로봇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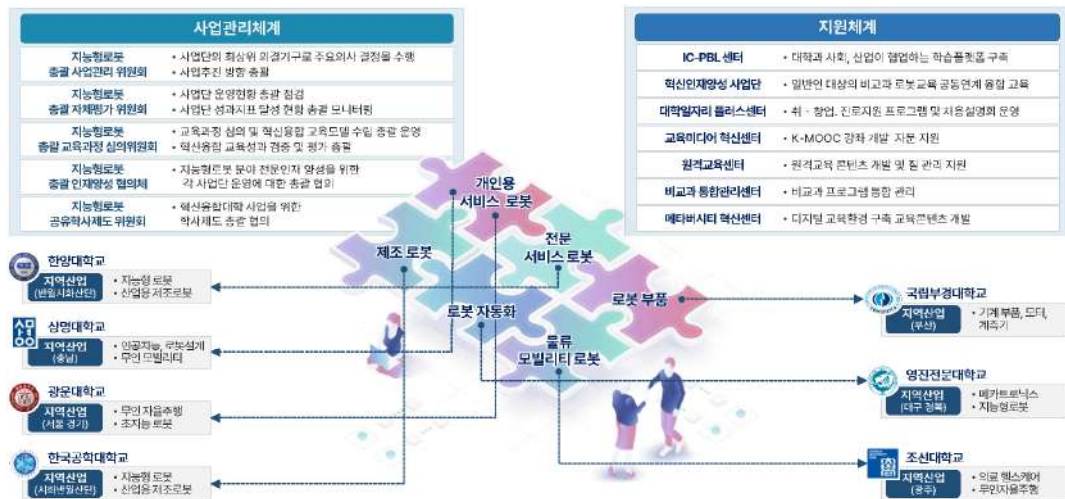






## II 사업추진체계 | 컨소시엄 단위 관리체계 구축·운영

- ✓ **사업관리위원회**(22회 개최) 중심으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공유학사제도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확립



2 / 26

## II 사업추진체계 | 컨소시엄 단위 관리체계 구축·운영

- ✓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사업관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인재양성협의체 운영 중이며  
사업단장의 **교무위원급** 위상 확보 등 본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3 / 26

## III.1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 모듈형 표준교육과정 운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모듈형 표준교육과정** 구성 및 **유연학사제도** 연계
- ✓ 표준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마이크로디그리, 부전공 및 복수전공** 활성화

운영  
실적

- 수준별 인재상 및 5대 핵심역량 기반의 수준별 모듈형(12학점 단위) 표준교육과정 편성  
\* 마이크로디그리(1모듈, 12학점) → 부전공(2모듈, 24학점) → 복수전공(3모듈, 36학점) → ...
- 4+1 복수학위제, 전공선택제 등 유연학사제도 연계를 위한 제도 개편



4 / 26

## III.1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표준강의계획서 및 공유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공동 운영**
- ✓ 총 **22개 교육과정(모듈, 12학점)** 운영으로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자 3,295명 배출**



5 / 26







### III.2 교육환경·방법 개선 | 교원 및 교육 인프라 확보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 III. 사업추진내용

- ✓ 지능형로봇 공유교육 확산을 위한 **SHARE LMS** 구축, 개선 및 공유 활용
- ✓ 실감형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위한 **텔레프레즌스 스튜디오·강의실** 공유 활용

#### SHARE LMS

- 컨소시엄 전용 온라인 강의지원시스템으로 콘텐츠 중심 플랫폼(Netflix, YouTube) 구현
- 모든 대학 학생들의 자동 출결 집계, 성과 집계 간편화 기능 지원
- 일반인 대상 강좌 시범운영(3과목, 56명)



#### 텔레프레즌스 스튜디오 및 강의실

- 교강사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여러 대학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으며 교강사와 실시간 소통 가능
- 스튜디오 3개 대학, 강의실 7개 대학 확보
- 대학 간 공동 교과목 10건 운영



8 / 26

### III.2 교육환경·방법 개선 | 교육방법 개선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 III. 사업추진내용

- ✓ **IC-PBL(WE-Meet 포함) 93교과, 대학 간 공동운영 24교과, 원격수업 23교과, 블렌디드 및 플립드 러닝 18교과** 등의 수업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지속 개선**

#### 개선 전략

-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 IC-PBL 및 WE-Meet 수업 운영의 질 관리, 성과 확산 및 환류 수행
- 교수 및 학습지원 단계별 운영체계 구축(플랫폼화) 및 운영

단계	활동 내용	주관대학역할	참여대학역할
1단계 IC-PBL WE-Meet 교수지원 설명회	IC-PBL 교수지원과 학습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설명회 준비	설명회 참여
2단계 IC-PBL WE-Meet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IC-PBL 현황 파악 및 WE-Meet 프로젝트 계획서의 질 관리	서류 취합, 현황 취합	서류 제출, 현황 제출
3단계 기초교육 및 컨설팅/ 학생 오리엔테이션	IC-PBL 참여 교수자들은 기초교육 컨설팅에 참여,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참여	기초교육 오리엔테이션 제공 및 컨설팅 진행	오리엔테이션 및 컨설팅 참여
4단계 수업 운영	각 단계에 제안된 양식에 따라 WE-Meet 프로젝트 사이트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수업 운영	양식제공 및 수업의 질관리	양식에 따라 서류 제출
5단계 수업 운영 모니터링	필요시 주관대학에서는 교과목 운영에 참여하여 수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촬영 진행	모니터링 참여	모니터링 제공
6단계 기업 연계 프로젝트 학생 경진대회	1차는 각 참여대학의 서면 심사, 2차는 발표 심사를 통해 학생 우수자 선발	진행 발표 심사 준비	서면 심사 준비
7단계 IC-PBL WE-Meet 결과물 제출	우수 학생 및 결과물을 교육부 및 대한상의 제출 / 수업 포트폴리오 제출	결과보고 취합	결과보고 제출
8단계 IC-PBL WE-Meet 우수수업 선정 및 워크숍	제출한 교과목 중 우수 수업을 선발하여 시상 및 워크숍	수업 워크숍 진행	수업 워크숍 참여

9 / 26

## III.2 교육환경·방법 개선 | 교육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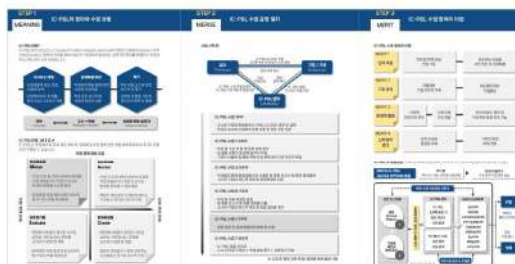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IC-PBL 체계적 지원으로 교과 운영 93건(143.1%), 이수자 3,580명(110.2%) 달성
- ✓ 텔레프레즌스 10교과(200%) 및 메타버스 14교과(155.6%) 대학 간 공동 운영

개선  
실적

- IC-PBL 기업홍보 프로세스 구축 및 플랫폼 시범 도입을 통한 수업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IC-PBL과 연계한 WE-Meet 프로젝트 46건 수행으로 수강생 1,292명 달성
- 혁신 교육방법 적용으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7건(121.4%) 및 이수자 243명(115.7%) 달성, 일반국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 33건(165%) 및 이수자 899명(299.7%) 달성



IC-PBL 기업홍보 브로슈어



IC-PBL 플랫폼

10 / 26

## III.3 학사제도 운영 | 유연 학사제도 운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모든 대학이 지능형로봇학과(융합전공) 신설·공동운영하여 전공선택제 활성화
- ✓ 학점교류 인정학점 범위 확대 및 원격강좌 수강 제한 확대

운영  
실적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지능형로봇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 도입
- 기존 전공과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표준교육과정 운영
- 컨소시엄 내 대학 간 학점교류 협정 체결로 최대 교류학점 인정범위를 졸업학점의 1/2까지 확대



## 모듈형 이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연 학사제도의 확산



11 / 26

### III.3 학사제도 운영 | 유연 학사제도 구축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모든 대학이 **9가지 유연학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칙·시행세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학 간 4+1 복수학위제** 제정 완료

구축 실적

- **공유학사제도위원회** 운영, 학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유연학사제도 구축 및 활성화
- **미래자동차 컨소시엄과 MOU 체결(2023.12.01)** 통한 컨소시엄 간 마이크로디그리 개발 추진

구분	한양대	광운대	국립부경대	상명대	영진전문대	조선대	한국공대
유연학기제 *1	① (학칙완료)	① (학칙완료)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	① (학칙완료)	●
점중 이수제 *2	●	① (학칙완료)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
복수 학위제 *3	●	●	●	●	●	●	●
공동 학위제 *4	① (학칙완료)	①	① (학칙완료)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① (학칙완료)	① (학칙완료)	① (학칙완료)
융합 전공제 *5	●	●	●	●	●	●	●
전공 선택제 *6	① (학칙완료)	●	●	●	●	① (학사규정 완료)	①
마이크로 전공제 *7	●	●	●	●	●	●	●
학점 교류제	●	●	●	●	●	●	●
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칙완료)	① (학칙완료)	●	① (운영 세칙 제정완료)	① (연계교육과정운영협약)	① (학사규정 완료)	① (학칙완료)

12 / 26

### III.4 교원-학생 참여 지원 | 교원 참여 지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모든 대학이 **교원 업적평가 반영** 등 교원 참여 유인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중  
 ✓ IC-PBL, 텔레프레즌스 등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업적평가 반영

- ✓ 승진, 승급, 재임용 등 교원 인사제도와 연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 혁신형 수업 모델 교과목에 대한 수업시수를 가중 적용



텔레프레즌스	메타버스	IC-PBL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과목 개발비 및 교과목 운영비 지원

교원 참여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공유 교육센터 설치 운영

- ✓ 지능형로봇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과 교원에 통합 지원
- ✓ 학사제도, 교수지원, 학생지원, 공동활용대학, 성과관리, 교과, 비교과의 교육콘텐츠, 행사와 예산 지원

실적 업적 평가 반영

시수 가산 인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연수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산

개발 관리 지원

맞춤형 교수법 지원

- ✓ 메타버스, 텔레프레즌스(HY-LIVE) 수업, IC-PBL, WE-Meet 모델에 관한 연수 및 컨설팅 제공 계획

혁신융합 교육 콘텐츠 개발연수 및 컨설팅 지원

13 / 26



### III.4 교원·학생 참여 지원 | 학생 참여 지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해외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지원과 같은 학습 지원, 첨단 **실습시설·장비** 제공, **성과형 및 근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동경 국제 로봇 박람회(iREX 2023) 참여 지원

- 한양대(3), 광운대(3), 국립부경대(11), 상명대(4), 영진전문대(2), 한국공대(4) 총 27명의 학생 선발
- 일본 대학과 기업의 지능형로봇 동향 공유
-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성과도출



#### 2023 세계 로보컵 대회 참가 지원

-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한양대(5), 광운대(1), 국립부경대(2), 한국공대(1)로 총 9명 선발
- 대회참가 전 기술적 난제 연구를 위한 합숙 훈련과정을 거쳐 **Technical Challenge** 우승
- RoboCup Symposium 연구논문 발표



14 / 26

### III.4 교원·학생 참여 지원 | 학생 진로성과 실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학생의 **취업·창업·진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 ✓ **현장실습 및 인턴십**, 다양한 **로봇 경진대회** 참가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한국로봇산업협회 주최 로봇채용워크 참가 지원



####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 프로그램 운영



#### 각종 로봇경진대회 참가 지원




15 / 26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 III.5 사업성과 공유 | 교과목·교육콘텐츠 공유

III. 사업추진내용


- ✓ **CO-Week Academy** 9개 강좌 개설 및 1,406명 이수(컨소시엄 간 학점교류 32명)
- ✓ **산학협력 EXPO** 로봇 교육 81명, **88로봇워크** 919명(경진대회 51명 포함) 참여



**CO-Week Academy**



**산학협력 EXPO**



**88 로봇워크**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 III.5 사업성과 공유 | 교과목·교육콘텐츠 공유

III. 사업추진내용

- ✓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정** 17건(121.4%) 운영, 이수자 243명(115.7%) 달성
- ✓ **일반국민 대상 교육과정** 33건(165%) 운영, 이수자 899명(299.7%) 달성

공동활용대학



학사정보시스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공유교육 지원센터

표준 교육과정 관리

초급모듈	교육 콘텐츠 관리
중급모듈	IC-PBL
고급모듈	유연학사제도

행정지원

수업 신청/개설 관리	교육/전선택 관리
수업 이수 관리	평가 및 성과 관리
학습활동 모니터링	인증/마일리지 관리



**SHARE-LMS**



**메타버스**



**K-MOOC**



**텔레프레즌스**

코워크 아카데미



88 로봇데이  
산학협력 EXPO

재직자 교육



국가기술자격연계  
커리큘럼 제공  
재직자 과정 운영

공유교육 지원센터

표준 교육과정 관리

초급모듈	교육 콘텐츠 관리
중급모듈	IC-PBL
고급모듈	유연학사제도

행정지원

수업 신청/개설 관리	교육/전선택 관리
수업 이수 관리	평가 및 성과 관리
학습활동 모니터링	인증/마일리지 관리



**SHARE-LMS**



**메타버스**



**K-MOOC**



**텔레프레즌스**

취업준비생/일반 성인 학습자



커리큘럼 제공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실습



## III.5 사업성과 공유 | 자·산·학 협력체계 운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확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정기적 **인재양성협의체** 운영 및 특강(14회) 수행



18 / 26

## III.5 사업성과 공유 | 자·산·학 협력 대표실적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II. 사업추진내용

- ✓ 한양대(ERICA)는 안산시 및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협회, 생산기술연구원과 **자·산·학 협력 기반 '로봇시티 안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중

대표  
실적

- 수도권 지능형로봇 전문교육시설 구축, 지능형로봇 전문자격·인증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추진
- 로봇명사특강, 로봇체험 등 추진, 관내 초중고, 일반인, 재직자 등 연간 4,000명 이상 교육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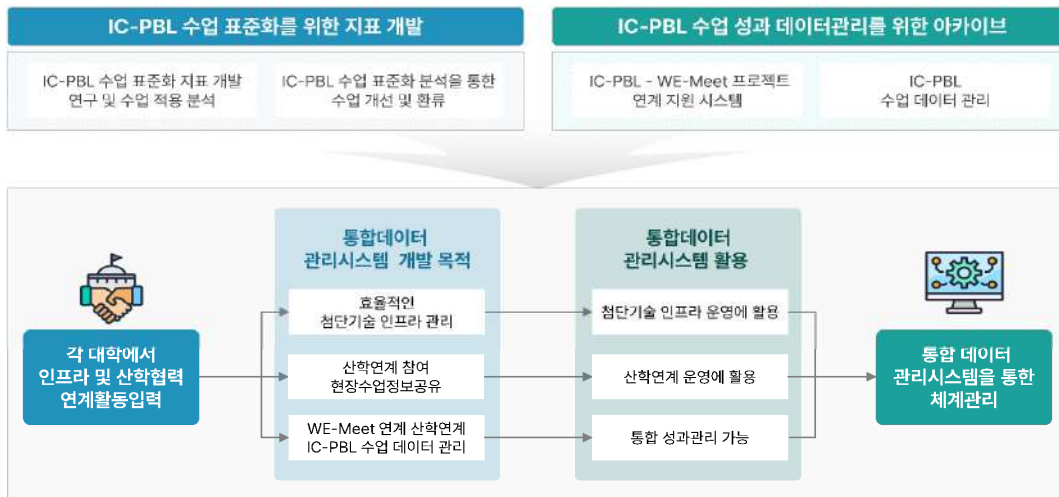


## IV.1 교육방법 및 인프라 고도화 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IC-PBL (WE-Meet) 수업 표준화 지표 개발 및 현장연계 아카이브 구축 추진
- ✓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교육방법 개선 및 교육인프라 활용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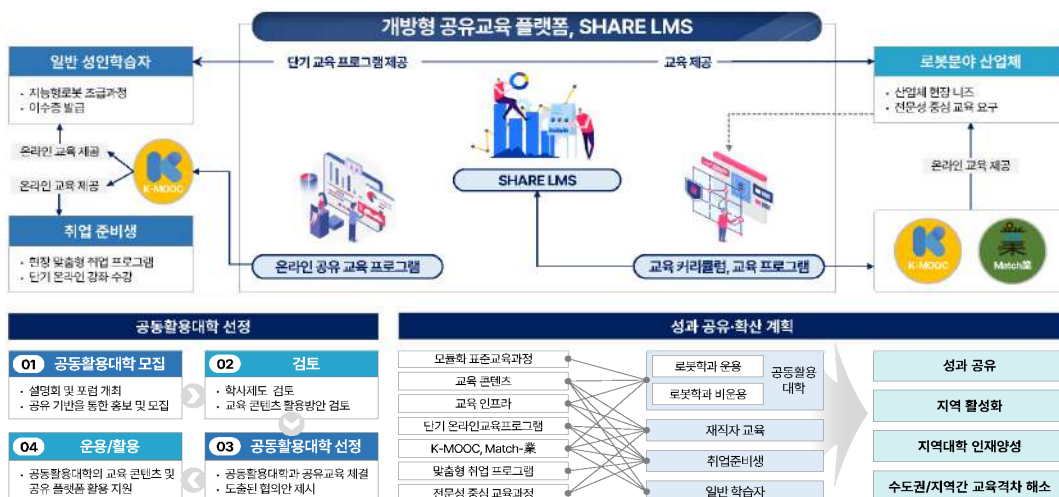
20 / 26

## IV.2 교과목 및 교육콘텐츠 공유·확산 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SHARE LMS 기반 **공동활용대학,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 성과 공유·확산 추진
- ✓ **CO-Week Academy, 산학협력 EXPO, 88로봇워크** 등을 통한 공유·확산 추진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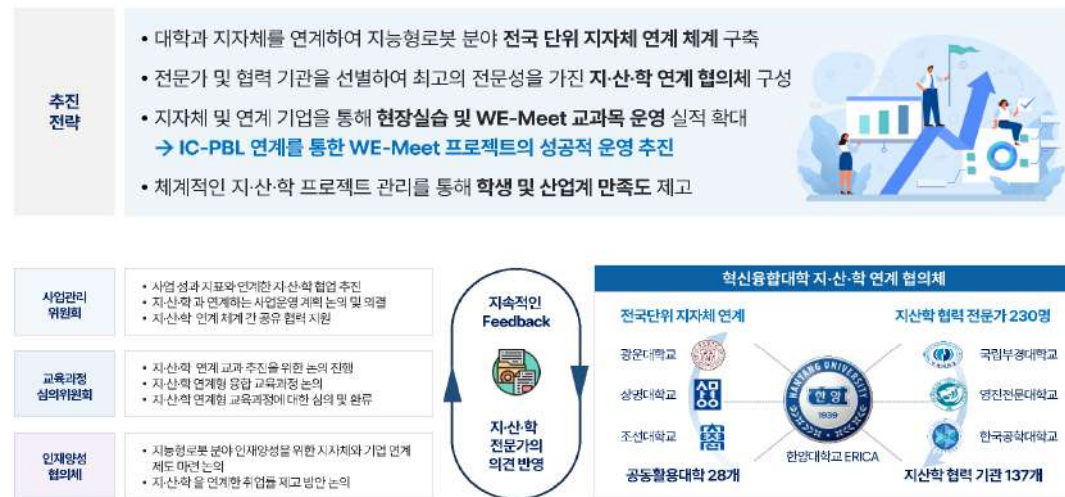


## IV.3 자산·학 협력 및 운영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개별 성과를 달성한 1단계 실적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의 자산·학 협력** 추진
- ✓ 자산·학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 반영 및 환류** 추진



22 / 26

## IV.4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활용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경기테크노파크의 플랜트2동, RIT동, 디지털전환허브 건물을 활용하여 로봇 공정자동화 및 인공지능융합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실습·교육·체험 공간 구축**

구분		1단계			2단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공간 확보	현물 (경기TP)	연면적 1,408.1㎡(플랜트2동) 2,062.4㎡(디지털전환허브) 316㎡(RIT동 1층)				
	임대 (RAITIC)	한양대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내 RAITIC 신축건물 발주 및 공사 진행			1,652.9㎡ (2027년말 완공 예정, 2028년 1월~12월 테스트 베드 구축 공간 임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2동, RIT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7 디지털전환허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로 55 RAITIC

23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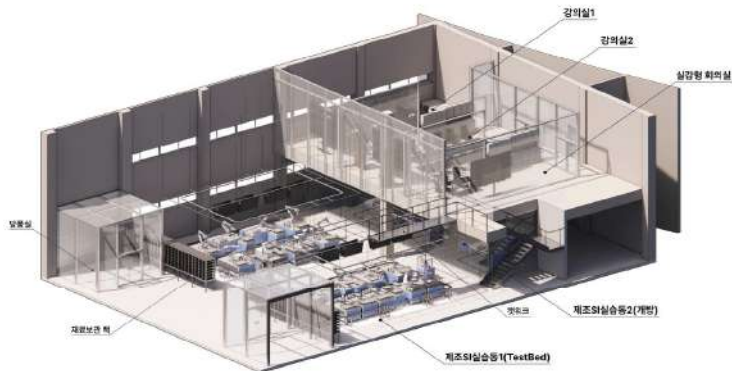
#### IV.4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활용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1층과 2층 연면적 1,408.1m<sup>2</sup>(426평) 공간 확보
- ✓ 제조로봇SI 실습실, 강의실, 행정실 등으로 구성하여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로 활용

층별 조감도



24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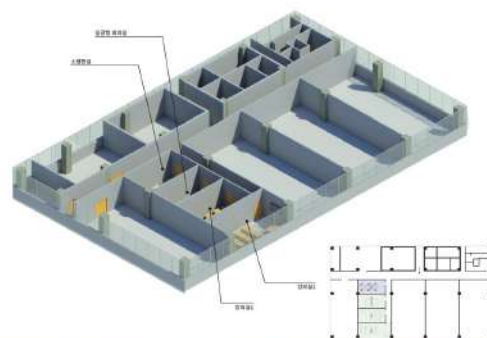
#### IV.4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활용계획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10층과 11층 연면적 2,062.4m<sup>2</sup>(624.9평) 공간 확보
- ✓ 서비스로봇SI 실습실, 인공지능 실습실, 강의실, 행정실 등으로 구성

층별 조감도



서비스로봇SI 실습 리빙랩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  
**IV. 사업수행계획**

### IV.4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활용계획

- ✓ 지능형로봇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으로 로봇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필요
- ✓ 제조·서비스로봇SI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능형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

#### 제조/서비스로봇SI 실무인력 양성 및 로봇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수요-공급 생태계 기여

##### 미래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 제조로봇SI 인력양성

- 제조로봇 특성화 SI 인력
- 기간산업생태계 구축
- 노동 집약적 작업 감소
-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지원
- 업무 부담 완화 산업재해 감소



### 로봇직업교육센터

##### 신산업 신기술 분야 서비스로봇 분야 선도

- 로봇SI 융합 서비스 선도
- 서비스로봇 시장 창출
- 서비스로봇SI 인력
- 다양한 기술 융합
- 국내외 밸류체인 창출

#####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 제조/서비스로봇SI 전문가 양성
- 실무 능력 강화
- 지·산·학 협력 확대
- 제작자 로봇부트캠프



##### 로봇 SI 전문인력을 통한 첨단로봇기술 상용화, 창업

- 로봇SI 시장 진입 및 사업화
- 로봇클러스터 범용SI
- 제조/서비스업체 협력
- 생산 라인 최적화
- 효율성 개선 가능성 탐색

지속가능한 로봇클러스터 생태계

26 / 26



# 감사합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양대학교 ERICA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 Hanyang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지방 사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

주제 4

발표자 권수태(전주대학교 교수/교육부총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전주대학교 변화와 혁신사례



전주대학교 교육부총장 권수태 2025.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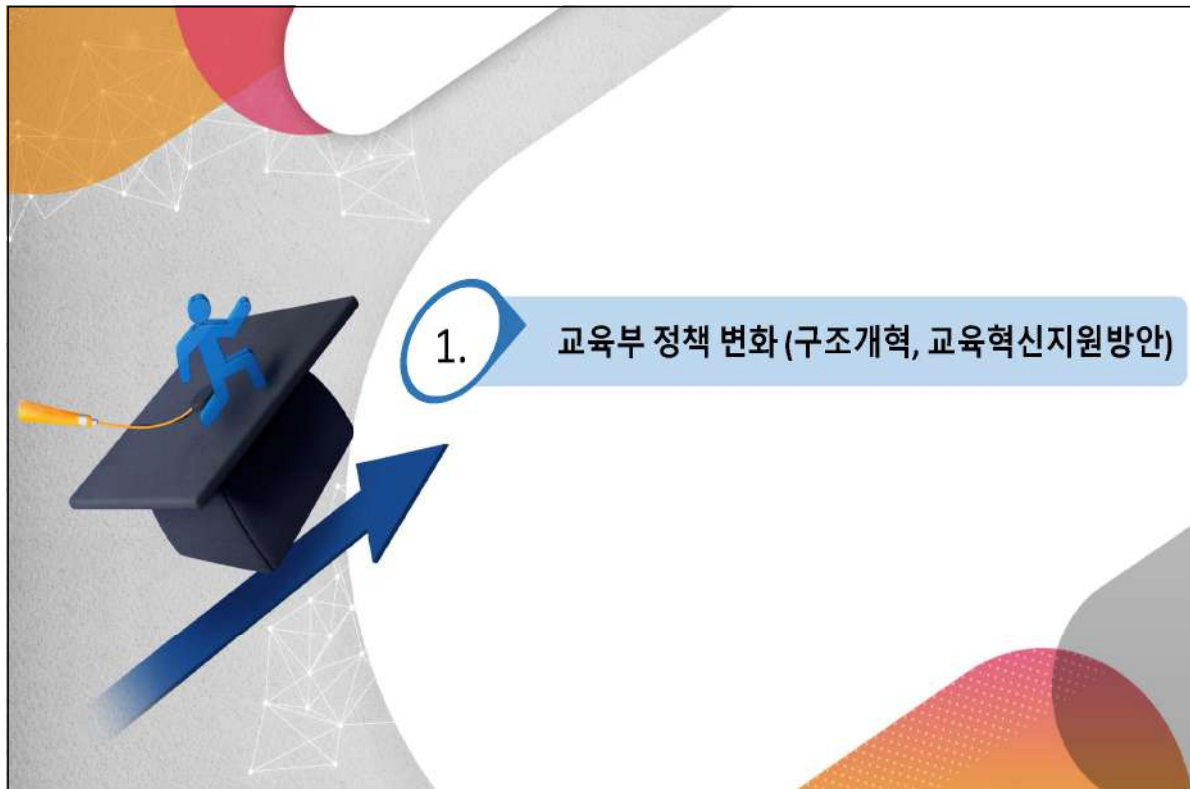
목 차

수업소과를 가꾸는 곳 —  
전주대학교

1. 교육부 정책 변화 (구조개혁, 교육혁신지원방안)
2. 전주대학교의 변화와 혁신사례
3. RISE체계의 대학혁신 고도화







## 1. 교육부 [구조개혁-2018.12]

수석교수님께서는... 전주대학교

### 고등교육 발전방안

**연혁**

- 한국의 고등교육은 1,900년대 초 전문학교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해방 이후 급격한 양적 규모 확대로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기에 기여
- 현재 미래수요에 대응한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

고등교육 환경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mismatch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실질적 형평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IoT, ICT 기반 제4차 산업혁명</li> <li>20년째 710만개 일자리(사무, 경영, 제조업)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서비스, 금융, 경영, 컴퓨터, 수백, 방송, M&amp;E, 세계경제포럼, 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학령인구 (1991 594,151명 → 2031 440,53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실업률 11.9% 9.2% → 11.9% 9.6% → 17.9% 9.9%</li> <li>사업제 노동력 부족 현상 (300만미만 기업) 12.6% (300만이상 기업) 4.6%</li> <li>청년 15만, 노동시장에서 미흡(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고졸6만, 초중수준 113만명 (전인17, 고등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대 비중 83.9% (18)</li> <li>완전부담 공교육비 GDP0.9% → 0.4% (OECD)</li> </ul>	

**정책 방향**

고등교육의 자율성	고등교육의 질 제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국제경쟁력 향상 필요 (2011~2019) 1.8, IM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적정규모 조정</li> <li>청년 취업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재정 공적책임 확대 (GDP0.9% → 1.1% OECD)</li> </ul>

**고등교육 정책 수 및 과제**

대학 서열화 아닌 특성화·다양화	고등직업교육 수요 증가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 비중 28.9% 18)

**대학혁신 지역발전**

**정책 기조 관련 점**

학제	국립대학 학 사립대학의 역할	(국립) 기초학문 육성 (사립) 시장수요 중심
재정	일반대학 학 전문대학의 역할	(일반대) 교육·연구중심 (전문대) 직업교육 중심
상징	국가의 공적 부담 학 사적 부담	(고졸) 정부 재정지원 확대 (사립) 학생·학부모 부담
규모	정부 학 시장의 역할	(정부) 폐교·통폐합 (시장) 학생·학부모 자율 축소
조정	폐교 학 학교별 규모 축소	* 국립대와 사립대 간 비중 조정
질적	대학 유형별 특성화	(학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
조직	학문 영역별 특성화	(학생) 학생정원 축소, 외국인유학생 유치 등
기회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	일반대 전문대, 교육·연구·취업중심 등 역할 구분
균등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록금 감면 등	대학별 강점분야 발굴 (예)정복대 IT, 경상대 BT

**현재 추진 정책**

[수원성 촉진]	[취업 및 직업교육]	[공공성 및 형평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재정 지원 (대학 혁신 지원)</li> <li>특수 목적 지원 [BK21+, LINC+]</li> <li>대학기본역량진단</li> <li>학술연구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재정 지원 [전문대학 혁신 지원]</li> <li>산학연협력 [LINC+] 청년 창업 지원</li> <li>선취업 후진학</li> <li>조용 성년 취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대 육성사업</li> <li>국립대 네트워크</li> <li>공영형 사립대</li> <li>사학 비리 근절</li> <li>폐교대학 청산 지원</li> <li>국가장학금 지원</li> <li>지역 감소대학 육성</li> </ul>

4

## 1. 교육부 [교육혁신지원방안-2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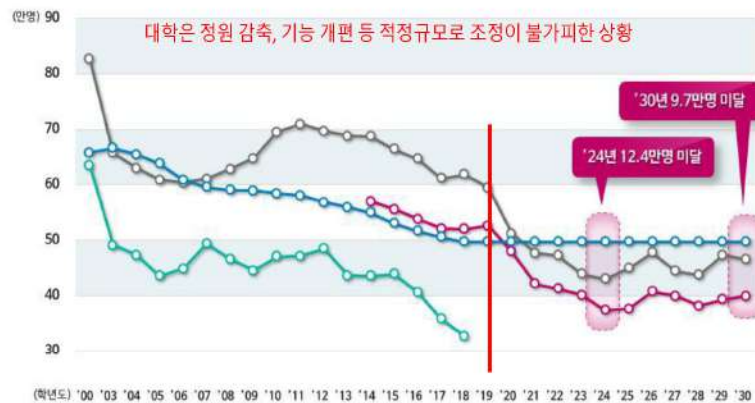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 대학교육 환경변화

## 학생인구 급감 등 인구구조의 변화

○ 학령인구(만18세)    ○ 입학 가능 학생수 추정    ○ 입학정원    ○ 출생아 수



## 1. 교육부 [교육혁신지원방안-2019.8]

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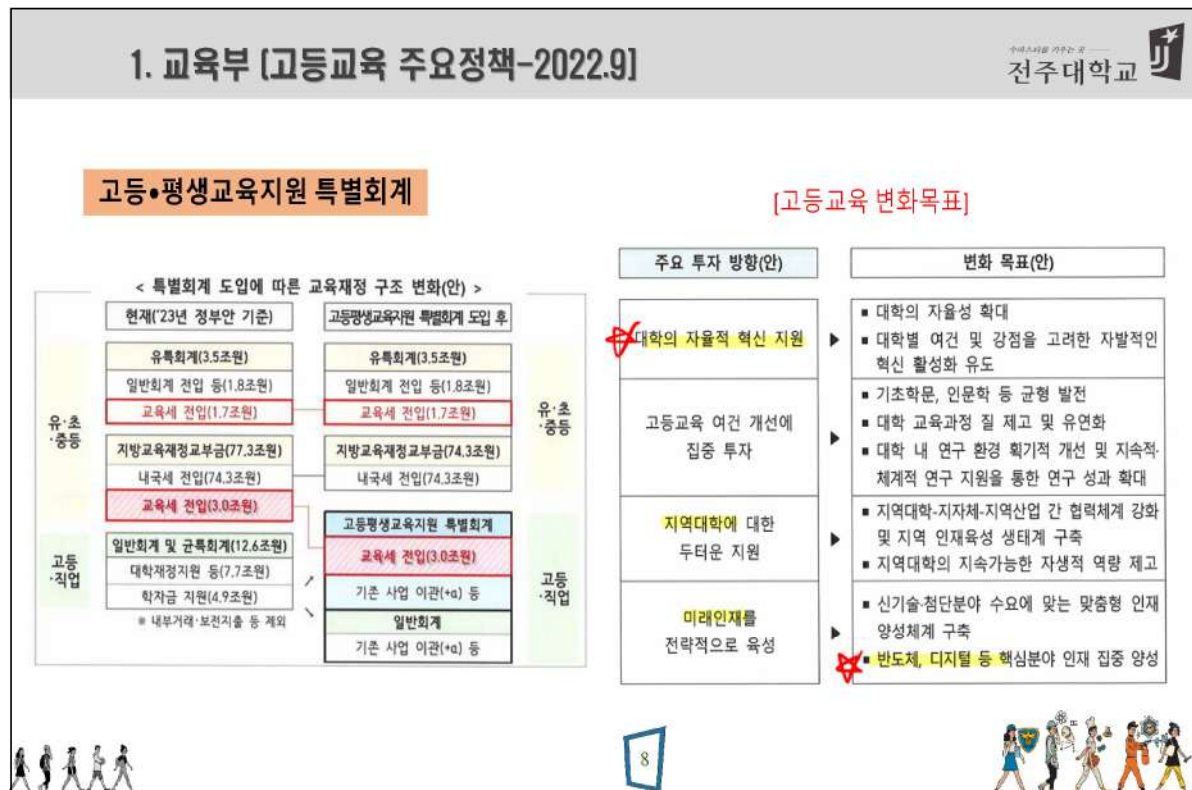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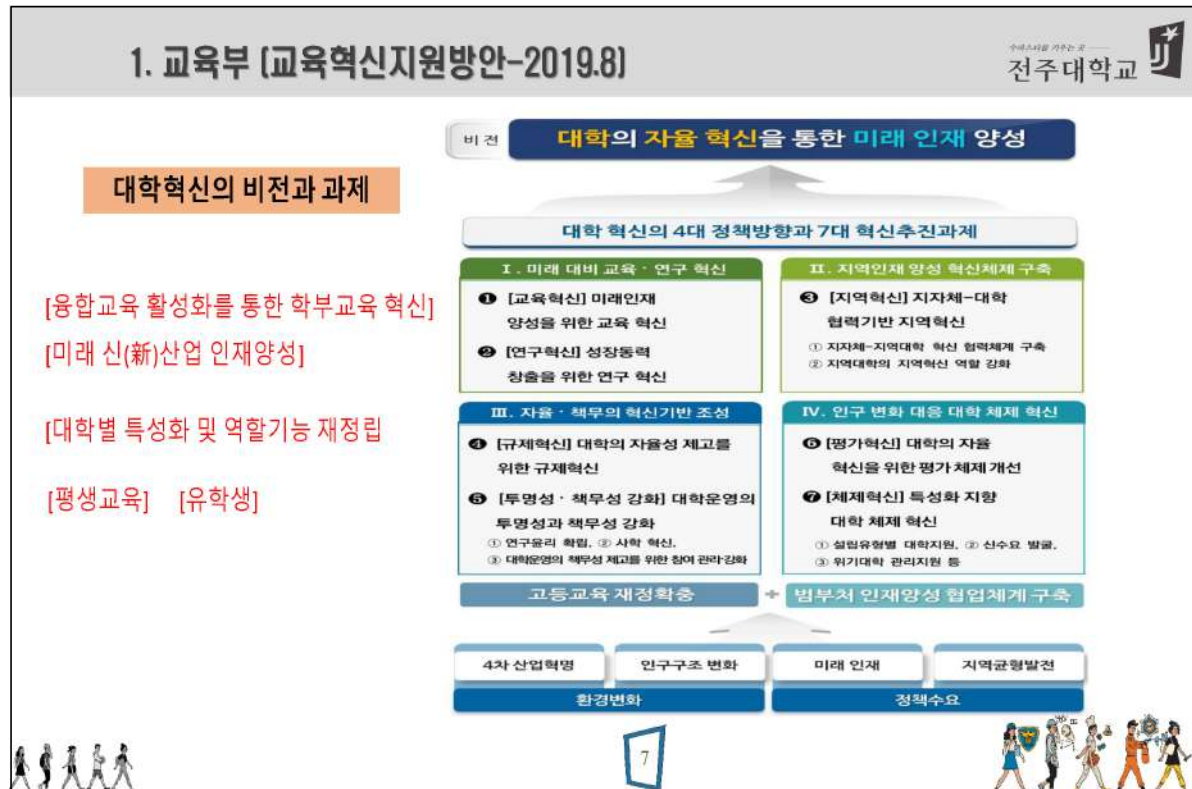


## 중장기 대학정책 방향

기회 확대	»	질적 제고
확일성·강직성	»	다양성·개방성
수도권 중심	»	지역 균형
정부 주도	»	대체 자용

⇒ 대학의 체질 및 고등교육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







## 1. 교육부 [고등교육 주요정책-2022.9]

수업소요시간 10분 —

전주대학교

### 지방대학 지원 방안 등

**지역대학 육성 → 지역위기 극복 및 상생**

- 청년의 지역 정주 →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사회
-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 지역 산업 균형 발전

### 국가 인재양성 → 경제·산업 도약

- 인재 mismatch 최소화 → 국제사회 4차 산업혁명 패권 경쟁 주도
- 고부가가치 산업 선점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

[고등교육 분야 규제혁신 방안]

- 사학 재산규제 완화, 세제지원확대, 4대요건 규제혁신, 대학평가, 한계대학 퇴로

[지방대학 지원 방안]

- 재정지원확대, 지역중심 지방대학 혁신체계 구축, 국제화 지원, 산학협력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9

## 1. 교육부 [고등교육 2023]

수업소요시간 10분 —

전주대학교

### 재정 지원 계획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 추진 전략

- 대학 혁신 역량 제고 지원
- 연구 혁신 지원
- 산학연협력 및 특성업 혁신지원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 고등교육 다양화 지원
-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 및 체제 개선 지원
- 고등교육 체제 개선 지원

#### 주요 추진 과제

-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 4단계 두뇌한국 21
- 인문사회, 이공 분야 등 학술지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증화 지원
- 취창업 지원 강화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권역별 반도체 중점영구소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마이스터대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국가장학금 내실화
-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
- 국립대학 육성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 사학혁신 지원
-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매뉴얼 운영
- 친단 거점 및 한계대학 체계적 관리
-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가능 강화

###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비전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목표	상징	복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정과제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달라지는 모습	
82. 모든 교육으로 양질의 학습환경	① 학습만능 단 환경도 놓치지 않는 <b>개별 맞춤형 교육</b>	①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② 학교교육력 제고 ③ 교사혁신 지원체계 마련	→ 교육의 본질에 입문해 깨어나는 교실	<b>AIDT</b>
84. 국가교육책임제 2.0으로 교육격차 해소	② <b>가정·마을·사회</b> 를 아우르는 <b>교육공동체</b>	④ 유보통합 추진 ⑤ 돌봄학교 추진	→ 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b>교육발전 특구</b>
85. 모든 대학이 글로벌 혁신의 선봉자	③ <b>지역혁신</b> 을 기반으로 <b>지역을 살리는 교육</b>	⑥ 과감한 규제혁신 ⑦ <b>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b> ⑧ 학교시설 확충화 지원	→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	<b>지방대학 활성화사업</b>
86. 100만 디지털 인력양성	④ <b>신산업</b> 을 선도하는 <b>인재양성</b> 에 <b>신속히 대응하는 교육</b>	⑨ 혁신 청년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담협의체 운영	→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룰 인재양성	
91. 교육개혁 입법	⑩ <b>리빙에이티브</b>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92. 추진체계	수령권 협력 파트너십 • 전략적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 국민 소통 활성화			

10

# 1.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 & 2025]

수업시간을 가두는 곳  
전주대학교

2024

비전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목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추진방향

중점과제

난제 해결

①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①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② D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저출생 위기 대응

②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③ **교과**를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④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⑤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③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⑦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⑧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지역 성장동력 창출

현안 과제

⑨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⑩ **사교육 카르텔** 역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2025

비전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

목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3대 분야

정책방향

핵심 추진과제

국가책임 교육·돌봄

① 출발선 평등

○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  
○ 늘봄학교 확산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② 사교육 입시 부담 완화

○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반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고교교육 환경 조성

③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생맞춤융합지원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두터운 지원  
○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④ 지역 격차 해소

○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 대학이 성장동력이 되는 지역의 변화  
○ 평생학습으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

⑤ 청년 성장 지원

○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 육성  
○ 학자금 및 주거 지원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일자리 연계로 취업준비 부담 경감  
○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

추진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 선도

11

지원체계

정책 소통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연계

#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023]

수업소요시간 40분

전주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혁신 인재양성 기반 강화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지역인재의 지역 취·창업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증가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도심융합특구)	지방대도시에 거점 복합 개발
지방 문화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문화특구)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목적: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목표

추진 방향

성과 지표

유아돌봄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출산율 상승

조·중·고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대학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12

## 1. 교육부 (AIDT)

수업소요시간 가중치 반영 — 전주대학교

###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교사 1인 ↔ 학생 다수

“1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 학습 체제”

### 디지털 기술의 발전

Data Science의 적용

교사 ↔ 학생

AI 디지털 교과서

**학** 생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맞춤 학습

**교** 사

데이터 기반 지도, 인간적 유대와 조연, 적성맞춤 진로상담

**학** 부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 추진배경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 필요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가능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환 요구 증대

구분	현재 (2022-2024년)	도입 (2025년)	확산 (2026년 이후)
2022 개정교육과정	직물 중대 지원	직물 (조3-4, 중1, 고1)	직물 (조5-6, 중2, 고2 → 27년 : 중3-고3)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대안, 표준 제공	직물 (조3-4, 중1, 고1) (2025년 1학기)	직물 (조5-6, 중2 → 27년 : 중3)
		수학, 영어, 정보 + 8	과학 추가
교원	TOUCH 교원 (23년 : 400명 → 24년 : 800명) 대상 교원의 40% 권역별 100% 지원	TOUCH 교원 1,500명	TOUCH 교원 2,000명(26년)
디지털 인프라	다메이스 보급-임대 (23년 : 71만 151명)	1만 1 다메이스 (조3-4, 중1, 고1)	1만 1 다메이스 (조5-6, 중2, 고2/26년 → 중3/27년)
	유·무선망 점검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현장 파견·역량	시범 시도교육청 (23년 : 7개 → 24년 : 17개)	17개	17개
	선도학교 (23년 : 300교 → 24년 : 700교)	추가 확대	추가 확대

13

## 1.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3)]

수업소요시간 가중치 반영 — 전주대학교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력 이 중요한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지자체 참여 강화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학성화 사업

[ '23 ]

고등평생교육 특별외계 (9.7조원)

연구·개발(R&D)

+

경쟁비

+

재정지원/사업

약 5,000억원  
(※ 연계예산 3,600억원 포함)

➔

[ '25 ]

고등평생교육 특별외계 (9.7조원 이상)

연구·개발(R&D)

+

경쟁비

+

재정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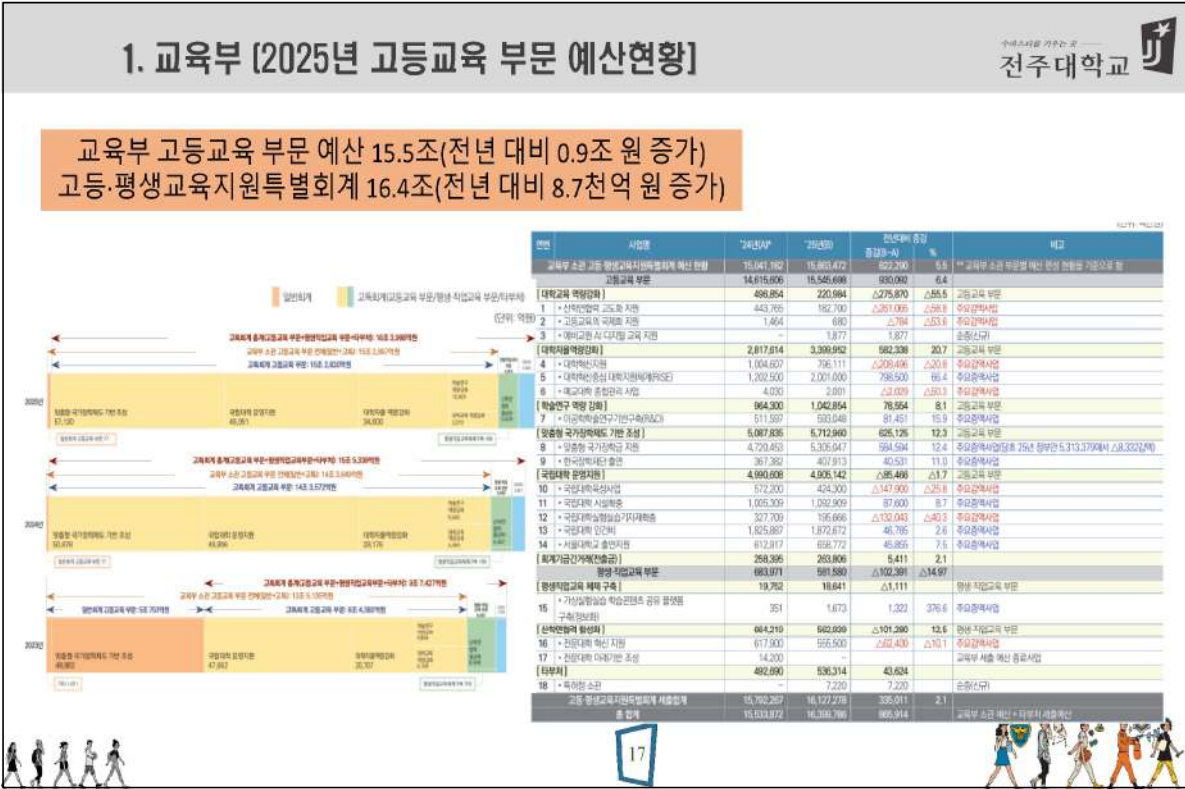
2조원 + 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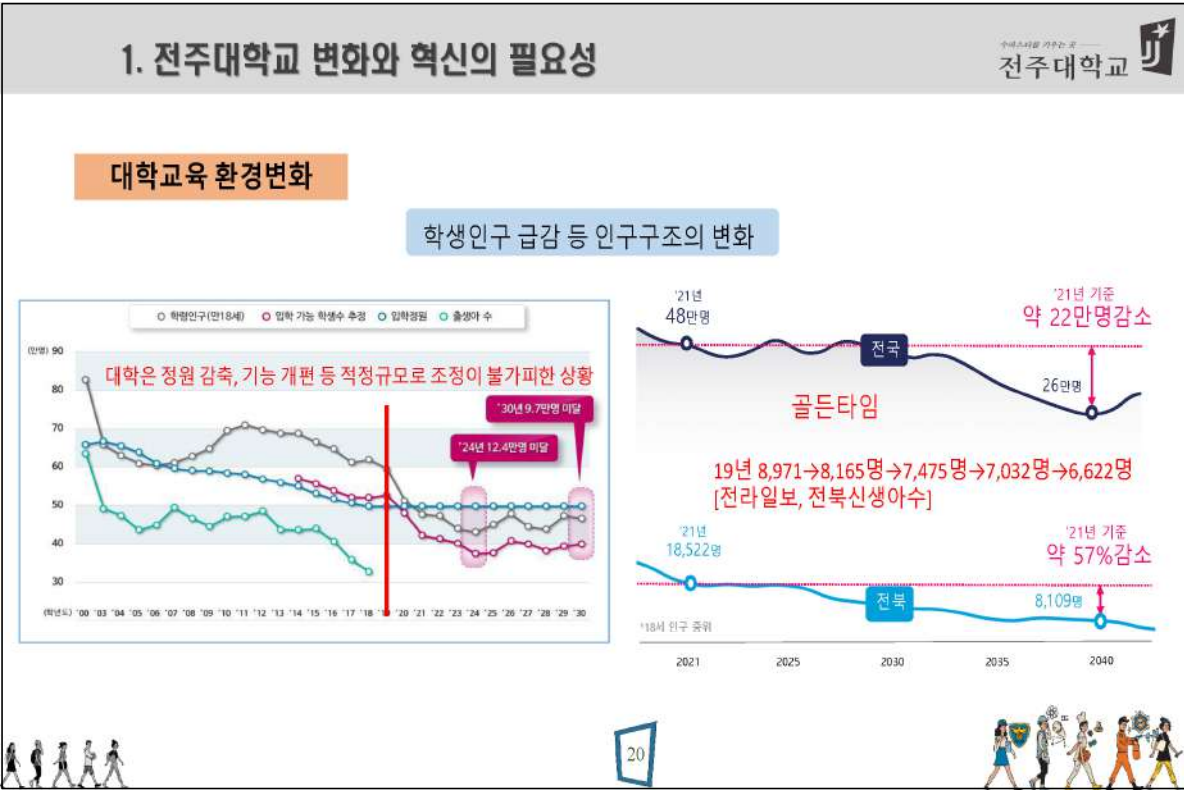
RISE 통합 예산

14









## 1. 전주대학교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수업소리를 가꾸는 곳

**전주대학교**

### 현재 상황

신입생충원율	적정규모화
중도탈락율	학생선택권
취업율	융합교육
재정현황	기초소양교육
교직원 능력	정주인력

교육부

학생

기업체

지자체

지역사회

### 미래 모습

REAL WORLD!!!

가치와 철학

지속가능

존재가치

21

## 2. 전주대학교 혁신 방향

수업소리를 가꾸는 곳

**전주대학교**

2019슬로건

Be#er together

함께하는 교육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함께하는 대학을 표방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행정시스템 등을 **학생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함

2020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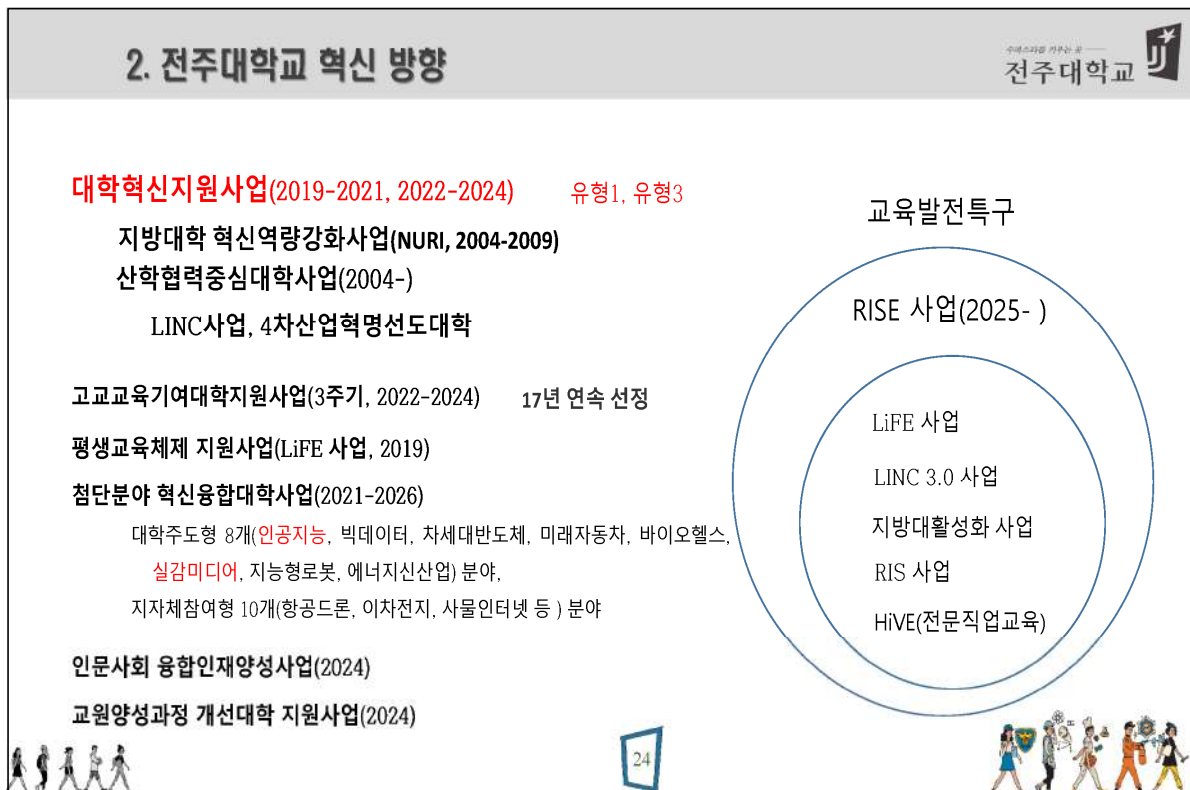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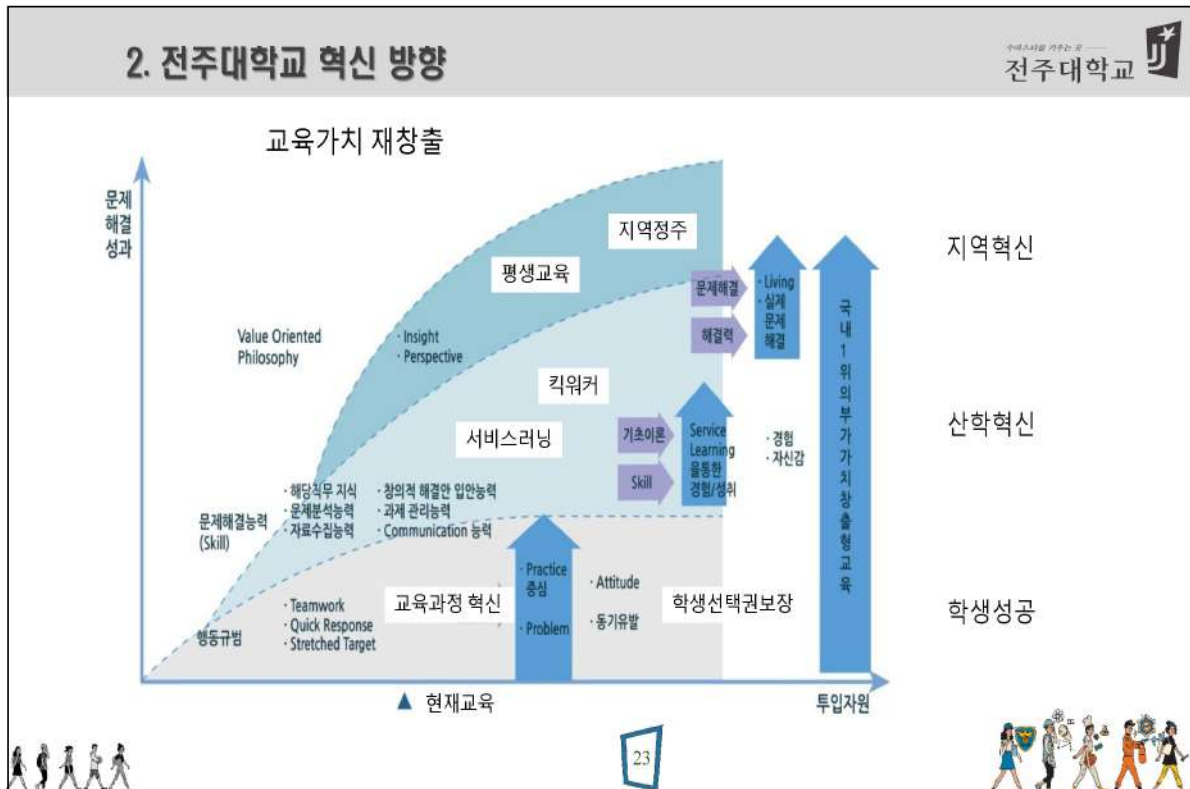
Dream Together

지역과 함께

학생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과 발전**의 도약을 준비하며 지역의 교육과 문제해결 등 상생과 협력에 집중하는 한해가 되기를 원하는 의지를 표명

22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_대학혁신지원사업

전주대학교



## 대학혁신지원사업

2018년도

대학혁신  
Pilot 사업

2019년도 ~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1주기

교육혁신 산학혁신 기타혁신

2022년도 ~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교육혁신 평생교육혁신  
산학혁신 AI기반 가치혁신

25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_대학혁신지원사업

전주대학교



## Together

## 01. Hands On Steps | 1~2학년

- 전공 관련 현장 체험 또는 진로 관련 박람회 견학
- ex. 게임콘텐츠학과: G-STAR 2023 견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매일유업 견학

## 02. Service Learning | 3~4학년

- 학습내용을 지역사회 실천현장에서 적용, 경험 이바지
- ex. 한식조리학과: 소외계층 도시락 전달, 음악학과: 지역주민을 위한 패밀리 콘서트

## 리빙랩 기반 특성화 인력양성

- 특성화 분야 융복합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기반의 혁신적인 경험학습 체계 구축

## 03. TBL | 1~2학년

- 전공교과목 관련 팀 기반 학습 수업
- ex. 전기전자공학과: 과목(기초설계)주제(그무동력자동차) 설계

## 04. 2PBL | 3~4학년

- 문제해결을 위한 팀 기반 학습 및 특정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 05. NIE

-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및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 성적기준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5~10명 소그룹 문명



## 06. 학습모임 | 선후배, 수업외, 유학생

- 튜터 1명과 튜티 3~6명으로 구성
- 총 5회 상 문명, 화당 2시간 이상 활동



## 07. 학과맞춤형 프로그램 | 1~4학년

- 학과 맞춤형 진로 세미나, 전공관련 특강 등

## 08. 취업 특화 프로그램 | 1~4학년

- 자격증 취득반, 국가고시 준비반 등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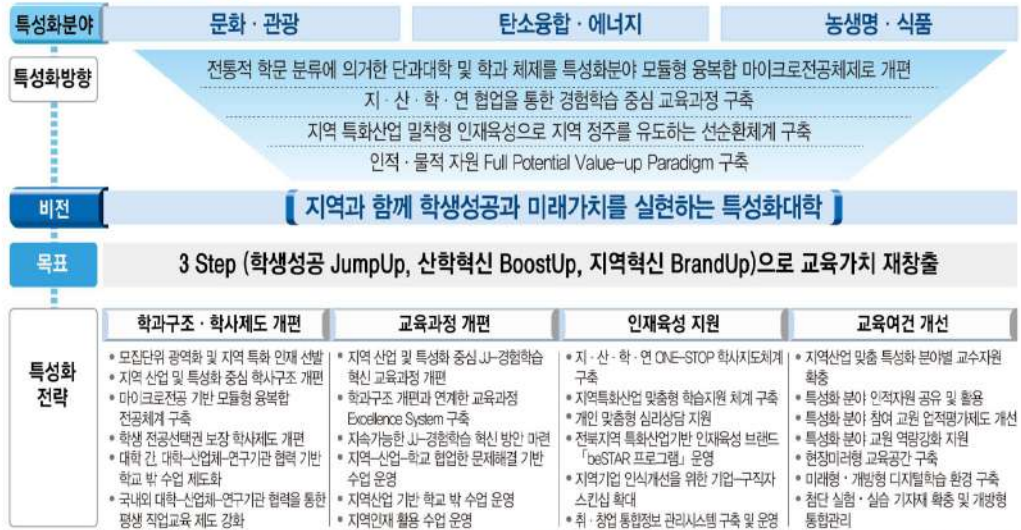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_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전주대학교



## 지방대학활성화사업

특성화분야 18개 학과 참여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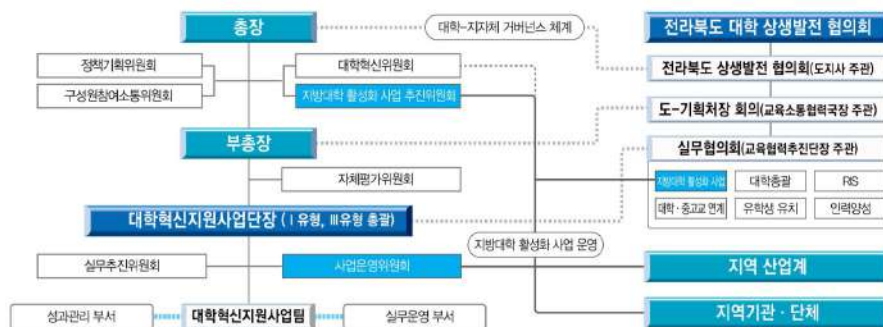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전주대학교



✓ 지자체-대학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학의 특성화 추진 및 지역혁신 선도를 위한 대학의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지·산·학·연 협력 특화 프로그램인 '미래전북포럼(Future Jeonbuk Forum)' 운영 정례화



28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_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수업소통 가치있는 곳



비전

【다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특화 대학 JJ+】

LIFE

목표 빅데이터 기반 "일터순환형" 평생교육 상시플랫폼 구현

전략

1 일터학교 순환형  
교육과정 개편2 평생교육 지향  
학사운영 체제전환3 창의와 경험지향  
비경계 융합교육4 지역혁신 인재육성과  
지산학 동반성장주요추진  
과제

비학위과정 브랜딩 직무지향 재/항상교육 개설	장단기 교과 교외개방 학습경험인정제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교육 경험 지향 현장 교육	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활성화 교내 학습인프라 개방·공유
일터기반 직무교육 개설 재직자 학생성공 모델 창출	대학간 교육 협력 실현 평생교육 중장기 비전수립	성인·학령기 통합 교육 통합교육 학부제 실시	지역 혁신 인재 육성방안 평생교육 성과공유 외화

✓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추진



29



## 3. 대학 혁신방향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추진\_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수업소통 가치있는 곳



✓ [LiFE 1.0-2.0-RISE] AI Coaching기반 학생성공 생태계 구축

## AI Coaching기반 학생성공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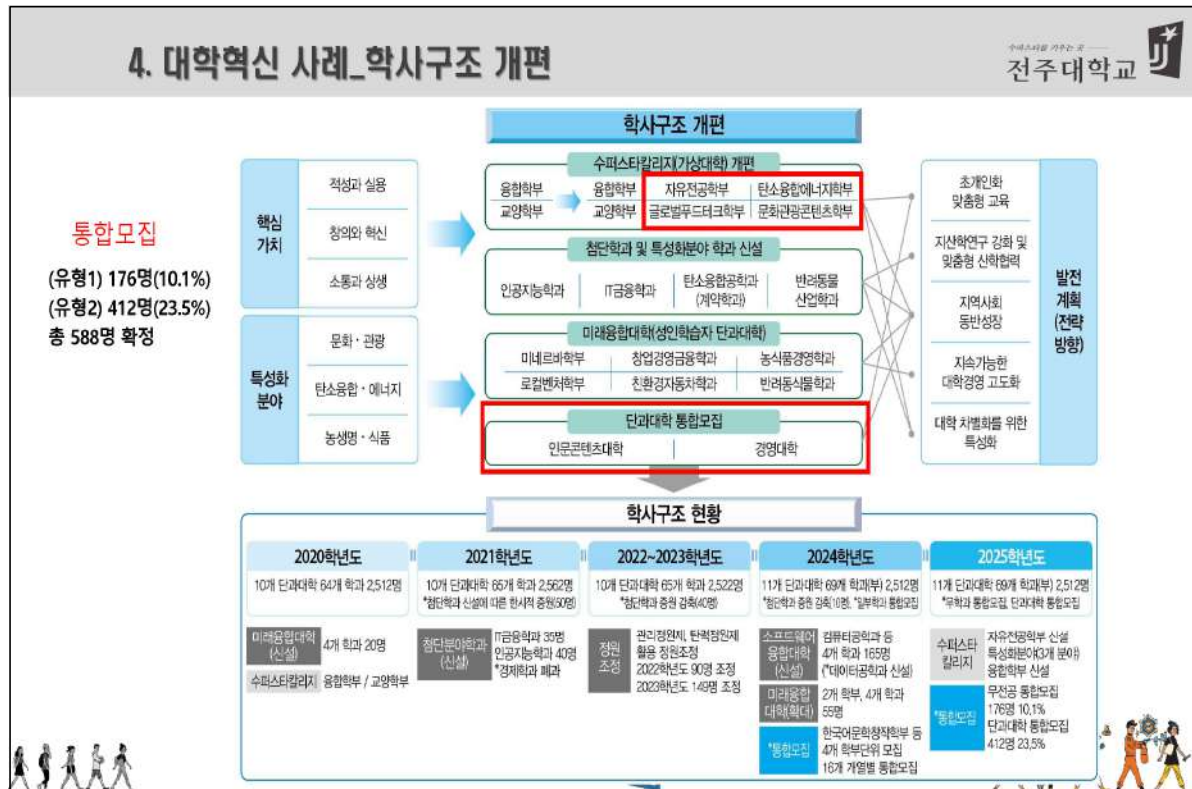
교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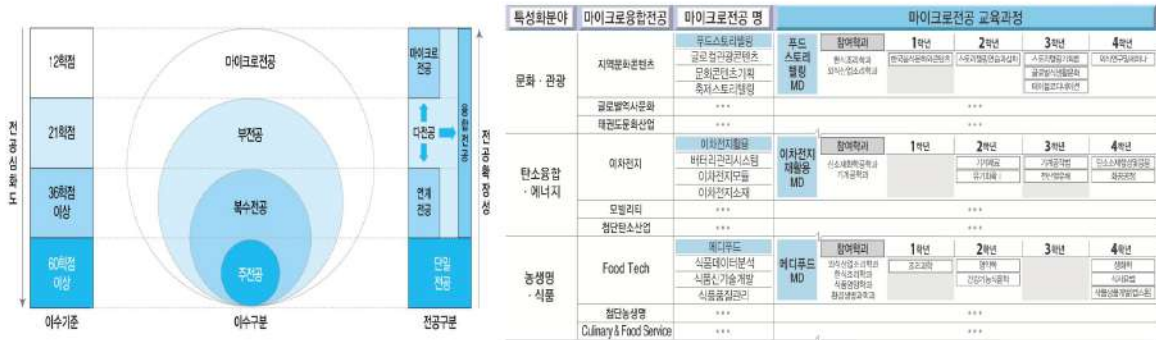




## 4. 대학혁신 사례\_교육과정 개편

『학칙』 제29조(교육과정 이수) ① 학생은 입학 또는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의 심화과정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1.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2.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 3. **마이크로전공(2개 이상)**



✓ 9개 연계전공, 31개 융합전공, 135개 마이크로전공 개설·운영 중

## 4. 대학혁신 사례\_학사제도 개편

## 학사제도개편

## 전과전면허용

(2022.08.31. 개정)  
-전과 선발 인원: 입학 정원의 20% → 30%  
-학년별 전과 취득학점 자격 구간 삭제

→

(2023.11.19. 개정)  
-전과 선발 인원: 입학 정원의 30% → 제한 폐지(100%)  
-학과별 전과 전형 절차 폐지(사범 대학 및 보건계열학과 제외)

## 협동수업 제도 신설

『학칙』 제31조(수업) ⑤ 협동수업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의 장소에서 협동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9.01.>

## 집중이수제 및 다학기제 유연화

『학칙시행세칙』 제3조(유연학기제) ① 「학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연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전공)는 ... (이하 생략)

제4조(집중이수제) ②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는 수업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 계절수업은 2주 이내 2. 정규학기 수업은 5주 이상 8주 이내

## 4. 대학혁신 사례\_학사제도 개편

수업소요를 지원하는  
**전주대학교**

**학사제도개편**

국내외 공동학위과정 운영

**「학칙」 제23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③ 본교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양 대학이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내·외 대학 간 복수(공동) 학위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03.01.>

학습경험인정제 전면 확대 제도화

**「학칙」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총장은 학생이 교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관련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개정 2024.02.29.>

교내·외 검직 활성화

「전임교원의 검직에 관한 규정」 제3조(검직임용)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교내 검직교원(이하 “검직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35

## 4. 대학혁신 사례\_학생성공을 위한 학사지도 및 관리

수업소요를 지원하는  
**전주대학교**

학생성공 기존 정의/지표/요인/학생성애주기프로세스 도출

### 전주대학교 학생성공

전인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함양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나아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

- 품성·지성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
- 적성과 역량에 따른 진로개발을 통해 학생 개인의 목표 달성
-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학업성취
- 경험기반의 실용적 교육을 통한 자기성장
- 학업지속과 학위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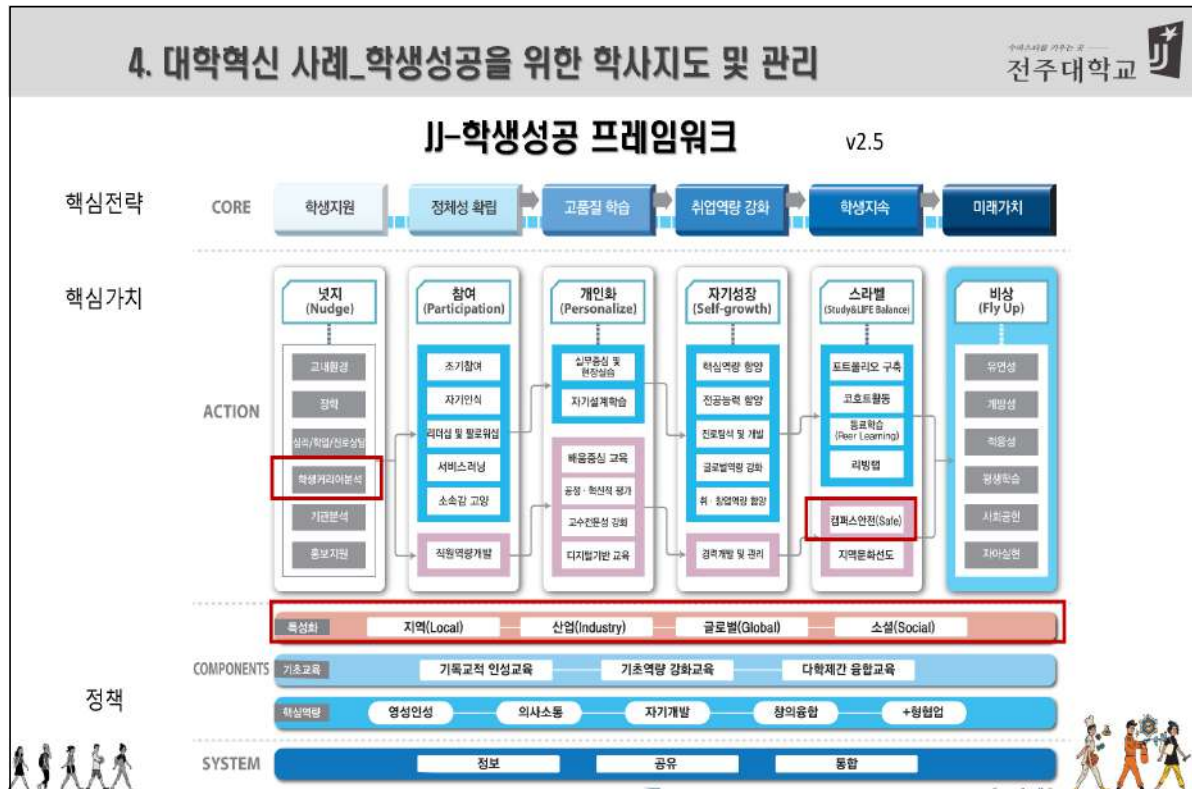
학생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외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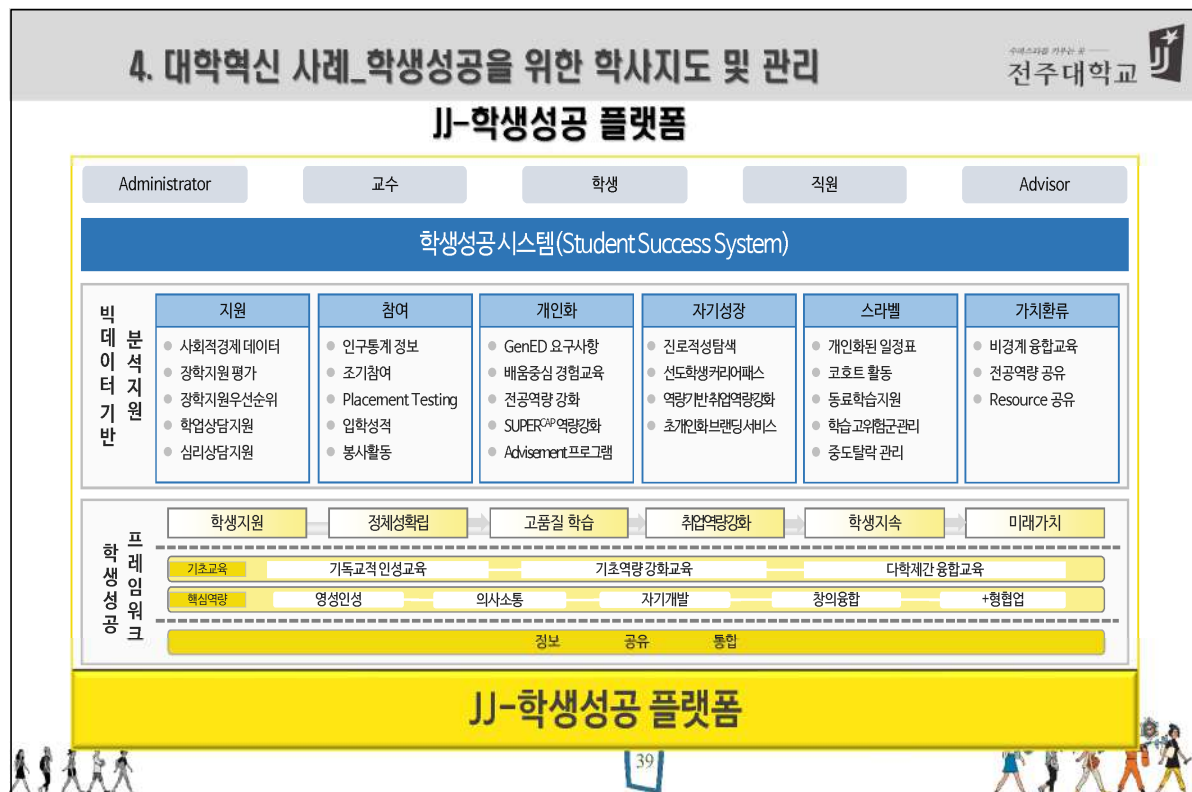
**전략적 설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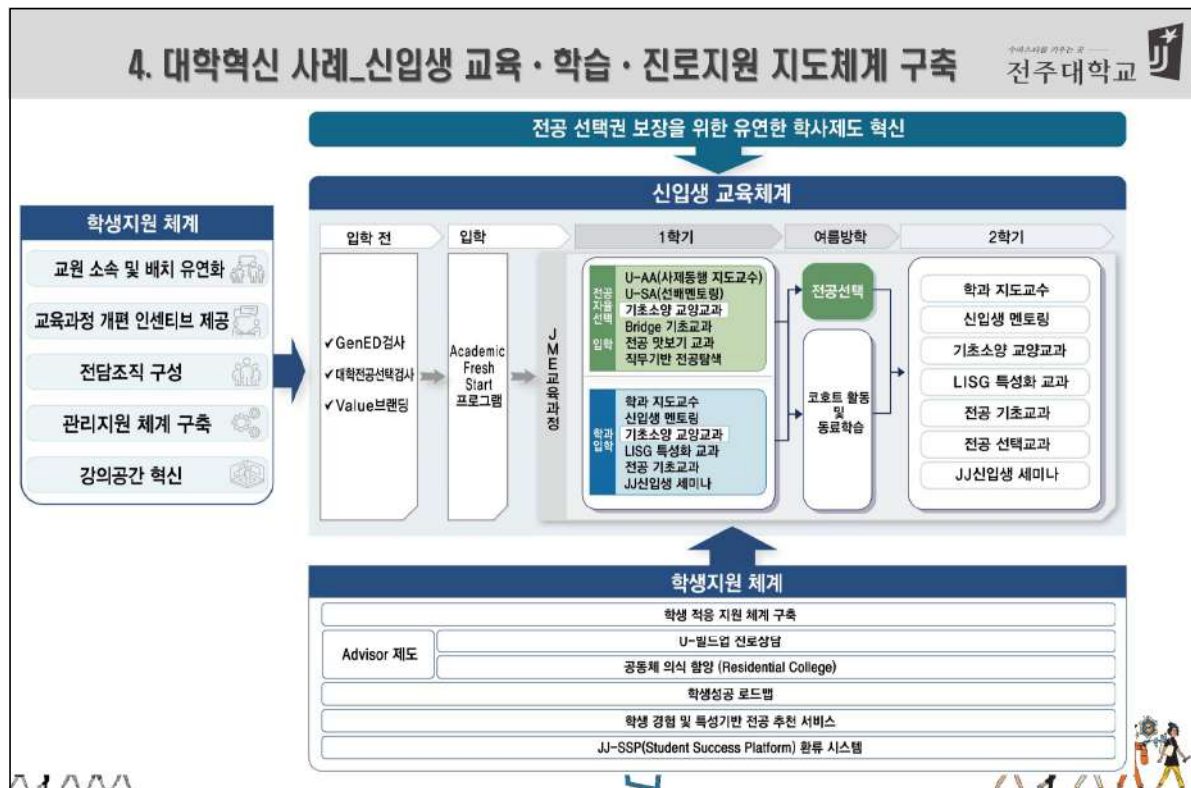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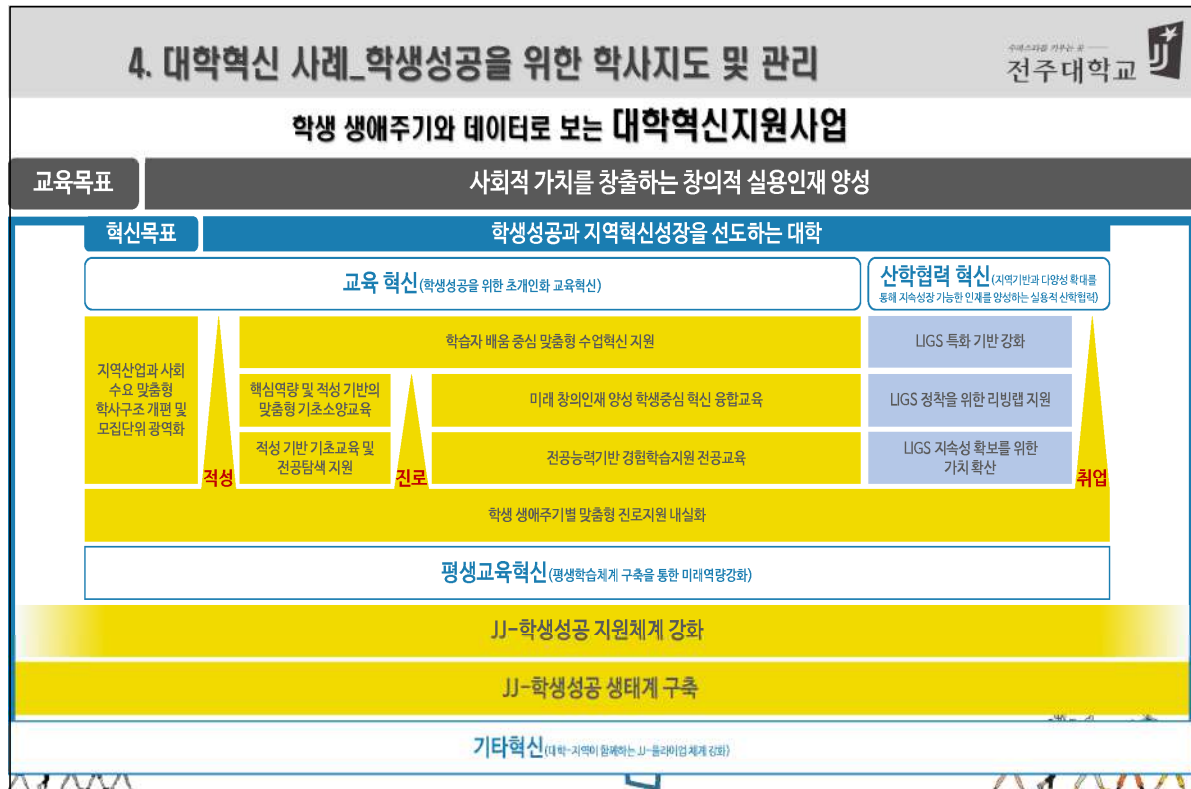
**학생성공 프레임워크**











## 4. 대학혁신 사례\_지역사회 연계 강화

수업소외를 가중하는 곳

**전주대학교**

beSTAR

✓ 대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width: 60%;"> <p><b>beSTAR</b></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width: 40%;"> <p>2012. 9. ~</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width: 60%;"> <p><b>beSTAR</b></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width: 40%;"> <p>2019. 3. ~</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width: 60%;"> <p><b>beSTAR</b></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width: 40%;"> <p>2022. 3. ~</p> </div> </div>
<p>기업 우수인재 육성과정(3학점)</p> <p><b>전체 대학생 대상 교양과목</b></p>	<p>21개 직무(학과 참여)</p> <p><b>직무별 융합전공 이수</b></p>	<p>취업연계형 인턴십 진행</p> <p><b>물류학과 전공과목</b></p>
<p><b>이랜드 명의 수료증 발급</b></p> <p style="font-size: small;">이랜드 현직자 특강 / 강의 AAR 프로젝트 발표</p>	<p>2019년(1기)~2024년(6기)</p> <p><b>채용 진행(선발&gt;현장교육&gt;입사)</b></p> <p style="font-size: small;">21개 참여학과 교과목 구성</p>	<p>주요교과 이수 후, <b>채용연계형 인턴십 통해 채용</b></p> <p style="font-size: small;">쿠팡물류의 이해/ 쿠팡물류의 기초 물류관리론 보관하역론 유통경로관리 공급사슬관리</p>

43

## 4. 대학혁신 사례\_지역사회 연계 강화

수업소외를 가중하는 곳

**전주대학교**

beSTAR

✓ 대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주대-하림그룹 공동 교육과정**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p><b>적성·역량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공동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컴퓨터실무</li> <li>청의전문제해결방법론</li> <li>기업가정신인 이해</li> <li>공동체와직업윤리</li> </ul> </li> </ul>	<p><b>직무 교육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개 직무트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경영혁신, 공무설비 등</li> </ul> </li> <li>19개 학과 참여</li> <li>233개 교과목 운영</li> </ul>	<p><b>실무능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산업연계</li> <li>현장수업(Extensio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경험학습</li> <li>교과목 위주 (실험·실습, 현장실습)</li> </ul> </li> </ul>	<p><b>역량인증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평가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능력</li> <li>직무능력 (직무자격증, 어학자격증)</li> <li>IT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li> <li>기본소양 (독서토론, SMAT 등)</li> <li>태도 및 인성</li> </ul> </li> </ul>
<p><b>적성 발견 / 전공 탐색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과(전공)별 커리어로드맵 개발 및 지원</li> <li>적성교육 (진로개발세미나, 진로탐색세미나, 적성이이끄는 삶 등)</li> <li>인성·윤리교육 (인권과공동체, 기독교윤리와적성, 체플, 사회봉사활동 등)</li> </ul>	<p><b>하림beSTAR 선발</b></p> <p>적성기반 인재 선발 ▶ <b>직무별 전과 시행</b></p>	<p><b>적성탐색학기</b></p> <p>적성·역량 진단   적성캠프 및 직무탐색</p>	<p><b>적성탐색 프로그램</b></p> <p>진로캠프, 진로해시태그</p>
<p><b>교과 / 정규과정</b></p>		<p><b>비교과 과정</b></p>	

44

## 4. 대학혁신 사례\_지역사회 연계 강화

수해소피를 나누는 곳

**전주대학교**

### 1유형 대학혁신지원사업 + 3유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전공연계 리빙랩
- 문제해결 R&D 리빙랩
- 문제해결 오픈테이블
- 학생 아이디어이션
- 학생 리빙랩
- 로컬벤처 프로젝트
- 자원순환 리빙랩 프로젝트
- 리빙랩 기반 특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리빙랩 기반 문제해결 실천

RISE 사업 확산 기반 마련

2024학년도 기준  
운영건수 35건, 참여인원 657명

### ✓ 확산 전략 및 노력

대학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산학연 혁신 포럼 개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전주한옥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감소시대의 지역계획 토론회** 등 개최

**지역 연계성 강화 및 RISE체계에서의 리빙랩 운영방향 확산을 위한 리빙랩 파트너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체계 내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인구문제, 지역산업, 지역상권 등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의제

▶ 사·군 + 대학  
협력기반

▶ 문제해결 과정 모색

### ✓ 전주대학교의 RISE체계의 지역혁신 공유협업 활성화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 4개의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지역과 함께 실행하고 성장하는 전주대학교 리빙랩**

태권도 종주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우주형 태권도 생태계 조성  
주인주도 리빙랩을 통해 농촌형 통합돌봄체계를 실현  
주인주도 리빙랩으로 자유도시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  
스마트 헬스케어와 리빙랩을 연계한 고령친화형 건강 커뮤니티 조성

RISE 체계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 확산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협업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의 질 공동제거 가치 창출

45

## 4. 대학혁신 사례\_지역사회 연계 강화

수해소피를 나누는 곳

**전주대학교**

### 자원공유시스템

[[공유가치 시스템-교내 학생정보 및 연구 인력정보, 특허/지식재산권 조회]]

[[물적자원 개방형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

46



## 4. 대학혁신 사례\_인프라 개선

수업소통을 이루는 곳

**전주대학교**

### 10년의 담대한 투자

총 1,145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2004-2009)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2004-)

스타센터(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호텔형 기숙사

47

## 4. 대학혁신 사례\_인프라 개선

수업소통을 이루는 곳

**전주대학교**

C-nergy LAB

✓ 현장미러형 융복합 특화연구센터인 특성화 분야별 C-nergy LAB 구축







48

#### 4. 대학혁신 사례\_대학의 디지털전환

수업시간을 나누는 곳 ———

전주대학교

전북타임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008면 문화

## 전주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2개 분야 선정 '쾌거'

인공지능·실감미디어 분야… 사업비 분야별 각각 102억 원·오는 2026년까지 운영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6년간(2021~2026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 4. 대학혁신 사례\_대학의 디지털전환

수업시간에 나누는 웃음 ———  
전주대학교

✓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유치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구축 업무협약  
(2024. 9. 10.)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개소식  
(2024. 12. 12.)

## 4. 대학혁신 사례\_주요 성과

수업소리를 가르는 곳

**전주대학교**

주요 성과

**2년 연속 최고등급**  
**S+S**  
“2024년 사업비 116억 지원”

**전국 최고**  
**S**  
종합실적평가  
최고 등급 “A등급”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가지 유형(고도화형, 광역지자체형)  
  
**2차년도 종합평가  
최고 등급 “A등급”**

## 4. 대학혁신 사례\_주요 성과

수업소리를 가르는 곳

**전주대학교**

주요성과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유치

2025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기관 선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4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 's등급' 달성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주관대학 선정** 3년간 90억 원 지원

호남권 유일의 주관대학(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

교·사대 교원양성과정 혁신 사업

**단독형선정**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교사 양성(20개 사업단)

중등 단독형으로 선정된 전북 유일의 사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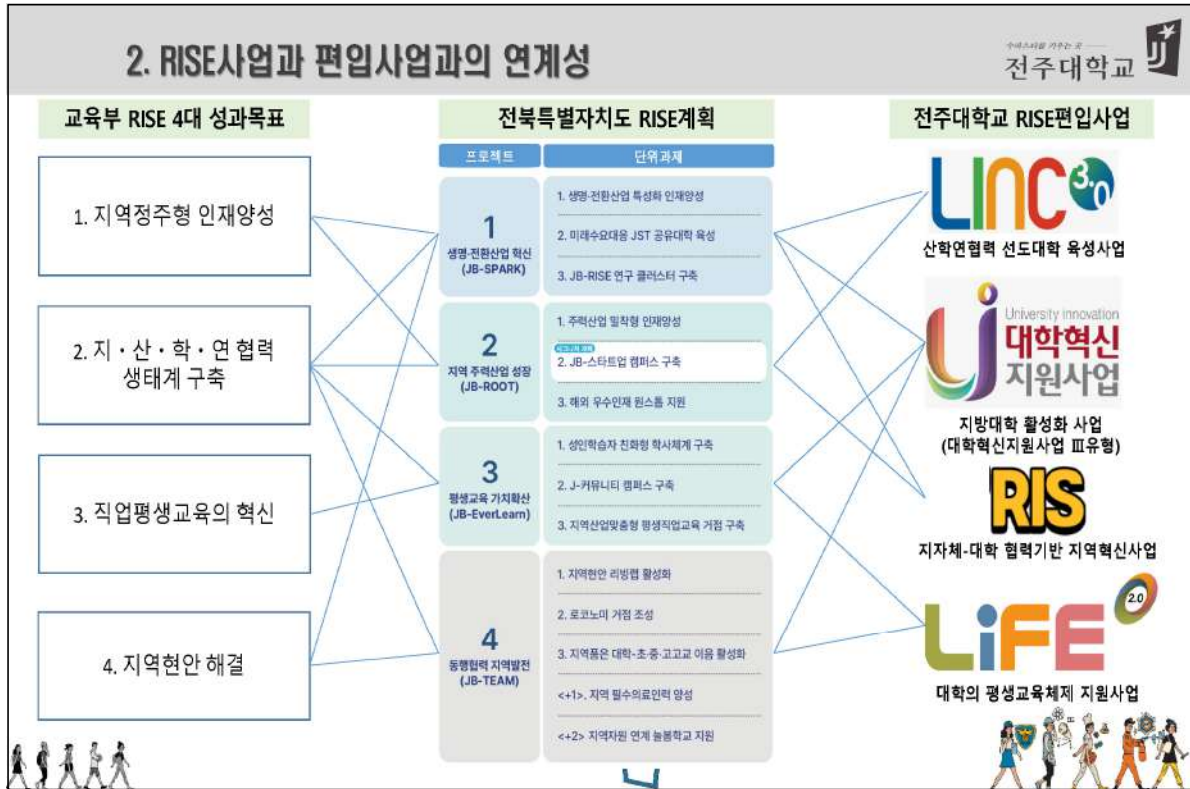
## 1. RISE편입사업 수행 현황

주최: 교육부, 연구: 전주대학교

✓ 전주대학교 RISE편입사업 수행 현황

구분	사업명	기간	총예산 (백만원)	비고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2022.3. ~ 2025.2.	13,044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023.6. ~ 2025.2.	8,238	종합평가 최고등급 (A등급)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2023.8. ~ 2025.5.	5,214	종합평가 최고등급 (2개 분야, A등급)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2023.4. ~ 2025.2.	6,540	-
전북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사업)	2024.3. ~ 2025.2. (*연단위 선정)	627	10년 연속 최다 선정







## 3. RISE사업을 통한 대학혁신 전략\_인재양성 부문

수업소유를 가중하는 곳  
전주대학교

## 3. RISE사업을 통한 대학혁신 전략\_연구개발 부문

수업소유를 가중하는 곳  
전주대학교



59



## 3. RISE사업을 통한 대학혁신 전략\_지역사회 지원

수업소요를 지원하는 곳 —  
전주대학교



61

## 4. RISE사업을 통한 예상되는 사업성과

수업소요를 지원하는 곳 —  
전주대학교

구분	성과요약	사업성과
인재양성	-학생의 전공 선택과 진로 결정이 유연하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이뤄짐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형 인재가 실질적으로 양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스스로 경로를 설계하는 <b>전공자유선택 시스템</b> 정착 → 다양한 마이크로전공과 모듈형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li> <li>■ 학과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 → 현장 기반 과목과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배출</li> <li>■ 전북 지역에 <b>정주하는 청년 수 증가</b> → 학업→산학연계 실습→취업 및 창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실현</li> <li>■ 유학생의 지역사회와의 통합 → 문화·생활·진로 지원 시스템을 통한 유학생의 지역기업 정착 사례 확산</li> </ul>
연구개발	-대학의 연구역량이 실제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며, 기술과 인재가 함께 기업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의 <b>기술 애로 해결과 R&amp;D 역량 향상</b> → 현장 기반 맞춤형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개선</li> <li>■ 산학연 공동연구의 실제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 사례 도출 → 공동특허, 공동브랜드, 지역협력 제품 런칭 등 성과 가시화</li> <li>■ 대학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들의 혁신 파트너로서 지역 산업생태계 고도화 → 기술자문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 산업계를 위한 연구를 러스터 기반 제공</li> <li>■ 학생연구원이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학습 경험 제공 →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연구-취업-진로’ 연계 사례 다수 발생</li> </ul>
창업·창직	-대학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과 청년이 실제 창업 또는 창직의 주체로 활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연계 창업 및 창직 사례 다수 발생 → 졸업작품, 캡스톤디자인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됨</li> <li>■ 학생들이 지역자원과 문제를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사업화 → 로컬푸드, 관광, 콘텐츠 등 지역밀착형 창업 모델 정착</li> <li>■ 창업 성공 경험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 후배 및 지역 주민과의 멘토링, 창업 스토리 콘텐츠 제작</li> <li>■ 창직형 신직업 등장 → 지역문화 큐레이터, 푸드디렉터, 로컬미디어 기획자 등 새 직업군 확산</li> </ul>
평생학습	-성인과 중장년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고, 커리어 전환 및 지역사회 재참여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층의 재진입 경로 마련 → 은퇴자경력단절자가 재교육 후 새로운 직무나 봉사활동에 참여</li> <li>■ 커뮤니티 캠퍼스를 통해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대학을 경험 → 주민이 대학 공간에서 학습하고, 함께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li> <li>■ 기업 재직자의 직무전환 또는 역량 향상 사례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화 교육 이수 후 승진·재배치 등 결과 도출</li> <li>■ 고등교육을 처음 경험한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향상 →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문화강좌·시민대학 참여로 삶의 질 증진</li> </ul>
지역사회지원	-대학이 지역사회의 공공 파트너로 기능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를 창출하는 구조가 실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제 해결형 수업(리빙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 유도 → 마을환경 개선, 고령자 안전문제, 청년 일자리 등에서 학생 아이디어가 적용</li> <li>■ 지역 소상공인과 브랜딩·마케팅 협업을 통한 매출 증대 → 로코노미 프로젝트의 실질적 매출 향상 사례 공유</li> <li>■ 지역 청소년 교육 불균형 해소 기여 →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지역 고교에 진로코칭, 교과 튜터링 등 실시</li> <li>■ 문화·예술 기반의 지역 공동체 회복 사례 → 지역 예술단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전통문화 콘텐츠 공동기획 등 다수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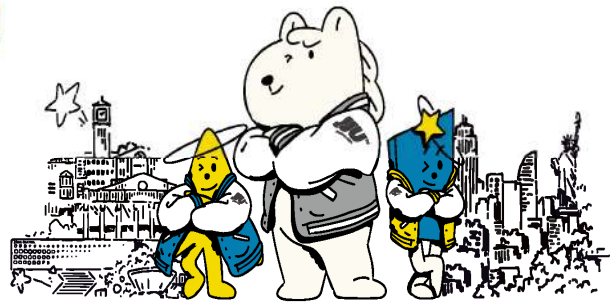
62



감 사 합 니 다.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

It will be done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 종합토론

좌 장 송기창(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토론자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훈호(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한수(경기대학교 교수)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문 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대학재정 확충 방안)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학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장동력”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15년 후 0%대까지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올릴 수 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이 배경에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진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논 팔고 밭 팔아서 자식 대학 교육시킨 역사가 있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 5%였던 것이 15년 후 0%대까지 추락할 전망.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 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한국은행 2025.1.19.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루카스(Robert E. Lucas)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 새고전학과 내생적 성장이론 “대학과 대학원교육을 통해 인적자본 성장”
-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받은 후 나라가

\* f913402@gmail.com

부강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이스라엘 건국 30년 전, 현 이스라엘 땅에 히브리대학과 테크니온대학 설립”

- “히브리대 특허 기술료 연 1억달러… 한국 대학 다 합쳐도 못 이긴다”(이건우 서울대 명예교수, 조선일보 23.6.21.)

세부적인 대학재정 확충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을 예산플랫폼으로
2. 기업문제 해결형 R&D 출자금 이익금 배당
3. 복권기금 신규재원 대학 지원
4. 모교사랑 기부제
5. 인문학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6.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에 첨단산업인재양성계획, 의대인력양성계획 등 포함, 플랫폼이 되어야.
7.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 부여

### 1. 대학을 예산플랫폼으로

“협력과 상생은 플랫폼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 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에선 다수가 뚜렷한 역할을 갖고 참여해 서로의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삼성 뉴스룸 최재홍 2017)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및 지방소멸 문제임. 우리나라는 매년 2만 명의 귀농귀촌인구가 있으나 2년도 안되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있음. 그 이유는 정주여건의 불비에 있음.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 미국 인디애나 ‘메도우드 은퇴자 커뮤니티’, 플로리다주립대의 ‘오크 해먹’, 스탠포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 美 현재 UBRC 100개 2032년까지 400개로 증가, 부산 동명대 국내 첫 사례 (동아일보 2025.2.11.)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매년 10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인구 및 지방소멸 문제는 가중.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교육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센터사업(수영장 포함됨), 산림청 녹색자금의 숲조성사업 등 각 부처 수백조 규모의 사업들은 대학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협력과 상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국민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음.

## 2. 기업문제 해결형 R&D 출자금 이익금 배당

R&D 예산 한 해 30조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된 실적(기술활용률)은 2019년 3.8%로 저조. 2015년도 5.9%에 비해 2.1%p 감소.

이는 관련 법 및 예산편성이 기업수요와 무관하게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과제를 하는 구조에 기인.

기업문제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함께 연구하는 기업문제 해결형 R&D가 해결책.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속도가 중요한 4차산업혁명 뉴노멀 시대에 연구기간 5년+@는 성공해도 노후화된 기술 양산.

글로벌기업들도 라이벌이 있어서 2년 넘는 과제는 잘 안함. 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연구자(대학과 연구자)에게 이익금의 60%를 배당.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반도체 개발을 함께 한다면?

딥시크 충격, 중국은 AI굴기, 한국은 이공계 기피 및 인재 해외 유출과 의대 광풍 문제 해결책.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가 아니라 이공계로 진학.

### 3. 복권기금 신규재원 대학 지원

사행산업 명칭을 행운산업으로 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법 상의 매출총량제 폐지.

매출총량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부적합.

불법 도박 규모 82조원, 합법 행운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사감위 2019). 국외 원정도박 약 4조원(사감위 2017). 국내 불법도박 규모 82조원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재정 손실액은 약 32조원.

개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미시규제 강화.

행운산업 중 매출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복권기금.

일본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복권에 세금 없음.

매출총량제 폐지에 따른 신규재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지원.

기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재원인 교육세는 헌법상 의무지출인 의무교육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

### 4. 모교사랑 기부제

소득세 일부를 개인이 선택해서 모교에 기부 또는 고향사랑기부제처럼 모교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등 혜택

## 5. 인문학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K-콘텐츠, 한류가 잘 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까지 알아서 4년간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바 있음. K-콘텐츠, 한류가 잘 되는 배경에는 한국고전번역이 있음.

오징어게임(넷플릭스는 방영 한달도 안되어 시총 54조원을 뽐), 왕의 남자, 악귀, 고려거란전쟁, 도깨비, 별에서 온 남자 등. 스티브 잡스, 알파벳 필기체 18개월 청강 후 맥킨토시 초기 버전에 수록해서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김.

훈민정음 해례본을 찍어내는 토스트기, 한국관광공사 한국을 알리는 상품전 3위 수상, 아마존에서 한달에 20만개 팔리는 대박상품에 등극.



한국의 첨단산업들은 디자인 기능이 약해 일류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 스티브 잡스같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 기획하여 앱스토어같이 시장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하여 인문학적 감수성과 첨단산업을 연결하여 볼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해야 함.

인문학이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문사철 등 인문학도 첨단산업이 받아왔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6.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에 첨단산업인재양성계획, 의대인력양성계획 등 포함, 플랫폼이 되어야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이 국가 인재양성 및 투자계획의 지표가 되게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자.

4차산업혁명의 뉴노멀 중 하나는 플랫폼경제. “플랫폼이 시장의 부(富)를 지배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이 각 부처 국가 인재양성정책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될 수 있다."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할 수 있음.

각 부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이 앞다투어 주제발표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를 통해 대학에 돈이 흘러드는 선순환구조 조성 가능.

#### 7.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 부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는 전문학사 이상을 미국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었음. 인구소멸 문제에 당면한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 시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 나라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를 시행하고 한 지역에 특정 국가 유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토론문 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국립대학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방향)

김훈호(국립공주대학교 교수)\*

### 1.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다양한 성과, 그러나 분명한 한계

- 국립대학육성사업('23년 이전까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별도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연구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김훈호 외, 2022; 이정미 외, 2022)
  - 교수 역량 강화,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 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 전임교원의 1인당 연구실적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나 실험·실습 여건 개선 및 기자재 확충 등도 폭넓게 이루어졌음
- 그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으로서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학 등 특화 학문 분야 연구 및 강좌 개설, 지역사회 기여 및 대학 자원 공유·개방 실적도 증가하였음(김명동, 2021; 김훈호 외, 2022; 이정미 외, 2022)
- 다만,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연구 시설 개선이나 교수 및 연구 인력 확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김훈호 외, 2022; 이정미·이길재, 2022)
- 국가는 국립대학의 설립자로서 안정적인 재정지원 책임이 있다는 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국립대학 대상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된 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이 2018년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을 경상운영비에 포함시켜 배분해도 기본운영비와 성과기반사업비(또는 정책사업비)로 구분하여 배분할 경우 성과 제고 및 지속적인 혁신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 hoono78@gmail.com

때 향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경상운영비에 포함시켜 교부할 경우,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며,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고유의 기능 및 특성화된 목적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국·공립대학 통폐합 및 전문학사 수여를 통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 2023년에 한경대학교(일반대)와 한국복지대학교(전문대)가 4년제로 통합되면서 국립 전문대학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
  - 2025학년도 기준 전체 전문대학은 131개교로, 6개 공립(서울,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과 125개 사립으로 구성
  - 2024년 6월에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4년제로 통합하면서 공립대 1개교 감소
-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지역균형발전 및 전문 직업인력 수급 안정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매우 중요
  -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안동대-경북도립대의 경우, 양 대학의 통합 과정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최초의 학사-전문학사 동시 발급 대학으로 특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일반대학이 전문학사 발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이 불발되면서 결국 4년제 대학으로 통합
- 현재 목포대-전남도립대, 창원대-경남도립대 또한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되어 각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일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구 규제 특례(6년)’ 조치를 통해 통합대학(4년제)에서 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도립대(공립대)는 신입생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재학생 충원율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 증가
- 지역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간 통합을 확대·추진하고, 신속하게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통합 국립대학이 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통해 국가가 고등직업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전문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또는 석사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통합대학에서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과정 편성·운영
- 다만, 지역 사립 전문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전문학사 과정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지양

### 3. 거점국립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

-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부 중심의 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대학원 규모나 연구 생산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세계대학순위 상위권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 대학에 해당하며, 체계적인 대학원 교육과 대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성과 산출
-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거점국립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학부교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적은 교수 및 연구 인력이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학부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학원 교육과 연구 영역으로 집중
- 한정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제 전환 시도
- 대신 국가는 학부정원 축소가 거점국립대의 세입 감소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
- 거점국립대의 줄어든 학부정원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사립대학이나 국가중심대학의 신입생 확보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체계적인 학부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거점국립대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마련
- 거점국립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니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을 거점국립대학에 적극 신설·이전하고, 대학은 우수한 연구 및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체나 주변 대학에 개방·공유하며, 기초학문 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 도모

### 4. 나노·마이크로디그리 과정 확대를 통한 국립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국립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기능 확대·강화 주장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음

- 거점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부분의 국립 대학은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다소 부정적
-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 국립대학 또한 학생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사회 및 산업체 또한 국립대학이 보다 양질의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대학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진로나 직업을 모색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국립 전문대학이 부재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다양한 나노·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개설하여 성인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계좌제나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취득 학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성인학습자의 이직이나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및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할 국립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 또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그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참고문헌

- 김명동(2021). 국립대학 육성사업 효과성 분석. 대전: 한국연구재단.
- 김훈호·김명동·이정미·이호준·장덕호(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후속 사업 기획 기초 연구. 대전: 한국연구재단.
- 이정미·이길재(2022). 국립대학 재정지원 및 배분 개선방안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31(3), 91-119.
- 이정미·이길재·김훈호·김지연(2022). 2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획을 위한 심화연구. 대전: 한국연구재단.

## 토론문 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사립대학 재정지원 방향)

김한수(경기대학교 교수)\*

### 1. 사립대학 재정 현황

#### ■ 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운영손익 현황

[표 1]은 2023회계연도 운영손익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사립대학 278개교 중 39개교가 운영손실을 보고하였다. 소규모(27개교), 중규모(13개교), 대규모(2개교) 순으로 운영손실을 보고하였으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 운영손실 보고대학은 각각 11개교와 28개교로 나타났다. 소규모대학일수록,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일수록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1] 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운영이익(손실) 현황

(단위 : 학교 수)

학교급	지역	구분	학교 규모			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운영이익	22	20	22	64
		운영손실	2	0	0	2
	비수도권	운영이익	27	32	16	75
		운영손실	12	2	0	11
전문	수도권	운영이익	3	13	17	33
		운영손실	3	5	1	9
	비수도권	운영이익	28	24	12	64
		운영손실	10	6	1	17

주: 학교 규모는 1) 일반대학 : 소규모 5,000명 미만,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규모 10,000명 이상, 2) 전문대학 : 소규모 2,000명 미만, 중규모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규모 4,000명 이상

\* kimhansoo@kgu.ac.kr

### ■ 학령인구 감소 및 등록금 인상 제한에 따른 사립대학의 대응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대학원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2023회계연도 대학원등록금수입은 617억 원이었다. 반면에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125억 원에 불과해 대학원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연구 역량이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부금 수입은 학교 규모가 클수록, 수도권 대학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대규모 일반대학은 동일 규모의 비수도권 대학보다 기부금 수입이 4배 정도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수입 외 수입원이 다양하지 못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 ■ 사립대학 주요 지출항목별 재정지출 변화(2013년 대 2023년)

2014년 및 2023년 사립대학 등록금수입은 각각 138,115억 원과 126,446억 원으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23년 등록금수입은 8.4%가 감소하였다(2024년 대학재정보고서,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년 대비 2023년 주요 지출항목별 재정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보수 증가는 0.5%에 불과한데, 보수는 동결되고 비전임 교원이 급증해 우수 인력을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연구비는 6.2% 감소해 대학의 연구역량이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연구비는 동일 규모의 비수도권 대학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연구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셋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지출 41.2% 감소했으나, 대학 재정의 악화에 따라 교지 및 교사의 확충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별 학교당 평균 누적 적립금은 수도권(608.9억 원), 광역권(374.6억 원), 지방권(262.4억 원) 순으로 나타나 지방권 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상당히 부족함을 시사한다. 특히 2023회계연도 이월금 잔액이 없는 대학은 29개교인데, 비수도권 대학은 18개교이며, 소규모대학은 21개교로 나타나 단기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 2.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방안

### ■ 구조개선 방안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재정진단을 수행해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계속가치>청산가치”인 대학은 구조개선(자산 활용 및 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학부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계속가치<청산가치”인 대학은 퇴로 확보를 위한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에서 제시한 구조개선(자산 활용 또는 처분) 등을 실행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때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현상은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전문대학일수록 집중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지방 소멸 감속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운영의 규모 경제화를 통해 대학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

사립대학의 인적 구조를 살펴보면 5년 이내 퇴직 교원이 다수 발생하며, 자유 전공제 확대로 학과 또는 전공의 구조조정이 원활한 환경에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최적 시기는 향후 5년 이내 이므로,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회생 목적의 경영위기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활용하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통폐합 또는 폐교 직면한 대학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물적 설비의 폐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지급(부정 및 비리 발생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학교법인의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해산정리금 지급 후 잔액)은 국고로 귀속해 사학진흥기금으로 편입한다면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넷째, 폐교대학 학생은 특별 편입을 제공하고, 수용대학에는 ‘정원 외 인원’을 인정해야 하며,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실업급여 성격을 보상하고 재취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3. 등록금 자율화

#### ■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표 2]는 2023 회계연도의 보수, 일반관리비 및 시설관리비를 등록금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sup>1)</sup> 이러한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등록금수입으로 대학 운영에 기본적인 지출을 보전할 수 없다는 의미한다.

분석대상 278개교 중 67곳이 100%를 초과했으며 소규모 일반대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가 클수록 해당 비율이 낮아 대학 운영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대학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표 2] 보수, 일반관리비 및 시설관리비 비중(2023 회계연도)

(단위: %)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108.82	95.99	89.07
	비수도권	108.91	94.76	95.74
	차이	(0.09)	1.23	(6.67)
전문	수도권	124.43	88.75	77.31
	비수도권	92.53	80.88	80.49
	차이	31.90	7.87	(3.18)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분석」(2023.12.29.)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렸다면 연평균 2조 5,371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1) 김한수, 사립대학의 규모 및 지역별 재정분석,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ISSUE PAPER 25-3, 2025년 3월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대학의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의 예산이 감소해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으나 동결 상태가 지속한 이유는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때문이므로 등록금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등록금 자율화 방안

사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등록금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

첫째, 필수적인 지출항목을 선정해 이들 합계 금액(예를 들어, 보수,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연구비, 교내장학금 등)이 등록금수입(학부 및 대학원)에 미달하는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지출 합계에서 등록금수입을 차감해 운영비용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들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인상율을 한도로 한다.

둘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교원 및 직원의 보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보수 인상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준수하면 적정한 보수 인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종별, 규모별 및 지역별 평균 적립금보다 많은 대학은 요건을 충족한 등록금 인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해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등록금 인상요인이 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규모 일반대학의 평균 적립금이 100억 원인데 A대학의 적립금이 120억 원이라면 A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법인의 책무성이 약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 또는 과거 3개년 평균치 이상의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요건을 충족한 등록금 인상’으로 인정하면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등록금 인상 목적은 열악한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금을 인상한 연도에 미사용차기이월자금(또는 운영이익)이 증가한 대학이 차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2023).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 영향분석」.
- 김한수(2025). 「사립대학의 규모 및 지역별 재정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ISSUE PAPER 25-3.
- 한국사학진흥재단(2024). 「2024년 대학재정보고서-예·결산편」.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http://unifine.kasfo.or.kr/>).

## 토론문 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I. 들어가며

고특회계를 도입하여 법정 재원의 일부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재원 확보에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고특회계의 도입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재원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음. 고특회계의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고특회계 재원을 국세 교육세 중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전액으로 확보하려고 했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육계의 반대로 금액을 절반으로 조정되었음. 고특회계의 개선과제로 세입의 확대와 단기적으로는 일몰 연장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발제자가 제시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위하여 발표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II.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

## 1. 국가장학금 포함에 따른 고특회계 증가

국가장학금 예산이 고특회계에 포함되어 2024년 고특회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고특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국가장학금이 고특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로 높으며, 2025년은 2024년 대비 5,846억 원(12.5%) 증가함. 국가장학금은 다른 고등교육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증가한 규모가 크다고 보여짐.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접근성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국가장학금이 고특회계에 포함되어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했는지 의문임.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고특회계의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으

\* insik@assembly.go.kr

로 추정됨. 국가장학금 증가분에 따른 고특회계 규모의 확대는 고등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이를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성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 2.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미흡

고특회계 세입인 교육세 지원분이 연도별로 편차가 있어서 매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교육세 지원분이 2023년 1조 5천억 원, 2024년 2조 2천억 원, 2025년 2조 1천억 원으로 변동이 있음. 고특회계가 법적인 측면에서 일정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특회계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3. 고특회계 도입으로 국립대학 지원 증가

고특회계 도입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임. 발표문에 제시된 기술통계지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에 지원을 많이 했음.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교육비환원율이 감소했음. 발표문에서 조사대상의 비율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각각 25%와 75%임. 실제로 4년제 대학 중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도 유사한 수준임. 고특회계의 도입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동안에 사립대학에 지원이 감소했다면, 설립 유형별로 재정지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고특회계 도입으로 국립대학 지원이 증가한 부분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평생교육 분야 지원 부족

고특회계를 도입한 이후 평생교육 분야에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특회계 세출에서 평생직업교육 부분 예산은 2023년 9천억 원에서 2025년 6천억 원으로 감소함. 이는 평생직업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부분의 증감이 반영되어 실제로 평생직업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님. 하지만,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고특회계 설치 이후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음.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5. 대학구조개혁 지원의 고특회계 성과 포함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하여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에는 회생방안 또는 퇴로를 제시함. 재정건전대학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개선 방안 제공과 전문적인 경영자문 수행 및 사후관리와 폐교대학에 종합관리를 지원함.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고특회계를 설치하기 전에도 시행되었음.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한 부분이 고특회계의 도입에 따른 성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6. 수도권과 국립대법인 지원 편중

발제자가 분석하여 제시한 대학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법인과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이 사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기준으로 교당 평균 금액이 국립대법인은 133억 원, 사립대학은 88억 원임.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102억 원이고, 비수도권 대학은 79억 원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산학 협력과 지역혁신 등이 유리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국립대법인보다 적은 부분도 고특회계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성과 측정

고특회계를 도입하여 발생한 성과를 현재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고특회계를 운영한 기간이 3년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에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고특회계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도 고특회계 도입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발표자가 제시한 정책의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발표자는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성과로 제시했음. 하지만,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성과로 제시된 교육여건의 변화는 고특회계를 도입하지 않고 고등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도 달성이 가능한 성과라고 보여짐.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정도 운영하고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고특회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안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참고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중인 법률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사후영향분석이 있음.<sup>1)</sup> 사후영향분석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의 집행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책평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경우 ‘사후영향평가’로 볼 수도 있음. 사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률을 경험자료와 실증자료를 통하여 점검하여 개정

1)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실무」, 2024.9.

사항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위한 근거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음.

고특회계를 도입하여 발생한 성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는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고특회계를 도입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아서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영향분석의 실시를 검토할 수 있음.

### III. 나가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사례를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서 논의한 여러 의견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고특회계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

참고  
자료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 2025~2029

2024. 12.







## 목 차

I. 추진 배경 .....	153
II. 고등교육 여건 진단 .....	154
III.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 .....	156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2. 대학의 재정 여건	
IV.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	162
1. 추진 체계도 및 재정지원 구조	
2. 3대 재정지원 전략	
V. 중점 재정지원 과제 .....	172



## I. 추진 배경

### □ 수립 배경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5~'29)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을 결정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재정지원 배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성과관리 등 법정 사항을 포함
- ※ 고등교육 재정 투자 10개년 기본계획 이후, 제1차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이행 중

#### [참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주요 추진 경과

- 고등교육 재정 투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10.11)
  - \* (주요 전략)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생 및 연구자 단위의 지원 확대,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규제 완화
-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수립('19.9)
  - \* (주요 전략) 대학 혁신 역량 제고, 전략적 특성화 역량 제고,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 및 체제 개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23.1, ('23)9.74 → ('24)15.53조 원)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24.2.~)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총 3회, '24.6., '24.8., '24.10.)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타 부처 관계자 의견수렴('24.8.)
- 대학,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대면 및 서면 등, '24.8.~12.)
-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안)' 보고('24.11.)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관련 국회 토론회('24.12.)

## II. 고등교육 여건 진단

### □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반해 대외 경쟁력은 담보 상태

-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에도 **보편화 단계**의 지속,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 등 양적 규모 확대
  -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23) / 외국 학생 수(만 명): (‘20)16.0 → (‘24)20.9 (KEDI)
-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더불어 증가
  - \*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조 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18) 13.7 → (‘22) 17.8
- 반면, 국제 수준 대비 낮은 투자\*와 개별대학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요구 부합도 등에 기인한 대외 경쟁력\*\*은 약세
  -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로 OECD 평균(20,499\$) 3분의 2 수준(OECD, ‘24)
  - \*\* ‘THE 세계대학평가’ 개별대학 순위가 반영되는 대학교육 지수(22→12위) 상승 반면,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전체 67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위치(IMD, ‘24)

### ▶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탄탄한 재정지원 필요

### □ 정부 주도 대학지원에서 대학 자율성 기반 교육혁신으로 전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관리\* 및 성인 학습자 증가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확대\*\* 등 대학의 체질 개선 지원
  - \* 대학 구조개혁 평가(‘15), 대학 기본역량 진단(‘18, ‘21) 등을 통한 재정지원 실시
  -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년~‘27년)」中 6대 핵심과제 ⇒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추진(‘23, 교육부)
- 기본역량진단 등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편(‘23.3.)
  -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발표(‘23.3월, 교육부)
- 재정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단선적 성장경로에 집중 투자로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의 한계\* 등 대학의 체질 개선 미흡
  - \* 성인 학습자(25~79세)의 (형식)평생교육 참여율(교육부, ‘23) : (‘19) 1.5% → (‘23) 0.6%

### ▶ 생애 전 주기 교육 수요 맞춤 대학 자율 혁신 필요

## □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의 악순환 심화 우려

- 미충원 학생 수 증가, 취업률 감소 및 지역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등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저하 추세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22. KEDI): (비수도권) 68.5% vs. (수도권) 71.2%
  - ※ 최근 10년간 학생 수 비중('24. KEDI) : (비수도권) 61.2% → 57.1% (수도권) 38.8% → 42.9%
- 이에,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선정\*\*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제도 착수
  - \* 경남 등 7개 지역 시범 선정('23년) → 17개 전 시·도 전담 조직 구성 완료('24년)
  - \*\* 30개교 지정 예정('23~'26년), 교당 최대 1천억 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 대학은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 필요
  - ※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억 원, KEDI): (전북대) 8,143 (상지대) 2,153 (울산대) 1,193

## ▶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혁신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본격화

## □ 미래 환경에 대비한 대학의 교육·연구 시스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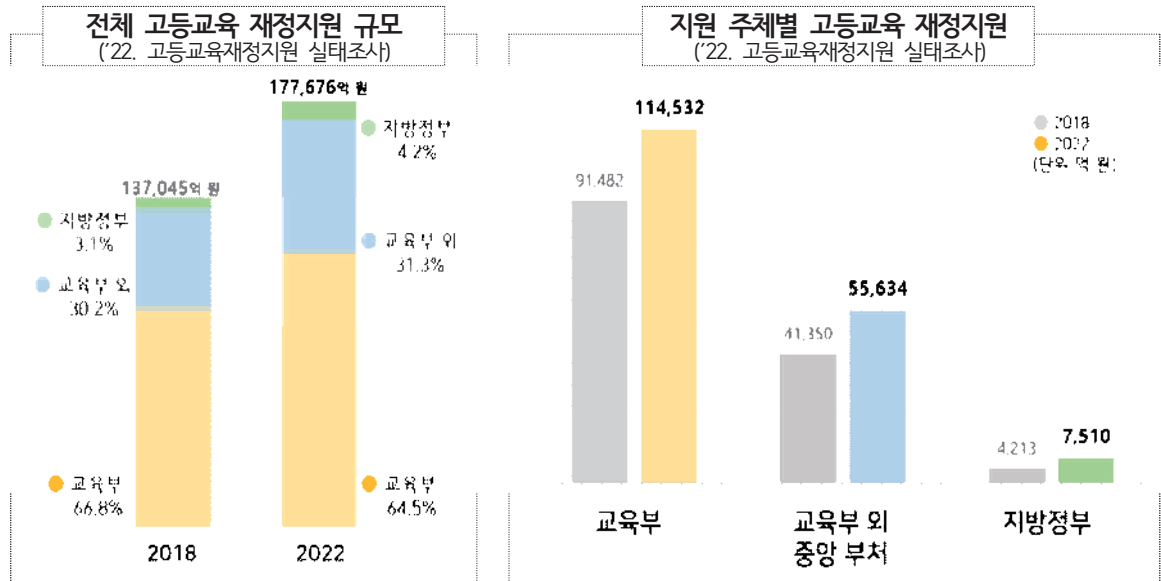
-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첨단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 향후 5년('23~'27년)간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5대 신기술 분야에서 약 34.5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 발생 전망(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에, 반도체 분야 등 사업 신설·증액\*, 각종 규제 개선\*\* 및 학술 연구 지원\*\*\* 등 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20.)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R&D) ('20.) 3,839억 원 → ('24.) 5,246억 원
- 향후, 디지털 전환(DX)은 경제 생산성 향상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핵심 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 증가
  -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기업은 9.7%, 전담 조직 보유 기업은 2.1%, 전담 인력 보유 기업은 6.2%에 불과(산업기술진흥협회, '21)

## ▶ 산업구조의 빠른 전환에 대학의 능동적 변화·혁신 필요성 확대

### Ⅲ.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

####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총지원 규모)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총규모는 최근 5년간 13.7조 원('18년)에서 17.7조 원('22년)으로 연평균 7.4% 지속 증가 추세



- 다만, 국가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GDP 대비 1.0%)보다 낮은 수준 지속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 교육지표, '24) >

(단위: %)

기준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21년	한국	3.4	0.2	3.6	0.7	0.9	1.5	4.1	1.1	5.2
	OECD 평균	3.2	0.3	3.4	1.0	0.5	1.5	4.2	0.8	4.9

- (지원 주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교육부 중심(64.5%)\*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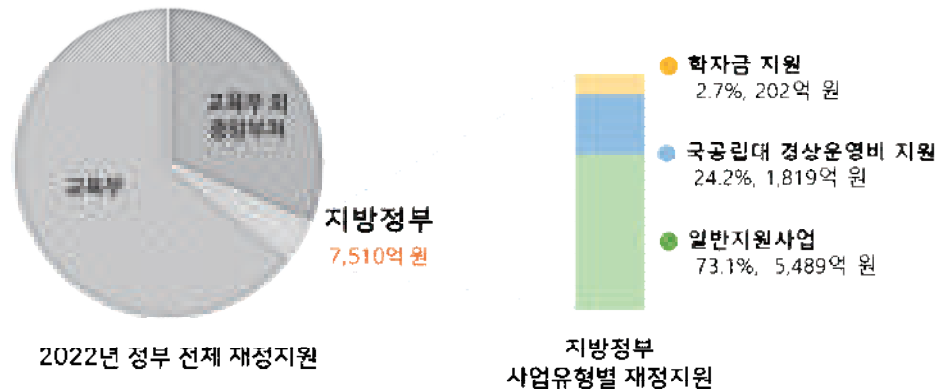
\* 교육부 외 중앙정부 재정지원 규모('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5조 원(19.6%), 산업통상자원부 0.57조 원(3.4%), 고용노동부 0.47조 원(2.8%) 등

- 지방정부는 지원 규모의 확대('22. 0.75조 원)에도 전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중 낮은 비중(4.2%)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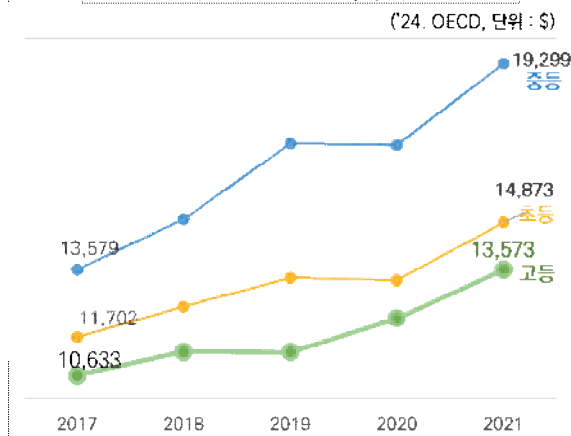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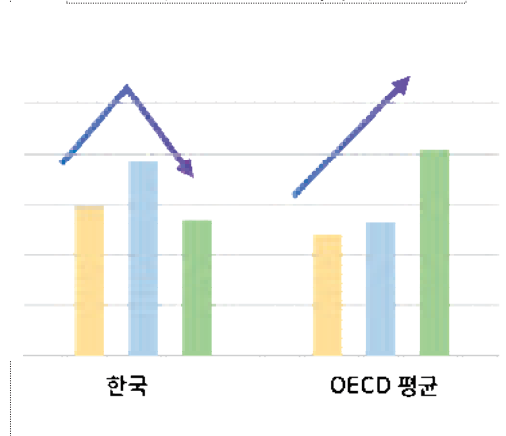
※ 지방정부 주체별 지원 : 지자체 7,113억 원(94.71%), 시·도교육청 397억(5.29%)



지방정부 지원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 ('22. 고등교육재정지원 실태조사)



- (교육단계별 비교) 교육 분야 예산('24) 총 95.8조 원 중 고등교육 분야는 총 14.5조 원으로, 총예산의 약 15.1%에 불과
- 또한,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21)는 \$13,573으로, OECD 평균 (\$20,499)의 66.2%, 초등교육의 70.3%, 중등교육의 91.3% 수준
-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1인당 공교육비가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초·중등 단계와 고등 단계의 격차가 지속 심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24. OECD 교육지표)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 '24. OECD 교육지표)

- (지원 목적) 학자금 지원 및 국립대학 운영 지원이 높은 비중 차지('22 53.0%)
- 최근 5년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규모 비중은 감소하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6조 원 규모로 세계 최상이나, 연구주체 중 대학의 비중은 9.1%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lt; 고등교육 분야 사업 유형 및 목적별 지원 규모 (교육부) &gt;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22
사업 유형별	일반지원사업 (아래 두 유형을 제외한 사업)	53,588 (40.34)	79,906 (46.96)
	학자금 지원 사업	39,767 (29.94)	43,984 (25.85)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	39,478 (29.72)	46,276 (27.19)
사업 목적별	인력양성	58,215 (43.83)	64,314 (37.80)
	연구개발	31,095 (23.41)	41,873 (24.61)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4,044 (3.04)	16,734 (9.83)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39,478 (29.72)	46,276 (27.19)
	기타	0 (0.00)	968 (0.57)

-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사립대학(8.98조 원, 52.8%), 4년제 대학(14.85조 원, 87.4%), 비수도권(10.61조 원, 62.3%) 중심으로 지원

## &lt; 유형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gt;

(단위: 조 원, %)

년도(비중)	설립유형별		학제별		소재지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2018	6.24 (47.0)	7.04 (53.0)	11.27 (85.2)	1.96 (14.8)	5.11 (38.5)	8.17 (61.5)
2022	8.04 (47.2)	8.98 (52.8)	14.85 (87.4)	2.14 (12.6)	6.41 (37.7)	10.61 (62.3)
학생 수(명)	524,649	1,792,584	1,899,857	407,839	1,126,491	1,190,742
학교 수(교)	58	355	223	145	171	242

- (설립유형별)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한 교당 재정지원 규모는 국·공립대학은 330억 원, 사립대학은 166.5억 원으로 국·공립대학의 50% 수준
- (학제별) 전문대 지원 비중 지속 감소('18년 14.8% → '22년 12.6%)하였고, 대학 1교당 지원액(434.7억 원)은 전문대학(121.1억 원)의 3.6배 수준
- (소재지별) 수도권 대학 지원 비중('18. 38.5% → '22. 37.7%)은 소폭 감소,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 비중('18. 61.5% → '22. 62.3%)은 소폭 증가

## 지난 5년간('20~'24) 교육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 대학의 자율 혁신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에 따른 미래인재 양성 지원
  - ※ 대학혁신지원: ('22) 7,530 → ('24) 8,852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22) 4,020 → ('24) 6,179억 원
- (국립대학 여건 개선) 국립대학 역량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충 등 개선
  - ※ 국립대학교육기반조성: ('22) 4,695→('24)11,080억 원 / 국립대학시설확충:('22) 7,430→('24)10,470억 원

### □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첨단 인재 양성 지원)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신설,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및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정 등 추진
  - \* ('22) 420→('24) 1,187.95억 원 / \*\*('21 신규) 816 → ('24) 2,010억 / \*\*\*('23, 신규) 540 → ('24) 1,175억 원
- (기초학문 지원) 대학의 본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연구 및 기초학문 지원을 위한 연구장학금·장려금 지원 확대 및 연구지원 체계 구축·개편 추진
  - \* BK21: ('22) 4,081→('24) 5,247억 원 / Top-Tier 연구장려금: ('22) - → ('24)109억 원
  - G-LAMP: ('23 신규, 총 8교) 160 → ('24, 총 14교) 516.7억 원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23. 신규, 총 5개 컨소시엄) 150→('24, 총 8개 컨소시엄) 240억 원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전환 지원) 지역 성인 학습자 재교육 및 경력 재설계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대학의 평생교육체제(LiFE)사업' 지원
  - ※ ('19~'22) 매년 약 241억 원 → ('23~'24) 매년 약 510억 원

### □ 지역·산업·학교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대학 산학연협력 성장 모형 확산을 위한 LINC 3.0 지원
  - ※ 일반대: ('21) 2,957 → ('24) 3,025억 원 / 전문대: ('21) 945 → ('24) 1,045억 원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RIS 추진
  - ※ ('22, 4 + 2개(신규) 플랫폼) 2,440 → ('24, 9개 플랫폼) 3,420억 원
- (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와 전문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술인재 양성 및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 ※ 1유형(기초) 45개 컨소시엄, 810억 원 지원, 2유형(광역) 5개 컨소시엄, 90억 원 지원
- (지자체-대학 협업체계 활성화) 지역 - 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시범지역 운영 (7개 지자체, '25 초 지역 실시)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추진
  - \* ('23) 10개 내외 → ('24) 10개 내외 지정

## 2 대학의 재정 여건

### □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증가한 반면, 대학 자체 수입은 감소

- (국·공립대학) 2022년 기준 총세입 규모는 6.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2.6% 증가\*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자체 수입은 감소

\* 국가장학금 포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기인

\*\* 자체 수입금 중 수강료 현황: ('18) 1.4조 원(67.2%) → ('22) 총 1.2조 원(50.3%)

- (사립대학) 2022년 교비회계 기준 총세입 규모는 약 18.8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등록금 수입\*은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은 증가

\*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 제외, 조 원) ('13) 10.3 → ('22) 9.7조 원(△0.6조 원)

\*\* 국고보조금 ('13) 1.9 → ('22) 3.4조 원(국가장학금 2.3조 원 포함, +1.5조 원)

- 특히, 사립 전문대학은 일반대학 대비 낮은 신입생 충원율\* 등으로 등록금 수입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전문대학 ('20) 93.7%→('23) 89.0%(△4.7%), 일반대학 ('20) 87.6%→('23) 85.3%(△2.3%)

\*\* 등록금 수입: ('13) 2.8조 원(57.3%) → ('22) 2.2조 원(49.8%) (△0.6조 원)

### □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의 재정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비 광역권·지방소재 대학의 수입 감소 추세가 더 큰 경향

※ 최근 5년 등록금 수입 2,499억 원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대학은 632억 원 증가, 반면, 광역권 및 지방권 소재 대학은 각 1,231억 원 및 1,900억 원 감소

- 대학 학령인구(만 18세) 급감이 시작되는 2030년을 기점으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은 재원 부족 심화 우려

※ '13년 대비 '23년 지역대학 입학생수 81,326명 감소(329,836명→248,510명) 및 신입생 미충원율 3.2%p 증가(2.8%→6.0%), '23년 파산으로 인한 첫 폐교 사례 발생

### □ 등록금 중심의 단조로운 재정 수입 구조에서 재원 다각화 모색 필요

- 산학협력단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수익 중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익이 85.3% 이상으로 산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 저조

▶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정 수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필요**

< 참고 :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022년, 고등교육 재정분석보고서) >  
(단위: 백만 원, %)

구분	등록금	국가보조금	교육 수입	교육 외 수입	기부금	전입금	기타	총계
수입	9,815,470 51.4%	3,490,089 18.3%	1,471,595 7.7%	364,325 1.9%	492,973 2.6%	1,499,912 7.8%	1,976,753 10.3%	19,111,118 -
구분	보수	학생경비	관리 운영비	연구비	입시관리	교육 외 비용	기타	총계
지출	7,900,642 41.3%	2,178,462 11.4%	443,754 2.3%	5,287,215 27.7%	151,048 0.8%	72,621 0.4%	3,077,274 16.1%	19,111,118 -

□ 높은 경직성 경비 비중 등으로 대학의 가용 자원 감소

- 인건비가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구조  
※ 대학 유형별 인건비 비중: 국공립대 49.5% > 사립대학 41.3% > 사립전문대 36.0%
- 국가장학금의 지속 확대로, 대학 교내 장학금\*의 확대를 위한 연구 학생경비\*\* 금액도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가용 자원 감소  
\* 사립대학 연구학생경비 현황: ('13) 5.2 → ('22) 5.8조 원(국가장학금 등 +0.6조 원)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부령) 제3조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함

□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 여건 미흡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로 대변되는 실험실습비, 기자재 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자산 및 부채지출은 감소 추세  
※ 최근 10년 사립대학의 자산 및 부채지출 비중은 15.9%('13) → 11.1%('22)로 감소
- 박사급 연구원의 54.2%(67,351명)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공공연구기관 등 보다 낮음  
\* 공공연구기관(297.6백만 원) > 기업체(201.7백만 원) > 대학(89.7백만 원)(KISTEP, '22)

□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혁신 노력 병행 필요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와 관련된 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한시성 등 대학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필요  
※ 학과 간, 학교 간, 지역 간 벽 허물기, 대학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및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 완화 필요

▶ 재정 낭비 요인의 과감한 제거와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로,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재정 모델 확산 필요

## Ⅳ.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 1 추진 체계도 및 재정지원 구조

#### □ 추진 체계도










## 2 3대 재정지원 전략

### 1) 재정지원 확대

중앙정부 재정 지원 	지자체 중심 재정 지원 	대학 자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li> <li>✓ 중앙정부 핵심사업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E 체계 본격 도입</li> <li>✓ 지자체 매칭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 등 통한 수입 확대 지원</li> <li>✓ 관련 규제 개선 검토</li> </ul>

####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자원 확대

- **(유효기간 연장)**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은 2025.12.31.까지

- **(목적 및 지원 범위 명확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세출 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

- 특히, 국세 교육세 일부를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 세출 범위 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역할 확대\* 도모

\*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연계,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성인 학습자 대상의 직업 전환 및 재교육 지원 등 생애 주기 전반의 교육기여 확대 유도 등

과제	현재	개선 방향(예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li> <li>✓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li> <li>✓ 대학의 지역사회 유초중등교육 연계 확대 지원</li> <li>✓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li> <li>✓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li> </ul>

- **(재원 확충)** 고등·평생교육 분야 정부 부처 재정지원 사업 발굴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추진 등 재원 다각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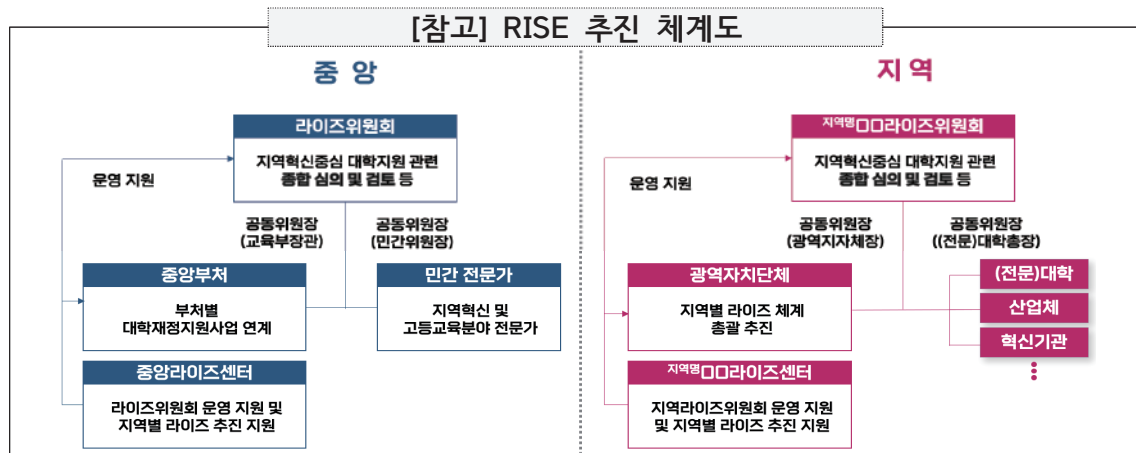
- 부처별 소관 분야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등 고등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지속 발굴

## ②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지원 확대

- **(기본 방향)**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구축

-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위임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실정을 고려한 지역 혁신·성장계획 수립

※ [4대 성과목표(안)] ①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③직업·평생교육 혁신, ④지역 현안 해결



- **(투자 확대)**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전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지방대 육성 등) 추진

\* 대학의 사회적 공헌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 유·초·중등 지원 등

- 2025년부터 국고 2조원 이상을 RISE 체계를 통해 대학 지원
- RISE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4년) 국고 1조 2,025억 원 → ('25년) 국고 2조 10억 원 + 지방비(4,000억 원+α)

- 지역발전을 위한 타 부처(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RISE와 연계(유형①정책메뉴판, ②예산 집행기관 통일, ③RISE 예산 통합)

- **(법적 근거 정비)**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법령상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규정

- 지자체의 선언적인 대학지원 근거 규정에서 탈피하여 지역맞춤형 대학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장의 대학에 대한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 근거,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권한 등 지자체 장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보완 등

### ③ 대학의 수입 구조 다각화

- **(재정 수입 다각화 지원)** 대학의 역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발굴·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우수 대학 벤치마킹을 통해 재정 혁신 고도화 사례 발굴 및 모델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확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참고] 해외 대학 재정건전성 확보 사례

- ✓ **(Harvard)** 대학 기금(펀드)을 관리하는 법인(HMC)을 구성하여 투자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투자 관리를 통해, 대학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 **(Stanford)** 창업지원 프로그램(StarX)을 통한 창업가 육성 및 기술 라이선스 수익(OTL) 등을 통한 대학 재정확보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연구소와 수요 기반 R&D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대학 역량 강화\* 지원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전체 대학까지 확대, 이공계졸업자의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 지정·운영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인재양성·R&D 및 기술사업화 등 분야별 연계·협력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지평 확대

※ RISE(교육부) 및 Uni-core(과기부) 연계 등을 통해 시·도별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 발굴 및 후속지원을 통해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로 기술이전 수익 등 확대 추진

\*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23년, 1,005억 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수익('22년, 370억 원)

- **(관련 규제 개선)** 대학의 재정 운용 책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대학 법인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검토

-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 범위 가액 상향 조정\* 등으로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 부여

\*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신고 처분 가액 규제 완화 (5억 → 20억 원 미만)

- 대학의 기부 수입 확대를 위해 개인의 소액 기부 소득세 공제, 운용수익을 수익용 자산 재투자시 법인세 면세 추진

-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성장을 위한 관련규제\* 완화 추진

\*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10% 이상)을 설립 시에만 충족하도록 변경(산학협력법 개정)

## 2) 전략적 배분 및 활용

구분	재정 지원 대상 질 관리	전략적 재정 배분	자율집행 통한 효율성 증진
일반 재정지원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경영위기 대학 제외	✓대학 자체 발전계획 수립	✓블록편당 방식 지원
특수목적 지원	✓재정지원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부서에서 결정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 사업별 기본계획 등 투자 전략 수립 ✓고등교육재정지원 위원회 조정 심의 ✓사업위원회 심의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별도 지침 등 규제 최소화
RISE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판단	✓지자체별 RISE 계획 수립 ✓지역라이즈위원회 조정 심의	✓대학 내 수주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집행 경직성 완화

### ① 재정지원 대상 질 관리

- **(기본 방향)**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통해 투자 가치가 있는 대학 대상 자율 혁신 통한 체질 개선 뒷받침
  - ※ 경영위기 대학과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은 일반재정지원 제외, 다만, 경영위기 대학 해제 및 기관평가인증 조건부 인증 이상 획득 시 다음 학년도부터 지원 가능
- **(재정진단 통한 구조개선)** 대학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유무 등의 정량지표로 재정건전성 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촉진
  - 대학 재정분석 기반으로 유형별 구조개선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
    - \*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한 경영자문 시나리오 제공 : △종합적 회생모델 △가치 산정 모델 △경영혁신 모델 △적정 규모화 모델 △소규모 특정목적대학 모델 △지역 특성화 대학 모델
  - 구조개선을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구조개선 추진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이행 촉진을 위한 회계·재산상 규제 특례 허용
- **(원활한 폐교·청산 지원)**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에 퇴로 유인책\*을 제공
  - \* (예)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등 퇴로 방안 마련

- 폐교 후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 지원\* 등을 체계화
  - \* 자산매각 관리, 임금 체불 등 채무변제, 청산절차 운영비 지원 및 청산협의체 운영 등
- 적기에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인 청산 유인책(인센티브 등) 마련 추가 검토
- **(사립대학 혁신 모델 창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혁신 선도 모델의 실제 구현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과를 확산
  - \* 대학이 지역 여건에 기반하여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시하고, 재정투자(Public Venture Capital)와 규제개혁으로 성과 창출 및 확산('26년까지 30개 지정, 교당 평균 천억 원)

**[참고] 글로컬대학 혁신 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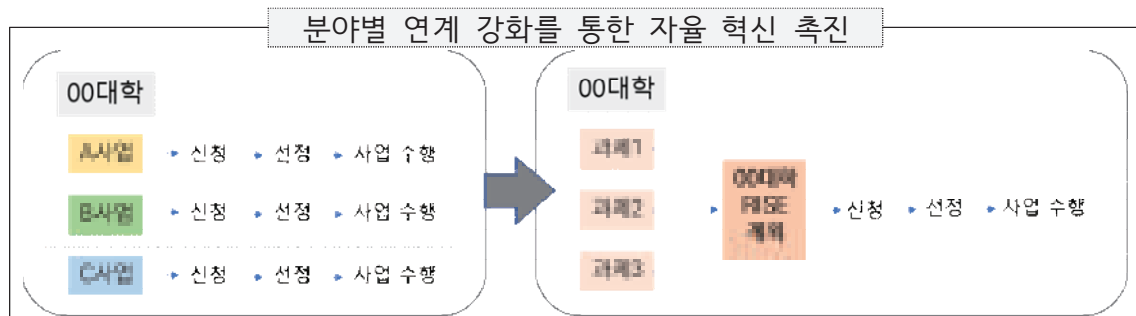
- ✓ (포항공대) 글로컬 지원금을 기반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대학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확립
- ✓ (동아대-동서대) 수익형 통합 산단 및 외부 전문 경영인 체계 도입
- ✓ (대구한의대) 해외 한의학 교육과정 수출 및 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 ② 재정 배분 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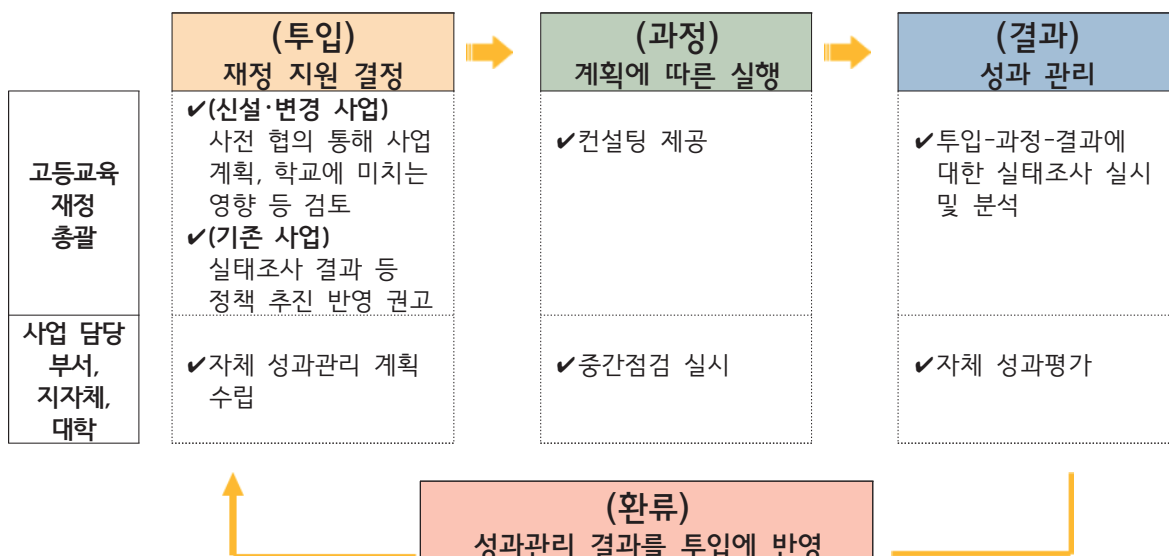
- **(총괄 관리 기능 강화) 범부처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 재정 배분 지원 체계 구축
  - \* 「고등교육법」 제7조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참고]
- 고등교육 재정전략 수립(기본계획, 연도별 지원계획), 재정지원 사업의 조정·협력 등 심의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전략 포럼\* 운영
  -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현장 안착, 제안 사항 청취 등 대학 재정 혁신을 위한 포럼 개최
- 고등교육 재정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 협의제도 활성화
  - \* (협의 사항)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신설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성과관리 계획 등
- **(지역 내 배분 역량 증진) RISE 사업의 경우 '라이즈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을 수립**
  - 지자체는 지역 RISE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라이즈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및 대학별 예산 배분 추진
  - 시도별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 RISE센터 역량 강화 지원 등 대학지원사업 운영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 ③ 대학 재정집행의 자율혁신 촉진

- **(집행 자율성 강화)** 대학 자체 여건 및 특성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 편당 방식으로 지원
  -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별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 현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한도 내,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경상비는 총액의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분야별 연계 강화)** 지역별 RISE 계획 기반으로 사업을 일괄 공모하고, 대학은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패키지로 신청·집행
  - 대학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들을 신청
  - 대학 내 수주 과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성과 극대화 유도
    - ※ 단위 과제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대학의 칸막이 없는 예산 사용 허용 검토



### 3) 성과관리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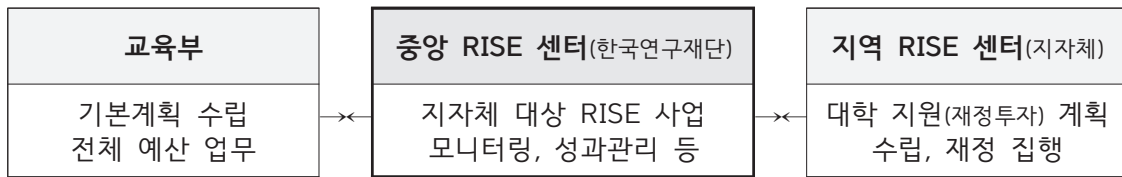
## ① 재정지원 성과 환류 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총괄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 분석, 사각지대 발굴 등 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
- **(실태조사 운영)** 지원 주체별, 사업 목표, 사업 방식, 성과 등 재정 지원에 대한 투입-과정-결과를 총체적으로 조사·분석
  - ※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 가능
- ‘통합 실태조사 매뉴얼’ 수립하고,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실시
- 중앙정부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에 전략적 재원 투자를 위해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심층 분석 실시
  - ※ (심층 분석 예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대학의 재정 자립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등
-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
- **(데이터 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현황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대학 일반 현황, 재정 여건(회계 세입, 세출 등), 재정지원 사업(사업 수,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등) 등 관련 통계 취합 및 분석 실시
  - ※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공시 및 통계 정보 등을 분절적으로 공시 → (개선) ‘지원센터’ 중심으로 관련 통계 재가공 및 성과 분석에 활용
- 고등교육 관련 주요 성과지표 통합 분석·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및 재정지원 사업 관련 이슈 모니터링 등 수행

## ② 지자체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 RISE 센터 중심으로 각 지역별 RISE 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수행





- **(성과관리 구조)**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 매년 단위 과제별,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환류
  -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진행 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 실시
- **(성과평가 결과 활용)** 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연차점검-중간-종합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설계·집행 및 예산지원 시 활용
  - 지역 주도의 자율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를 바탕 평가 추진
    - \* 지자체와 대학 간 공동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반영하여 지자체 책무성 제고
    - \*\* 핵심 성과지표는 필수 관리 지표로서 시도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지표

### ③ 대학 성과관리 역량 강화

- **(기본 방향)**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기본계획 및 부처별 성과계획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수행
  - **(통합 성과관리 지원)** 개별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등 대학의 자율적 성과관리 여건 개선
    - 대학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IR)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 ※ 조사 대학(138개) 중 성과관리 전담조직 운영 대학은 73.9%, 통합 성과관리 DB구축 55.0%, 전문연구원 확보 비율은 석사 24.8%, 박사 10.9%에 불과(‘23. 교육부)

#### [참고] 해외 대학 대학기관연구(IR) 사례

- ✓ **(Harvard, OIRA)** OIRA(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 Analytics)은 대학의 의사결정과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확산을 통해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대학의 전반적인 효과 향상 및 대외적 영향력 향상에 기여
- ✓ **(MIT, IR)** 부총장 산하 조직으로 1986년 기획부서의 일부로 시작돼 수년에 걸쳐 성장, 현재는 MIT의 지도부와 커뮤니티에 고품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학내 의사 결정에 영향

## V. 중점 재정지원 과제

### 1 대학의 자율혁신 역량 제고

#### ◆ 대학의 자율 혁신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 대학의 자율 혁신 고도화 지원

-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편당 방식의 재정지원 추진
- 교육 혁신 적극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발전 등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및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해 자체 발전계획 기반의 자율 혁신 뒷받침
- 대학구조개혁,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립대학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 평가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등 대학의 체질 개선 도모

##### □ 산·학·연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및 후발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실용화 및 후속 연구 지원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지역 특화산업 기술이전(BRIDGE 3.0)·사업화 촉진

## 2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지원

### ◆ 지역 대학과 지자체 중심 지역 혁신 체제 구축 중점 지원

####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선도모델 창출

-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RISE 중심 개편 추진
- 대학 간 자원을 집약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글로벌 대학 지원

#### □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확산

- 대학 간 통합·연합, 대학-연구기관 클러스터, 대학-산업체 간 Start-up Village 등 대학과 다양한 주체 간 벽 허물기 집중 지원
- 지역 대학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업-취업-정주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 추진

####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역할 확대

- 대학-교육청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
- 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학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고등학교-(전문)대학-산업체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선도 산업 기술인재 양성 지원

### 3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를 통해 국가혁신 선도

#### □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학술연구의 지속성 제고

- 연구장학금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의 기반이 되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안정적 학업·연구 환경 조성
- 대학원 학위과정 및 졸업 후에도 연구자로 지속 성장(펠로우십→경력개발→연구직 진입)할 수 있도록 중단없는 연구 활동 참여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한국형 Stipend)을 통해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의 일정 비율 이상 지원

#### □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 도약

-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내·외 연구소(연구자) 간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인문+이공' 등 학제 간 융합연구로 새로운 지식 창출 및 난제 해결
- '대학연구혁신 100' 등을 통해 인문·이공분야 대학연구소가 지역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다양한 대학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대학본부 중심 대학원 혁신지원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체제 강화
- 대학원 역량 향상을 위해 학문분야(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별 우수학과(BK21 교육연구단(팀))를 선정하여 연구장학금, 국제화 경비, 운영비 등 지원

## 4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 ◆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 양성 지원

### □ 인재양성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지원

- 첨단산업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지원
- 첨단분야 교육 역량 보유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첨단분야 핵심 인재 양성 집중 지원
- 대학 안팎의 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탄탄한 제도·인프라 마련

- 학사 운영 유연화, 학점인정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유연한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이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첨단 실험·실습기반 구축 등 인프라 개선 지원

### □ 취·창업 교육을 통한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대학창업펀드 확대 조성 등 창업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으로 대학 중심의 창업 교육생태계 활성화
- 대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연계 교육·장학금 지원 및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활성화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첨단분야 대학원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참여 유형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 활성화

## 5 평생·직업교육 역량 증진

- ◆ 학령인구 감소,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

### □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모듈화된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입학전형 및 학사 제도 운영 등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확산
- (전문)대학 내 관련 학과, 지역 내 교육수요, 구직수요 등을 반영하여 학점인정 과정, 비교과 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 디지털·AI 전환을 위한 성인의 역량 강화 지원

-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수준별 디지털 교육과정 제공(리터러시→기초역량→전문역량)
- 사이버대학의 접근성 및 원격교육 노하우를 활용한 온라인 성인 학습자 및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확대

### □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 인재 집중 양성 지원

- 지역 특화분야 맞춤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활성화
-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통해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체계적·장기적 양성 및 성장경로를 제시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과정) 내실화
-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학과 운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초·중급 전문인력 배출 지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6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입학-졸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 학비 부담 경감 및 분야별 인재 육성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 인문, 예체능, 이공계(과기부), 전문기술 등 각 분야별 우수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 및 학업 전념 여건 마련 지원

### □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 저금리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 및 ICL이자 면제 대상 확대하고, 대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 지원 확대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 장학금 신설 지원

### □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 강화와 대학혁신 흐름에 맞춘 종합적 대입전형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도모
-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 대상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성인의 우수한 고등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용 및 디지털 도약강좌 확대



<b>참고1</b>	<b>‘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b>
------------	------------------------------------

## □ 추진 배경

-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표 및 방향 수립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고등교육법 개정, '22.3.1.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5개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구성 추진

## □ 주요 기능 (고등교육법 제7조의2)

- 고등교육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전망, 재정지원 배분 방향, 재정 지원 성과 분석 및 관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심의·조정
  - 신설·변경의 근거, 세부 사업계획,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등
- 그 밖에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

## □ 구성·운영 계획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

- (구성) 위원장 1명(교육부 장관)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교육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 (위촉위원) 대학교협·전문대학교협 회장(당연직), 고등교육 및 재정 관련 유관기관,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청년, 여성 등 균형 배치
  - (임기 / 개최 주기) 2년(중임 가능)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안) 검토,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에 관한 심의(안) 논의 등 추진
- ※ (구성) 당연직 및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등 10명 내외

## 참고2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및 재정지원 사업 구조

### □ 고등교육기관 범위 (교육기본통계 기준)

-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
- '11년부터 특별법 및 타 부처 설립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 포함 (과학기술원,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

(단위: 개교)

법령	구분		'24년(B)
총 계			422
「고등교육법」	일반대학		183
	산업대학		2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30
	방송통신대학		1
	사이버대학	대학과정	18
		전문대학과정	2
	기술대학		1
	각종 학교	대학과정	2
		전문대학과정	-
	대학원	대학원대학	41
		대학부설 대학원	<1,179>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	전공대학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과정	1
		전문대학과정	1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과정	3
		전문대학과정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기능대학(폴리텍대학)		9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에너지공과대 등)		6
	대학원대학		3
	대학 부설 대학원		<12>
	전문대학(농수산대)		1

## □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

2018 개편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	------	------	------	------	------

▷ 대학 기본역량진단 선정 대학을 일반재정으로 지원 ▷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과제 자율 추진	▷ 특별회계 설치('23~)를 통한 재정 지원 확대 ▷ 대학이 지역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 운영
---	--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

2025 RISE 도입	2025~
-----------------	-------

▷ 일반재정/RISE/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23.3) 적용 시기 도래 ▷ 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RISE 도입
--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일반 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

특수목적 지원사업	LINC+		LINC 3.0	
		LiFE		LiFE 2.0
		RIS		
		마이스터대		
		HiVE		
		지방(전문)대 활성화		
		계약학과 등 8개 사업		
	BK21+	4단계 두뇌한국21		
		학술진흥		
			첨단분야 인재양성	
	K-MOOC 등			

대학-지역 협력 지원	
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정주형 인재양성</li> <li>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li> <li>직업·평생교육 혁신</li> <li>지역 현안 해결</li> </ul>

국가 차원 필요 분야 집중 지원	
특수목적 지원	학술연구 역량강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K-MOOC 등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 등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 지원 등

그 외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그 외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